

제337회 국회(정기회)
---------------

국    정    감    사
------------------

---

# 업 무 현 황

---

2015. 9. 14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I . 2015년도 주요 업무현황 .....	1
II . 2015년도 예산집행사항 .....	93
III . 2015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	95
IV . 2014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	124
V . 2015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191
VI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98
VII . 2015년도 민원처리사항 .....	201
VIII .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 개정 · 폐지 현황 .....	203
IX . 기타 사항 .....	208

## I . 2015년도 주요 업무현황



2015년 업무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성장

#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업을 만들겠습니다.

2015. 1.



금융위원회

## 목 차

I. 지난 2년간 금융정책 평가 .....	5
1.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 .....	6
2. 금융혁신 실천 .....	8
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9
4. 금융시스템 안정 .....	11
II. 2015년 금융정책 여건 및 방향 .....	16
1. 2015년 금융정책 여건 .....	17
가. 대외 리스크 요인 및 전망 .....	17
나. 대내 리스크 요인 및 전망 .....	19
2. 2015년 금융정책 방향 .....	26
III. 2015년 금융정책 세부 실천계획 .....	29
1. [핵심과제 1] 창조금융 성과확산 .....	30
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IT·금융융합 .....	31
② 실물지원을 위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	38
③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	45
2. [핵심과제 2] 금융시장 신뢰확립 .....	52
④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	53
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59
⑥ 금융부문 신뢰 제고 .....	64

3. [핵심과제 3] 금융안정 강화 .....	68
⑦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69
⑧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대응 .....	73
⑨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	77
 IV. 금융 규제개혁 현황과 성과 .....	 81
1.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 .....	82
2. 제1·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	87
3. 규제기요틴 조치현황 .....	88
4. 규제신문고 접수 및 조치현황 .....	89
5.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차질없는 개선 .....	90

## I. 지난 2년간 금융정책 평가

◆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토대로 창조금융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회복에 주력

- ①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월),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 등을 바탕으로 기술금융 등 실물 지원 기능 강화, 독자적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구축
- ② (금융혁신 실천) 보수적인 금융문화 혁신을 위한 은행 혁신성 평가, 제재 및 검사관행 개선, 행정지도 개선 등 추진
- ③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과 개인정보·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 ④ (금융시스템 안정) 가계부채 구조개선, 기업구조조정 추진, 자본시장조사단 신설 등 금융안정과 금융질서 기반 조성

# 1.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기반으로 금융규제 개혁,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등 창조금융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월)」,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을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 기반 마련

○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산업 발전의 중장기 로드맵 ‘금융비전’ 제시

○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법령·숨은 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

\* 약 3,100건의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1,700건을 검토→ 약 700건 규제를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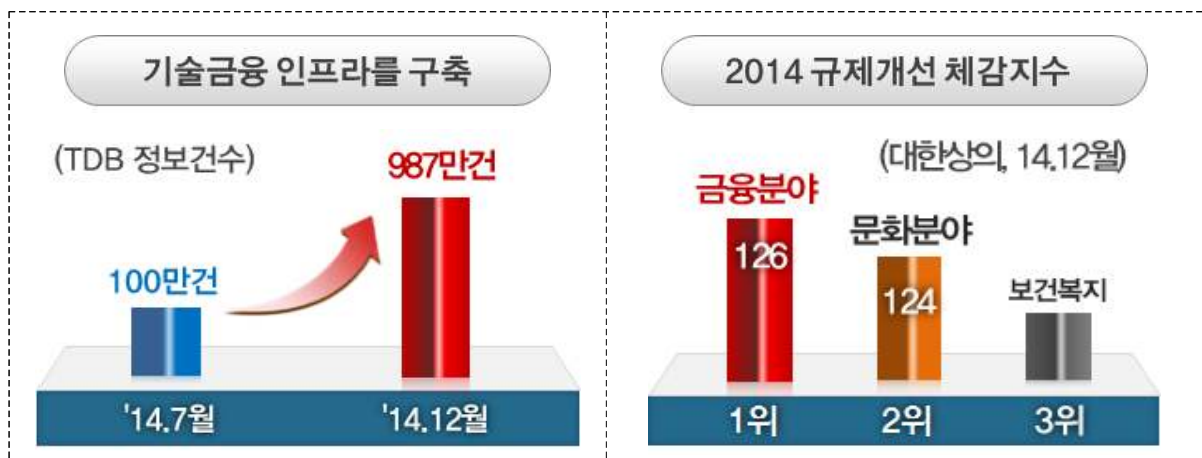
□ TDB\*, TCB 등 기술금융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술금융을 본격화

\* ‘14년말 255개 민·관 협약기관에서 987만건의 기술정보를 수집하여 23개 기관에 제공

○ 기술금융 도입(‘14.7월) 반년만에 8.9조원(14,413건)을 우수 기술 기업에 공급했으며 금리부담도 기존대비 0.4%p 경감

○ 기술금융박람회\*, 기술금융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 실시

\* ‘2014 창조경제 박람회’(11.27~11.30, 코엑스)에 기술금융 특별전시관을 설치·운영





□ 불합리한 연대보증 관행을 폐지하고 은행권의 꺾기 관행 근절

- 제2금융권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하여 연대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고 패자부활의 기회도 제공
-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 관행 근절방안(‘13.10월)」을 통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꺾기 관행을 근절

□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하여 창의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진취적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조성

- 기업성장 단계별 성장사다리펀드 2.6조원 조성, 중소·벤처전용 코넥스 개설(79개사 상장) 등 모험자본의 공급확대
- 코스닥의 독자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상장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코스닥 신규 상장건수 증가(‘12년 21건→’13년 37건→’14년 70건)
- 금투업 인가단위 간소화·절차 개선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장 자율 M&A 유도 등 증권업 구조조정을 적극 독려

□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14.7월·9월)」을 마련·추진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기여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14.5월)하고 사전인증 없이 ID·PW만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14.12월)
- 결제대행업체(PG)에 카드정보 저장방식 서비스를 허용(‘14.8월)하고, Active-X가 없는 결제환경 구축을 추진(‘15.3월 완료예정)

□ 정책금융기관들의 시장마찰 및 역할 중복을 해소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13.8월)」 추진

\* 산은-정금공 통합(‘14.12), 중장기수출금융·해외프로젝트 지원역량 확대 등

## 2. 금융혁신 실천

◆ 창조금융 성과의 현장확산을 위한 「창조금융 실천계획('14.8월)」을 마련하여 보수적 금융문화의 혁신을 위해 노력

□ 낮은 금융관행을 타파하고 금융현장에서 금융혁신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창조금융 실천계획('14.8월)」 추진

○ 창조금융의 성과체감을 위해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 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과제를 추진

□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혁신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14.9월 이후 5차례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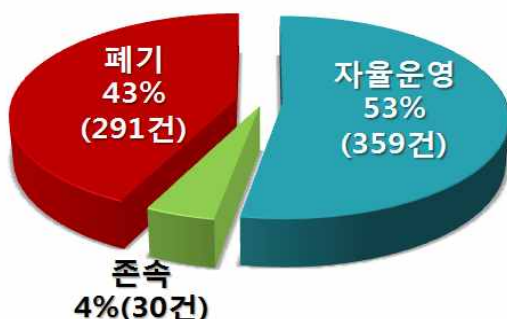
○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은행권의 자금중개 행태를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 혁신성 평가'를 도입('14.10월) · 시행('15.1월)

○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제재를 원칙 폐지('14.11월)하고 위규·절차상 하자 없는 부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근절

○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종합검사를 절반 이상으로 축소하고 부실여신 검사는 회사에 위임하는 등 사전예방식 감독을 정착

○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경로를 일원화하고 행정지도(680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적극적·투명한 금융행정 구현

행정지도(680건) 전면 재검토



관행적 종합검사 획기적 감소



### 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 확립

#### □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자활 지원

- ‘국민행복기금’ 출범(‘13.3월)·운영을 통해 자활의지를 가진 금융채무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과다채무부담 완화
  - \* 국민행복기금 규모 및 지원 내역(‘14.12월 기준) : (채무조정) 34.1만명 약정체결, (연체채무 매입·이관) 280.7만명, (전환대출) 5.9만명(6,760억원)
-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조건을 통일하고 복지·근로 등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연계지원(취업성공패키지 1,552건 연계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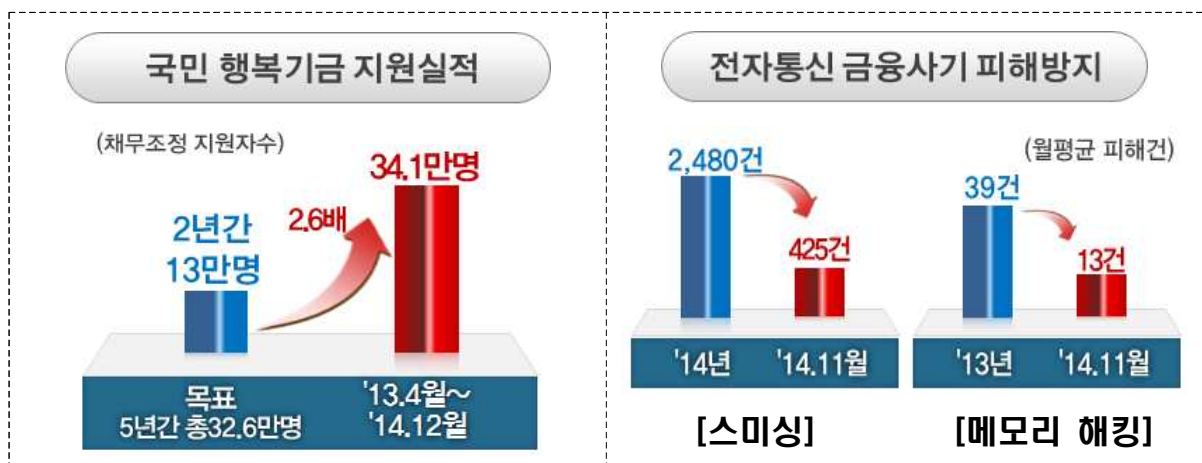
#### □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14.3월)」을 마련하여 정보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불편을 해소하고 정보유출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

- 정보처리 수단·단계별 보호 강화, 정보보호 요청권 신설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불법정보 수요 차단조치 등을 마련\*
  - \*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4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기준(5월), 대출모집인 내부통제방안(8월), 연락중지 청구(Do not call) 시스템(9월) 등
-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도입, 과태료·형벌 등 제재 상향으로 정보유출 억제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신용정보법 국회 정무위 통과(‘15.1.12일), 법사위 계류 중)

####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13.12월, ‘14.8·12월)」을 통해 금융회사의 피해예방노력을 강화하여 소비자피해 방지에 기여

- 피싱,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노력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대폭 축소\*
  - \* 월평균 피해(건) : 스미싱 (‘13) 2480 → (‘14.11) 425 / 메모리해킹 : (‘13) 39 → (‘14.11) 13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본인확인)를 모든 고객에게 전면시행하고 신입금계좌지정제(안심통장서비스) 도입

- 대부업자의 관리·감독 강화 및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를 통해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39% → 34.9%)하고 중개수수료 상한(5%) 설정
  -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강화(시도지사 → 금융위·금감원)하고 자본금 및 인·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등록요건 등을 정비 추진
-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확립
  -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신설('13.8월)하여 총 33건의 금융권 불합리한 관행 등을 집중 발굴·개선
  - 금융회사내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마련('14.12월)하여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 제시
- 맞춤형 금융소비자교육 기반 마련, 공적 금융상담 활성화, 100세 시대 노후준비 지원 등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도모
  -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13.9월)」을 마련하여 금융교육 추진체계 정비,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
  -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등 공적 금융상담 채널을 확충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채무관리 등 종합적 상담 추진
  - 사적연금 활성화, 新보험상품 출시 등으로 100세 시대에 따른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보장



## 4. 금융시스템 안정

◆ 금융시장의 잠재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안전한 금융투자환경 조성

### □ 가계부채 연착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응 강화('14.2월)

- 가계소득을 고려하여 부채의 총량을 적정 관리\*하는 한편,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유도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핵심지표로 설정('17년말까지 5%p 인하)

\*\* 고정금리대출 및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각각 40%까지 확대

- 금융권 자율 프리워크아웃을 지속(20.9만건, 18.7조원)하고 바뀐 드림론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약차주 부담 경감

\* 지원대상 고금리 대출 확대(20%→15%, '14.4월) 등으로 '14.1~11월중 총 2,591건 지원

### □ 기업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부실 사전관리 개선

-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 재무구조평가 방식 개선, 관리대상계열(약정채결 우려 계열) 신설 등 기업부실 사전방지 강화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하여 채권단 주도의 효율적 구조조정 추진 기반 조성
- 「회사채 정상화방안('13.7월)」을 마련하여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14.12월 2,172개사 3.8조원)

### □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투자여건 확립

- '자본시장조사단'을 신설('13.9월)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리기한을 단축(평균 223일 → 153일)하는 등 금융시장 공정성 제고
- 특정금전신탁·파생상품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규제차익 추구행위를 차단하여 시장 안정성 제고
- 금융실명법을 개정하여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악용하는 행위, 금융회사 임직원의 알선·중개 금지

□ 글로벌 기준에 맞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사전에 제고

- (은행·은행지주)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15년)에 맞춰 조건부자본 증권 도입 등 충분한 자기자본 적립을 선제적 유도
- (보험) 연결 RBC제도 등을 도입하여 재무건전성 제도를 선진화
- (증권) NCR제도 개선, 레버리지제도 도입 등 건전성 관리
- (저축은행\*·상호금융\*\*)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으며, 상호금융의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 '11년 이후 총 31개의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

\*\* 490개 중점관리조합을 선정하여 검사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정대출을 적발하여 조합원 보호조치를 조기 시행

□ 금융회사의 선제적 위험관리와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 준법감시인 지위·권한 제고, CEO참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발표('14.8월)
- 지배구조 본연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13.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월)





# 참 고

## 2013 ~ 2014년 주요 금융정책 ([www.fsc.go.kr](http://www.fsc.go.kr) 참조)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금융혁신 실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스템 안정
'13. 上	제2금융권 연대보증폐지(4월)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5월)	국민행복기금 추진(3월)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1월)
	은행, 보증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확대(5월)		금융교육 종합포털 개통(6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6월)
	성장사다리펀드 활용방안(5월)			
'13. 下	정책금융역할 재정립(8월)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9월)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9월)	회사채시장 정상화(7월)
	클라우드펀딩 도입 추진(9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12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9월)	금융전산 보안강화(7월)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12월)	증권사 M&A 촉진(12월)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대책(12월)	은행·은행지주 바젤Ⅲ자본규제(8월)
			100세 시대 금융역할 강화(12월)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9월)
			서민금융지원 기준 통일(12월)	기업부실 사전방지(11월)
				동양 유사사례 재발방지(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1월)			
'14. 上	공동점사 개선(1월)	소득공제장기펀드 · 하이일드펀드 출시계획(1월)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3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2월)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1월)	온라인채널의 변액보험 판매 (4월)		증권사 NCR 제도개선(4월)
	기업상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4월)			
'14. 下	금융규제 개혁방안(7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8월)			
	전자상거래결제 간편화·활성화(7월)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7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7월)	보험사기 근절(7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8월)
	금융혁신위원회 운영(9월~) ①제재관행 개선 ②적극금융행정 ③은행 혁신성평가 ④은행 내부관행 개선 ⑤행정지도 전면 재검토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12월)	지배구조 모범기준 (12월)
				금융실명제 개선(11월)
	IT·금융 융합협업체(11월)	자산운용사 NCR 제도 개선(11월)		상호금융 가계부채 대응방향(12월)

## □ (상반기) 현장 중심의 법령·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12차례 ‘금융현장 규제찾기’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약 150건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심의 TF\*’ 등을 통해 현장 규제 발굴

\* 22개 금융유관기관별로 외부전문가(피규제자 포함)가 과반수 참여하는 TF 운영(전체 155명 중 외부전문가 102명)

- 3,100여건의 규제를 목록화하고 1,700여건을 발굴·검토하여 700여건의 규제 개선 추진

## &lt; 상반기 현장방문 주요실적 &gt;

시기	내용	횟수
4월	①창업·벤처기업, ②장애인·학부모, ③은행 등 준법감시인	3회
5월	①국내 외국계 금융사 ②금발심위원·금융권 연구기관장, ③금융투자업, ④보험업법 ⑤부동산금융, ⑥여전·저축은행·신협, ⑦금융사 해외진출, ⑧중소·영세·수출입기업, ⑨PEF·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	9회

## □ (하반기) 창조금융의 성과를 빠르게, 현장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점검과 실천을 추진

- 금융혁신의 실천을 위해 금융위원장이 직접 기술금융, 모험자본, 규제개혁 등 주요 금융현장을 8월말부터 19차례 방문
- 현장에서 제안된 건의사항(31건) 중 대부분(29건)을 수용 또는 긍정검토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정상추진 19, 완료 2, 검토 8)

## &lt; 하반기 현장방문 주요실적 &gt;

시기	내용	횟수
8월-9월	기술금융, 서민금융 현장속으로, 모험자본 현장을 가다	3회
10월	IT 금융강국 선도에 힘을 모으다. 안전현장 점검, 저축의날 행사 등	3회
11월	관계형금융 현장속으로, 기술금융 박람회 등	5회
12월	창조경제 유망기업 자본시장 스타로, 기술금융현장, 핀테크 간담회 등	8회



## 참 고

## 금융소비자기획단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주요 실적

과제명	발표일자
① 보험회사 자문의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13.11.20
② 고령층 등 금융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13.11.20
③ 대출 가산금리 변동시 변동사유 안내 강화	'13.11.29
④ 은행의 일률적인 근저당권설정비율(120%) 관행 개선	'13.11.29
⑤ 보증인도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13.11.29
⑥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결제	'13.11.29
⑦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을 "단기 카드대출"로 변경	'13.11.29
⑧ 주소지 일괄변경 서비스 도입 확대	'13.11.29
⑨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 강화	'14. 1. 6
⑩ 소비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일 변경권 도입	'14. 1. 6
⑪ 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를 사전 안내	'14. 1. 6
⑫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	'14. 2. 7
⑬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 제공 강화	'14. 3.13
⑭ 저축은행, 신협이 대출 조건변경시 채무관계인 동의 의무화	'14. 3.13
⑮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등 발급	'14. 4.10
⑯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14. 4.10
⑰ 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활성화	'14. 4.18
⑱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체계 구축	'14. 4.18
⑲ 은행 전화 안내를 통한 가게 신용대출 연장	'14. 5. 1
⑳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사전 안내 실시	'14. 5. 1
㉑ 은행 마이너스통장대출시 이자납입 가능일 확대	'14. 6. 2
㉒ 인터넷뱅킹을 통한 개인 발행 자기앞수표 정보조회 등 서비스 제공	'14. 6. 2
㉓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서비스 장애발생시 처리개선	'14. 7. 2
㉔ 저축은행 텔레뱅킹으로 처리 가능한 금융서비스 확대 추진	'14. 7. 2
㉕ 저축은행의 고객 사망에 따른 예적금 해지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관행개선	'14. 7.18
㉖ 증권투자시 신용거래에 대한 계좌설정정보증금 폐지	'14. 8. 5
㉗ 저축은행의 연체 이후 이자 부분 납입시 이자납입일 연기(변경) 가능	'14. 8. 5
㉘ 미수동결계좌 최초 발생 증권사에서 SMS의무통보	'14. 9.18
㉙ 은행 당좌개설보증금을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	'14. 9.18
㉚ 신기보 보증부 대출시 만기책정 방법 개선	'14.12. 5
㉛ 예보 파산재단 관련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14.12. 5
㉜ 은행 제신고서상 소비자 책임 표현 개선	'14.12.18
㉝ 변액보험 증액시 사업비 공제 안내 강화	'14.12.18

## Ⅱ. 2015년 금융정책 여건 및 방향

1. 2015년 금융정책 여건
2. 2015년 금융정책 방향

## 1. 2015년 금융정책 여건

- ◆ 전반적인 국내외 실물부분 회복세가 기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변화로 국내 경제·금융부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기대감 속에, 美 금리인상, 급격한 유가변동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대내적으로 가계·기업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이 지연되고 금융산업 경영여건에 대한 하방위험이 지속될 전망
- ⇒ 금융시장 변동성, 민간부문 부채 수준, 금융산업 수익성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대응 추진

### 가 대외 리스크요인 및 전망

- '15년 세계경제는 당초 기대보다 경기 회복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
  - \* 세계 성장률 전망(IMF WEO): ('13년) 3.3% → ('14년) 3.3% → ('15년) 3.5%
  - '14년에는 유로존 디플레 우려, 日 소비세 인상 여파, 中 구조조정 지속 등 하방 리스크가 부각되며 예상보다 회복세가 둔화
    - \* '14년중 세계 성장률 전망 변화(IMF WEO): (4월) 3.6% → (10월) 3.3%
  - '15년에는 美의 견조한 성장세와 함께 ECB·BOJ 등 주요국의 추가적 정책대응 등으로 꾸준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개선 기대에도 지역별로 불균형적 회복세가 예상되는 등 국가별 경기하방 리스크는 상존
  - 유로존은 확장적 통화정책 노력에도 獨·佛 등 주요국 수출부진 등이 겹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가능성
    -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9월) 0.3% → (10월) 0.4% → (11월) 0.3% → (12월) △0.2%

- 중국은 부동산 위축 및 글로벌 수요 축소에 따른 수출 감소, 구조개혁 지속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

\* '15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전년비) : (OECD) 7.1%, (IMF) 7.1%

- 디플레 타개를 위한 日중앙은행의 적극적 양적완화 및 연기금 등의 투자확대로 엔화약세 흐름이 가속화·장기화될 가능성

\* BOJ 추가 양적완화('14.10월) : 본원통화(80조엔) 및 국채매입(80조엔) 확대

\* GPIF 자산운용계획변경('14.10월) : 국내주식(12→25%), 해외투자(23→40%) 확대

- 금융부문에서는 美 금리인상, EU·日의 공격적 통화정책, 급격한 유가변동 등이 글로벌 변동성 확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내년 상반기 美 금리인상 가시화시 달러강세 가속화 및 일부 취약한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유출 등 시장불안 촉발 가능성

\* '13.5월 Fed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이후 주요국 주가변동폭('13.5.22~6.25)  
: (선진국 MSCI)△7.4%, (신흥국 MSCI)△15.7%, (韓)△10.7%

- 또한, 최근 급격한 유가하락은 오일머니 위축, 일부 산유국 금융불안 등을 유발하여 글로벌 자금흐름에 불확실성 가중

\* 주요 산유국 해외투자 규모(억불) : ('06)5,000 → ('12)2,480 → ('13)600 → ('14)△76

\* 러시아 금융지표('15.1.21일, 13년말대비) : (주가)△45.79%, (환율)+100.40%, (CDS)+415bp

-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어, 위기 발생시 여타 취약 신흥국과 차별화될 전망

\* CDS프리미엄('15.1.21일, '13년말대비 bp) : 韓(2 ↓), 日(22 ↑), 中(17 ↑), 브라질(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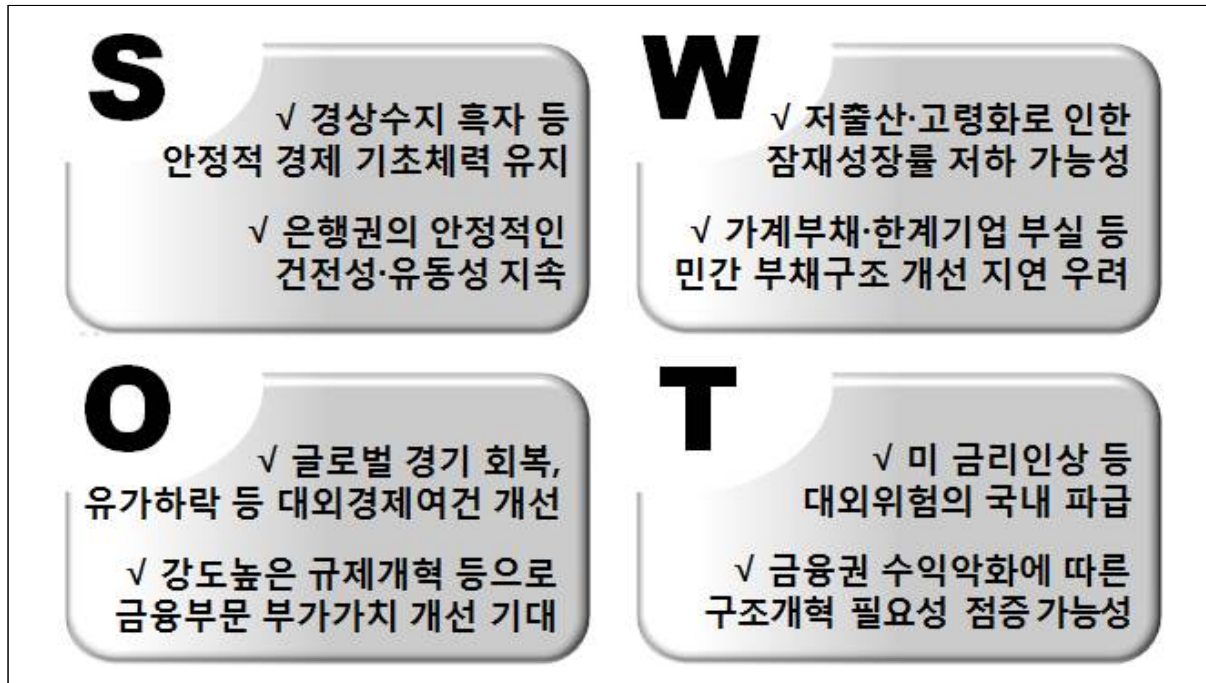
- 다만, 美·유로존·日 등 주요국의 엇갈린 통화정책 등 대외 경제·금융여건의 하방 위험은 상존

➡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대외충격시 발생가능한 위기 파급경로에 대한 점검 지속

## 나 대내 리스크요인 및 전망

- 금융산업은 저축은행 구조조정('11년) 이후 건전성 측면의 큰 문제는 없으나,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에 직면
  - (은행) 저금리 기조로 이자마진 감소, 부실기업 대손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 기반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
    - \* NIM(명목순이자마진) 추이(조원): ('11)2.30 → ('12)2.10 → ('13)1.87 → ('14.3Q)1.81
  - (보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역마진 가능성 등 경영효율화 필요성에 직면
    - \* '14년중 점포수(7,300개, 9말기준): 353개 감소(△4.6%), 임직원수 2,470명 감소(△3.9%)
  - (금융투자) 시장 전반의 활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수수료 중심의 취약한 수익구조 등으로 구조조정 압력 가중
    - \* 자산운용사 ROA(총자산수익률) 추이: ('10)11.4% → ('12)8.5% → ('14.3Q)8.0%
  -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성장둔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여건 악화 우려
- 금융시장은 수년간 내부요인에 기인한 충격에 특별히 노출되지 않은 가운데, 민간부문 부채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현재 즉각적인 가계부채 관련 위기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
  - 기업부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기업자금시장 양극화 등이 심화될 우려
    - \* 이자보상비율 1미만 기업 비중: ('09) 30.5% → ('11) 33.9% → ('13) 38.8%

➡ 내수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하는 동시에 규제합리화 등 금융 부문 구조개혁 노력을 병행 추진



□ 대내외여건 측면에서 강점(Strength) 및 약점(Weakness) 요인

- (강점)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한 가운데, 은행권 건전성·유동성이 안정적 수준을 지속 유지
- (약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가계·기업부문 부채구조 개선 지연 우려

□ 대내외여건 측면에서 기회(Opportunity) 및 위협(Threat) 요인

- (기회)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 기대, 유가하락, 달러대비 원화 약세 등으로 대외여건 개선 기대
  - 대내외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응한 강도 높은 규제 합리화 조치로 금융산업의 효율성·생산성이 제고될 가능성
- (위협) 美 금리 인상, EU·日 경기 둔화 우려, 급격한 유가 변화 등 대외 위험요인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파급·전이될 우려
  - 금융권 수익악화에 따른 구조개혁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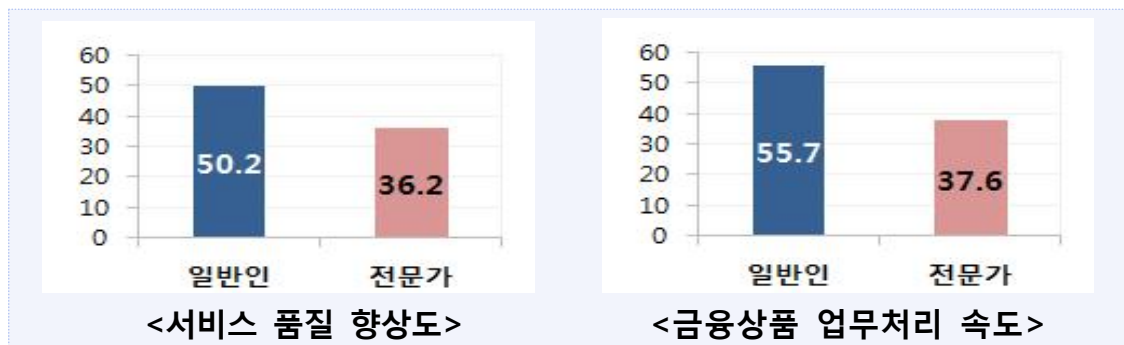
◆ '15년도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해 일반국민(1,011명) 및 전문가 집단(1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갤럽, '14.12월)

## 1. 전반적인 금융부문에 대한 인식 (일반인·전문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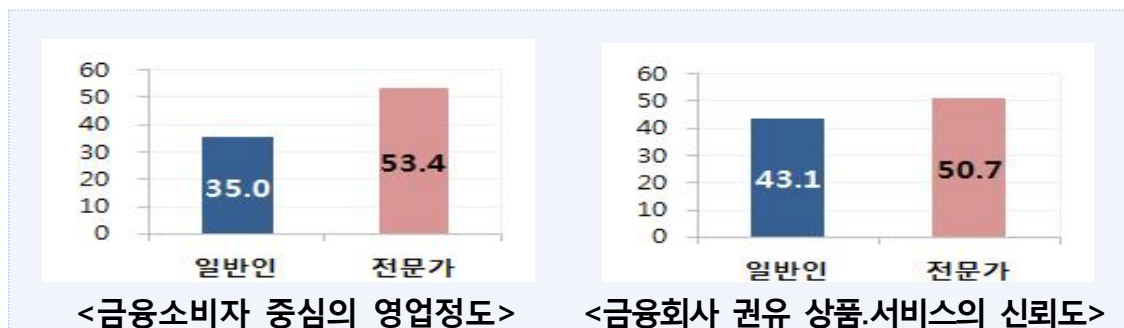
□ (개요) 금융부문의 경쟁력 및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인식수준 확인을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 양측을 비교하여 만족도 조사

□ (조사결과) 전문가는 일반인보다 금융부문 경쟁력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국민은 전문가보다 금융서비스 신뢰도 및 정부의 대처능력에 대해 여전히 낮게 평가

① (경쟁력) 일반인은 전문가에 비해 금융서비스의 품질 향상도, 업무처리 속도 등 금융상품·서비스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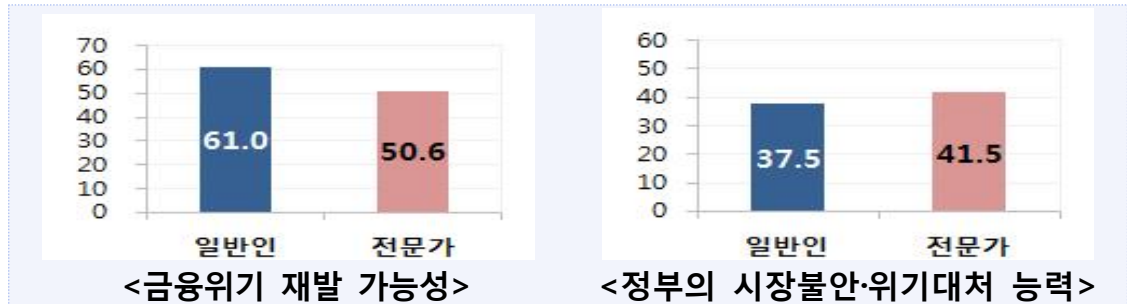
② (신뢰도) 소비자 중심 영업, 금융회사 권유상품의 신뢰도 등 소비자보호 및 신뢰도 측면은 일반인보다 전문가가 높게 평가





③ (안전성) 일반인 및 전문가 모두 금융위기 재발가능성 등 시장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가운데,

- 특히, 일반인이 전문가 대비 위기발생에 대한 불안 및 정부의 대처능력에 대한 우려가 컸음



□ (시사점) 금융부문의 신뢰도, 안정성, 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시급

- 정부와 업계 모두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필요
- 금융안정 및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노력 강화 필요

## 2. '14년도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전문가 대상)

□ (개요) '14년에 실시한 16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전문가 대상 심층 평가(서베이)를 실시

□ (평가결과) 16개 과제의 종합점수는 65.9점(100점 만점)으로 대부분 과제가 60점과 70점 사이 ⇒ 평가 점수는 중·상 수준

- 정부 노력(72.7점)에 비해 실질적 성과(60.2점), 체감만족도(61.8점)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금융규제개혁과 금융문화 개선은 인지도(각각 77.9, 81.5점) 및 정책노력(75.8, 75.3점)에 대한 평가는 좋았으나, 실질적 성과(57.8, 55.6점) 및 체감만족도(62.4, 59.9점) 등에서 낮게 평가



- 항목별로 개인정보 보호,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등은 높은 평가를 받는데 반해,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금융과 IT 융합 등에 대한 평가는 다소 저조

**< 주요 정책별 만족도 평가결과 >**

과제명	인지도	의견수렴	정부노력	변화대응	실질적성과	체감만족도
전체	78.2	63.8	72.7	63.5	60.2	61.8
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	92.8	65.5	78.8	66.2	64.9	65.1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74.5	70.5	74.7	67.9	65.4	66.7
성장사다리펀드 조성·집행 활성화	77.8	66.7	74.7	63.0	64.8	68.5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	89.0	66.7	78.7	64.0	58.7	61.3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84.3	69.8	77.2	67.3	61.7	58.0
공시규제 합리화	68.5	64.8	69.1	65.4	66.7	67.9
금융 규제개혁	77.9	59.8	75.8	62.4	57.8	62.4
금융소비자 보호	81.8	64.1	70.9	62.8	57.1	60.2
글로벌 수준의 카드 간편결제 활성화	72.4	63.5	70.9	63.9	59.6	63.0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	81.5	61.1	75.3	63.0	55.6	59.9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78.0	63.8	69.7	62.3	60.1	60.7
금융과 IT의 융합	75.0	64.6	69.7	62.6	58.8	59.5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내실화	77.0	60.0	72.0	65.3	57.3	56.0
보험대출 금리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개선	66.7	62.8	70.1	62.5	58.7	59.7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자발적 노후준비 지원	73.0	59.9	70.1	61.2	56.1	58.2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75.0	55.1	67.9	56.4	57.1	56.4

□ (시사점)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체감도 높고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 필요

- 특히, 보수적 금융문화는 한번의 대책만으로 부족하며 실제 행태 변화가 나올 때까지 지속 추진
- 또한, 금융규제개혁도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현장의 체감도를 제고
- 금융이 IT와 융합하는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조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3. '15년도 추진과제 (전문가 대상 심층 서베이)

#### □ 주요 위험요인

- (대외) 중국 경착륙 → 엔저지속 → 미국 금리인상 順으로 응답
- (대내) 가계부채 → 디플레이션 → 한계기업 부실확대 順 응답

#### □ 중점 추진과제

-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안정 → 금융규제 추가 개혁 → 금융·IT 융합 順으로 응답
- 금융업권 정책고객(금융사·협회 등)은 금융규제 추가 개혁을, 非 금융업권 정책고객은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금융·IT 융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

순위	중점 추진과제	응답률(%)	금융업권	비금융업권
1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금융안정	46.9	44.2	49.5
2	금융규제 추가 개혁	41.3	59.3	24.7
3	금융·IT 융합	25.7	23.3	28.0
4	금융부문 신뢰 회복	25.1	23.3	26.9
5	금융소비자 보호	18.4	10.5	25.8

#### □ 주요 분야별 세부 정책제언

- ① (경쟁력 강화) 금융감독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및 금융회사 스스로가 변화할 유인을 제고할 필요
- ② (신뢰 확보) 금융감독의 일관성 확보 및 금융윤리 의식제고, 금융회사내 보수적 문화·관행 개선이 시급
- ③ (가계부채 관리)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한 대출관행 정립, 가계 소득 증대 대책 마련이 중요
- ④ (소비자보호) 금융회사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사고 근절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필요성을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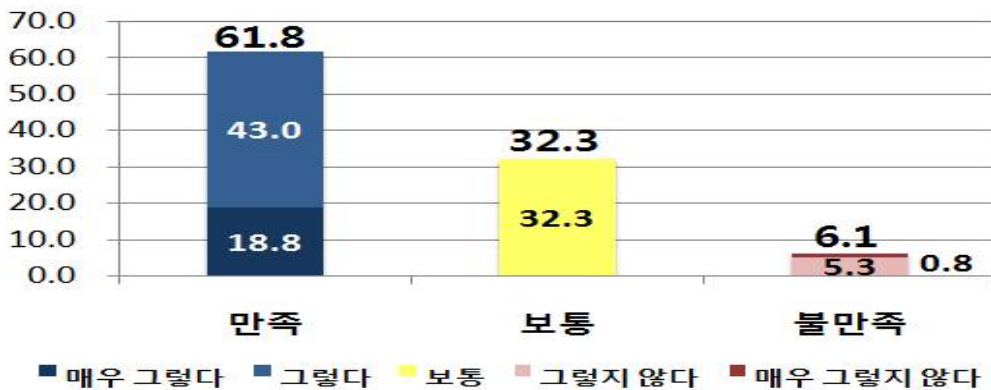
## 참 고

## 2014년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서베이 결과

◆ 기술금융 정책효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중소기업 임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 (한국리서치, '14.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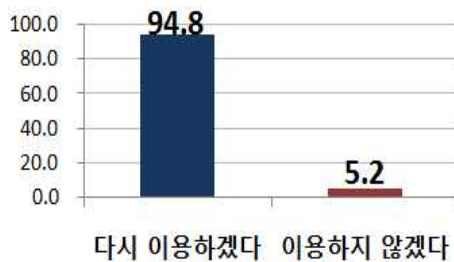
- (정책만족도)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61.8%)이 기술금융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6.1%)을 크게 압도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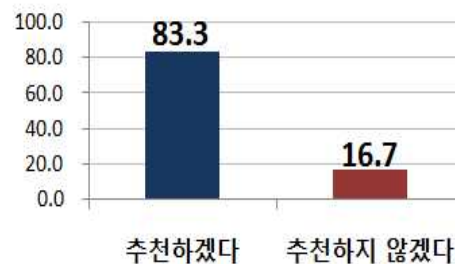


- (지속가능성) 응답자 대부분이 기술금융을 다시 이용하길 희망하고 주위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지속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향후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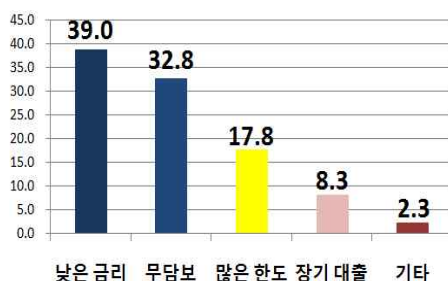


주위 추천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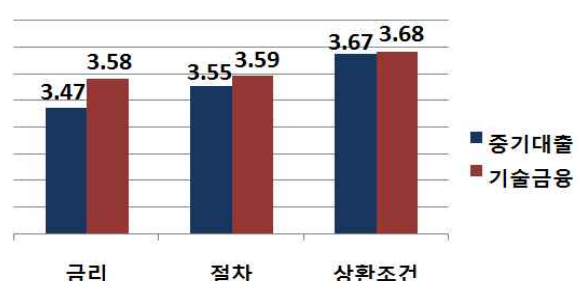


- (정책효과) 금리 인하 및 담보부담 해소를 가장 기대하였으며 실제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 금리 및 절차에 대한 만족이 높음

기대 사항



중기대출 대비 만족도 (5점 만점)



## 2. 2015년 금융정책 방향

- ◇ 창조금융과 금융혁신을 위해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전력
  - 금융혁신과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을 쇄신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역동적 금융생태계 정착
  -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금융산업 도약을 위한 금융신뢰를 확립
  -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 점검과 관리강화 등 위기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 ⇒ 분야별로 3대 핵심과제 및 9개 실천계획을 현장 중심, 부처 협업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 【 핵심과제 1. 창조금융 성과확산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

- 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IT와 금융융합 추진
- ②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등 자금중개기능 강화
- ③ 금융개혁 지속 추진으로 금융부문 혁신과 경쟁력 강화

### 【 핵심과제 2.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립하여

**금융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겠습니다. 】**

- ④ 취약계층 금융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
- ⑤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⑥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권 윤리규범 정립 등 신뢰 제고

### 【 핵심과제 3. 금융안정을 확고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 ⑦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및 안정적 관리
- ⑧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 ⑨ 대내외 리스크요인 대응 등 금융안정성 제고

## 〈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

지향 가치	창조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핵심 및 실천 과제	<b>창조금융 성과확산</b> <div> <b>① IT · 금융융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li> <li>•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li> <li>•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li> </ul> </div> <div> <b>② 실물지원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험자본시장 활성화</li> <li>• 기술금융 3.0으로의 도약</li> <li>• 정책금융 지원 확대</li> </ul> </div> <div> <b>③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개혁 추진</li> <li>•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li> <li>•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li> </ul> </div>	<b>금융시장 신뢰확립</b> <div> <b>④ 서민 ·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li> <li>• 취약계층 금융환경 개선</li> <li>• 고령화 대비 금융지원 강화</li> </ul> </div> <div> <b>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강화</li> <li>•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li> <li>• 금융보안 강화</li> </ul> </div> <div> <b>⑥ 금융부문 신뢰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권 신뢰회복 환경조성</li> <li>• 시장 · 거래제도 투명성 확보</li> <li>• 금융감독 선진화</li> </ul> </div>	<b>금융안정 강화</b> <div> <b>⑦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부채 구조개선</li> <li>• 취약부문 집중관리</li> <li>•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li> </ul> </div> <div> <b>⑧ 상시적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촉진</li> <li>• 시장 친화적 재무구조개선 지원</li> <li>• 취약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li> </ul> </div> <div> <b>⑨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 위험요인 대응</li> <li>• 국내 위험요인 대응</li> <li>• 글로벌 정합성 제고</li> </ul> </div>

현장 중심 실천과 점검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업을 만들겠습니다.**

## 참 고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체계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5년 업무계획	비전
<p><b>역동적인 혁신경제</b></p> <p><b>미래대비 투자</b></p> <p><b>창조경제 구현</b></p> <p><b>해외진출 촉진</b></p>	<p><b>[핵심과제1 : 창조금융 성과확산]</b> 창조금융 성과확산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p> <p>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IT·금융융합</p> <p>②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등 자금중개기능 강화</p> <p>③ 금융개혁으로 금융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p> <p>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p>	<p><b>창조경제를 선도하고</b></p> <p><b>경쟁력있는 금융업을 만들겠습니다.</b></p>
<p><b>기초가 튼튼한 경제</b></p> <p><b>사회안전망확충</b></p> <p><b>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b></p>	<p><b>[핵심과제2 : 금융시장 신뢰확립]</b>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립하여 금융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겠습니다.</p> <p>④ 취약계층 금융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p> <p>⑤ 금융소비자 보호강화</p> <p>⑥ 금융부문의 신뢰제고</p>	
<p><b>내수·수출 균형경제</b></p> <p><b>투자여건 확충</b></p> <p><b>내수(소비) 기반 확대</b></p>	<p><b>[핵심과제3 : 금융안정 강화]</b> 금융안정을 확고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p> <p>⑦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및 안정적 관리</p> <p>⑧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대응</p> <p>⑨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p>	

### Ⅲ. 2015년 금융정책 세부 실천계획

1. [핵심과제 1] 창조금융 성과확산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2. [핵심과제 2]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립하여  
금융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겠습니다.
3. [핵심과제 3] 금융안정을 확고히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1. 창조금융 성과확산

창조금융의 성과를 확산하여 창조경제를 선도하겠습니다.

## 〈 기본 방향 〉

- ◆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을 쇄신하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역동적 금융생태계를 정착
- IT와 금융의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 모험자본 육성, 기술금융 현장확산,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금융이 창조경제를 선제적으로 지원
- 혁신을 촉진하는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역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추진

### ■ [실천계획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IT와 금융융합

- 가.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 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 다.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 ■ [실천계획②] 실물지원을 위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 가.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 나. 기술금융 3.0으로의 도약
- 다. 정책금융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지원 강화

### ■ [실천계획③]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 가.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 나. 금융환경 변화 대비 대응역량 강화
- 다.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 가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사는 신규 서비스 개발, 자체적 보안능력 강화에 소극적

⇒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되, 사후적 책임은 강화

① (사전규제 최소화) 금융당국이 서비스 보안수준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태도를 버리고 '사후적' 관리 강화에 역량을 집중

○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금융사 부담을 완화하고 적시성있는 서비스 출시 도모

< IT부문 신규사업 추진시 단계별 보안대책 의무 >

단 계	사업계획		사업추진	사업완료	운 영
대 책	자체 보안대책 수립·보안성 심의	보안성 심의		취약점 분석평가	정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점검
수 행	금융회사	금융위·금감원		금융회사	금융회사

-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테마 검사 실시 등 사후적 검사 강화를 병행

○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인증수단에 대한 사전 규제로 작용해왔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

○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시설·정보기술·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규제를 개선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②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IT 신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기술장벽 철폐
- 공인인증서 등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을 일괄 폐지하고 기술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
  - '14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PG사에 이어, '15년에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ActiveX 제거
- ③ (책임부담 명확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비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부담을 명확히 하여 핀테크사업 제휴 활성화에 기여
- 금융회사 등만을 금융서비스 책임자로 한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다수기관 공동 서비스의 책임분담을 명확화
    -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사고의 책임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소비자 책임 부담에 있어서도 금융사고 이행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책임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함
    - 현행 1~2억원에 불과한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사고발생건수, 지급거래 처리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증액
- ④ (규제 예측성 강화) 소극적·방어적인 규제 적용이 아닌 적극적인 규제 해석 등을 통해 핀테크 사업자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
-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미비사항을 적극 보완하고 적극적 법해석을 통하여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 확보
    - 전자금융분야 규제에 대한 유권해석 및 주요 민원답변 등을 담은 설명서 또는 FAQ를 제작·배포
  - 현행 법률상 관련 규율의 범위가 불분명한 등 법적 불안전성이 있는 서비스·상품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의 활발한 활용 유도
  - '14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된 'IT·금융융합협의회'를 '15년중에도 운영하여 핀테크 관련 사업자·금융회사·당국간 소통 강화

## 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금융모델에 대한 제도의 포용성이 낮음

⇒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한 금융제도를 온·오프라인 융합 거래 및 온라인·모바일 거래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

①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고 기본방안 마련

- 실명확인 방법을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확대
-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필요성 및 보완방안 강구

②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클라우드 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노력과 함께 클라우드 펀딩 제도 안착 방안 마련

\* 현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발의)이 국회 계류 중

- 하위법령 정비 및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 등 클라우드 펀딩 제도 안착 조치를 신속히 완료
- 클라우드 펀딩 투자에 정책펀드 또는 민간 벤처캐피탈의 참여 유도

③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금융의 옴니(Omni) 채널 트렌드에 대응

- 펀드 슈퍼마켓('13.9월)에 이어 보험슈퍼마켓 도입
- IFA·IWA\*와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

\*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금융상품자문업

\*\* IWA(Individual Wealth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④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금융산업 지원

○ 금융당국·금융권 공동으로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대해 검토

-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14.12.23 발표)의 금융권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 비식별화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新금융상품 개발과 부가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통합 집중기관이 출범할 경우 동 기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추진

○ 금융거래(결제·여신·자산운용 기록 등) 정보의 분석·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결제 정보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호 업종·지역 등 소비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

- \* 카드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既개정('13.9월), 여신협회의 여신금융연구소('15.1월 신설)를 통해 빅데이터 관련 연구 강화

⑤ (결제부문 낡은 규제정비) O2O\* 거래, 모바일 서비스 등 新 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한 규제'를 정비

- \* O2O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Online ↔ Offline)

예) 배달앱으로 구매 → 오프라인 배송

매장방문 → 사용자인식 → 쿠폰 제공 → 구매

○ 카드번호 입력과 사전인증(SMS, ARS 등)을 거치지 않는 '간편 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결제간편화를 차질없이 시행

○ 실물카드(母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의 단독발급 허용(6월), 매 체분리원칙 폐지(1월) 등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

## 다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 핀테크 기업은 낮은 금융규제 환경, 높은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결제시장 진입 및 활동에 애로를 호소

⇒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등 관계기관의 제도적·행정적·재무적 지원을 집중하여 핀테크 산업을 新성장 산업으로 육성

### ①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IT·금융 융합을 위한 선진국형 지원 체계를 구축

○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이 협력하여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관계부처 협조)

- 핀테크 서비스 단계별로 행정·법률 상담, 규제해설, 자금지원, 금융사 연계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도모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효과 극대화

○ 보안·인증분야 핀테크 단위기술의 보안수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민간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 금융보안원 등 민간기구가 보안·인증기술의 안전성 수준을 평가토록 하여 금융회사들의 검증 비용 감축, 핀테크 기업의 기술 신뢰성 획득을 도모

### ②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벤처캐피탈,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도모

○ 벤처캐피탈의 핀테크 기업 투자제한 완화 추진(중기청 협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핀테크 기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벤처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

○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핀테크 기업 지원규모 확대

- 산은·기은의 대출·투자 등 2천억원, 신보·기보의 보증지원 등 다각적 형태로 '15년 중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적극 추진

③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등 진입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핀테크 산업 활성화 촉진

- 해외사례에 비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는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큰 폭 완화

\* 현행 자본금 기준 : (선·직불) 20억원 (PG·결제대금예치) 10억원

-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및 금융시스템 혼란 우려가 비교적 적은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은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 신설

\* 대폭 완화된 등록요건(자본금 최대 1억, 전산인력 확보 기준 하향 등)을 적용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영업만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겸영을 허용

④ (전자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전자지급수단 발행·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한도규율 방식을 전환하여 소비자 활용도 증대

- 기명식 지급수단은 현행 발행권면한도 규제를 1일 및 1월 이용 한도 규제로 전환

- 직불수단은 비대면 수단의 경우에도 1일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⑤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전자금융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을 전면 재정비하여 서비스 실질에 맞는 업종규율로 개선

-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하여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

-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서비스 실질에 맞는 업종 등록·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과 다른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겸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회사 특성에 맞는 건전성 기준 마련 등 합리적 규제

## 실천계획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IT·금융융합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사전규제 최소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규제최소화 지속추진	규제최소화 지속추진
기술중립성 원칙구현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책임부담 명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규제예측성 강화	규제예측성 강화 지속 추진	규제예측성 강화 지속 추진	규제예측성 강화 지속 추진	규제예측성 강화 지속 추진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마련	관련 법안 개정 추진		
금융상품 판매채널 혁신	온라인 기반 자산운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판매채널 혁신 지속 추진	판매채널 혁신 지속 추진	판매채널 혁신 지속 추진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자본시장법 국회통과 노력 지속	자본시장법 통과시 클라우드 펀딩 하위규정 마련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도입방안 마련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도입방안 마련		
결제분야 낡은규제 정비	모바일 카드 단독발급 허용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핀테크 지원센터 출범·운영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벤처캐피탈의 투자방안 마련	정책금융기관 활용방안 마련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정비방안 마련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법령 정비 실무 TF 구성·운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 가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 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험투자 활성화

### 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창조적·혁신적 창업에 대한 과감한 자본투자를 통해 역동적 창업기반 마련

○ 성장사다리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가칭, 최대 6,000억원) 조성

- \* ①성장사다리펀드-대기업 매칭 “창조경제 혁신펀드” 총 5,100억원
- ②“지자체-대기업 등 매칭펀드” 최대 900억원 (중기청)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 펀드 등 창조금융과의 유기적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 지원

- \* 전북('14.11.24), 경북('14.12.17) 혁신센터와 사다리펀드 간 협력펀드 조성 MOU 체결, 다른 15개 지역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MOU 추진

○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창업→성장→회수」 등 기업성장 단계별 펀드 집행액\*을 확대

- \* 조성목표: ('14)2.6조→('15)4.5조, 집행목표: ('14)0.5조→('15)1.3조

○ 벤처투자의 위험만을 분리하여 사고파는 V-CDS\* 상품을 개발하여 투자위험에 보수적인 투자자의 벤처투자를 유도

- \* V-CDS(V-Credit Default Swap):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CDS 보장매입자에서 CDS 보장매도자에게 이전하는 기존 신용파생상품(CDS)을 벤처기업 투자에 적용한 것으로 벤처투자 위험을 분리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상품

○ 클라우드 펀딩 법제화 및 후속 제도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정책펀드 등과 연계한 초기 시장조성도 적극 추진



② (벤처기업 성장촉진) 보수적 운용의 틀에 갇힌 시중자금이 모험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사모펀드 등 활성화

- 사모펀드 활성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지원하여 사모펀드 활성화 기반 조성
- 자본시장법 개정 후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모펀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 \* 예) 사모펀드내 운용자격 단일화 등 사모펀드간 칸막이 제거, 사모펀드의 주목적 투자 규제 폐지 등

③ (모험자본 회수구조 강화) 모험자본 생태계의 병목지점인 회수 기능을 강화하여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대우증권' 매각 추진, 신용공여\* 및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형 증권사 출현 기반 마련

\* 일반신용공여 및 기업신용공여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 외화신용공여 허용, 외화차입 신고요건 완화 등

- 중소기업 기업금융(IB)에 특화된 '중기 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기 M&A 지원 전문펀드(3년간 1조원) 조성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상장시 질적심사를 간소화하고 코스닥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코스피 수준으로 개선

\* 대용증권 사정비율 산정 기준, 회계사 징계수준에 따른 회계감사업무 제한 등

-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예탁금 규제 재검토 및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방안\* 마련 등 코넥스시장 수요기반 확충

\* 코넥스 투자비율에 따라 하이일드펀드에 공모주 차등배정 등

- 성장사다리펀드내 세컨더리펀드 조성(1,400억원), 정책성 펀드 구주(舊株)인수 유도 등 정책자금을 통한 회수자금을 확충

- K-OTC 거래종목 외의 비상장법인 주식거래를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모든 주식을 거래하는 「2부시장」 개설

\* 벤처·중소기업 등 비상장법인 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

- 벤처펀드 등 투자조합(LP) 지분 거래 활성화 방안도 마련

④ (재도전 환경 구축) 혁신적 창업자가 중도에 실패하더라도 그간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마련

- 창업시점 제한 폐지\*, 가산보증료 감면\*\* 등을 통해 우수기술 창업 기업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15.1.2. 시행)

\* (기존) '14.2월 이후 창업자에 한해 연대보증 면제 → (개선) '12.1월 이후

\*\* A등급 이상 기업 → 가산보증료 전면 폐지, BBB 등급 이하 → 50bp 인하

-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기업중 신·기보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를 확대 적용('15.3월 시행)

\* AA등급 이상은 자동으로 보증을 면제하고 A등급 이하는 기술성·사업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 선별 (보증 공급액의 약 20% 수준 추진)

-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활성화하고 주요 채권자인 지신보의 재창업지원위원회 참여를 지속 독려

- 신·기보 등의 재창업 지원을 받는 경우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 등의 불이익 폐지

- 중진공 및 신기보 등을 통한 재창업자금 공급 규모 확대  
(향후 5년간 최대 1.5조원)

\* 중진공 등 재창업지원 융자 최대 1조원, 신·기보 재기지원 보증 최대 0.5조원

- 성장사다리펀드내 재기지원 펀드 등을 통해 재도전 의지가 있는 기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성장사다리펀드 : (기존) 1,130억원 → (확대) 2,530억원

## 나 기술금융 3.0으로의 도약

- ◆ 혁신성 평가, 인센티브 부여,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술금융을 전 금융권의 영속적인 업무로 정착
- ◆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 특허관리회사(NPE) 육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의 중심축을 융자에서 투자로 이동
-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존 설치 등 현장에 가까운 투·융자 복합 기술금융 서비스 제공

### 1] (기술금융 정착) 은행권의 영속적인 업무영역으로 정착

- '15년중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을 3만2천건, 20조원 규모로 공급
  - 기술금융(TECH\*)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 인센티브\*\*를 부여
    - \* TECH 평가: 기술금융 규모(Technology Financing), 기술 사업화 지원(Entrepreneurship), 신용지원(Credit Financing), 전문인력(Human Resources)
    - \*\* 신·기보 출연료, 온렌딩 대출의 배정한도와 신용위험 분담비율 등을 차등화
- 기술신용평가와 정부 R&D사업, 조달사업, 벤처인증 등 연계를 확대하여 기술신용평가시장을 지속가능하게 조성
  - 기술신용평가시장 조성을 통한 참여기관 확대로 시장내 경쟁을 촉진하여 기술신용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 기업에 대한 복수 평가시 금융회사간 수수료 분담 허용 등 기술신용평가 비용구조 개선
- 업종별 기술신용등급 분포 등 수요자 맞춤형 기술정보DB (TDB)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회사의 기술금융 역량 강화 유도

## ②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투자 강화

- 기술기반 투자 확대의 마중물로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

\* 성장사다리펀드가 1,000억원, 민간이 2,000억원 출자

- 기술평가 인프라(TCB·기술평가기관)를 활용하여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 지원

- 기술 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허관리회사(NPE)로 육성

\* Non Practicing Entity : 지재권 거래를 통해 지재권의 가격형성 촉진

- 신규 IP펀드를 조성(1,000억원 이상: 산은·기은 각 500억원)하여 우수 IP 매입 및 수익화, 우수 IP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 실시

\* NPE 전문성을 조속히 배양하기 위해 국내외 IP 공급자를 활용한 IP Pool 구축, 해외 주요 NPE와의 전략적 제휴 등 추진

- 금융회사가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여 기술기반 투자를 확대 하도록 기술가치평가 모듈화, 시나리오별 평가 등 실시

- 산재되어 있는 기술가치평가정보를 TDB에 집적하여 금융회사가 투자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정보를 적시에 제공

## ③ (원스톱 서비스 제공)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

- 혁신센터 내 'Finance Zone' 설치로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대상 창업·기술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지원

\*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요일별로 순환 배치하여 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금융상담 및 기관별 금융상품과 맞춤형 연계

- 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간 창조경제 연계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실시

\* 지자체·대기업과 성장사다리펀드가 2:1로 매칭 출자(지자체별 100억원 한도)

## 다 정책금융을 통한 창조금융 생태계 지원 확대

- ◆ 모험자본 육성, 미래성장산업 투자, 유망서비스업 지원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중추적 역할 확대
- ◆ 정책금융기관 기능조정, 핵심영역에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의 활용을 극대화

### 1 (정책금융지원 확대) 정책금융이 창조경제에 중추적 역할 수행

-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15년 중 10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

\* 미래성장산업 공급목표 : ('14년) 89조원 → ('15년) 100조원

-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3년간 30조원(산은 15조원)) 가동

- 기술기업,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투융자 복합지원을 확대하는 등 '통합 산업은행'의 투자기능 강화

\* 통합산은 투자규모 및 비중 : ('14년) 6.5조원(11%) → ('15년) 10.5조원(17%)

### 2 (보증기관 운영체계 효율화) 보증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보증기관 업무개편 추진

- 중소기업(신보)·소상공인(지역신보) 보증기관간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역할·기능 재조정 방안 마련

- 장기고액 보증을 감축\*하여 창업기업 지원여력을 확충하고 우수 기술 지원 확대를 위해 심사역량을 강화

\* 가산보증료 강화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보증 감축 유도

- 기술금융 평가결과,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보증 수혜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출연료율 체계 개편

## 실천계획② 실물지원을 위한 자금중개기능 강화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창업기업 투자확대	창조경제 혁신펀드 조성	V-CDS 상품개발 클라우드 펀딩 제도화	창업투자 활성화	창업투자 정착
벤처기업 성장촉진	사모펀드 제도개선 연구용역 진행	개편방안 마련	회수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	회수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
회수구조 강화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마련  코넥스 규제 재검토	중기M&A 특화 증권사 출범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
재도전 환경구축	재기지원 펀드 대폭 확대  모태펀드 제도개선  재기심사기회 및 지원확대	구상채무감면 활성화  재창업지원위원회 개편(지신보 참여 독려)	재창업자금 공급 확대(지속)	재창업자금 공급 확대(지속)
기술금융 정착	TECH 평가 실시 및 우수은행에 인센티브 제공	TDB 수집정보를 TCB 평가등급 등으로 확대	맞춤형 TDB 서비스 제공	기술금융박람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매년)
기술기반투자 활성화	기술가치 투자펀드 조성	산은의 NPE 역할 강화	기술가치 투자펀드 확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창조경제 혁신센터 개소시	창조경제 혁신센터 개소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책금융지원 확대	정책금융 공급 (지속)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가동	정책금융 공급 (지속)	정책금융 공급 (지속)	정책금융 공급 (지속)
보증기관 운영체계 효율화	장기고액보증 감축방안 시행	신보-지신보 역할 분담 방안 마련  보증기관 역량강화 방안 마련		

## 가 금융개혁 추진

- ◆ 경쟁촉진, 금융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및 보수적인 금융관행 혁신 등 금융개혁 지속 추진

### 1]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금융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규제개혁 추진

- 금감원, 금융협회, 연구원 등과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T/F'를 운영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1/4분기)

#### < 금융규제개혁 과제(예) >

-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금융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강화
- IT와 금융의 융합 촉진 등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주 과정의 규제개선을 통해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창조경제 지원체계 구축
- 기존 규제개혁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나 중장기 검토과제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 규제개혁 성과가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평가 및 보완 추진

- 규제개혁 정비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주요 규제개혁 사례 발굴·공유하여 규제개혁 성과를 확산

- 특히,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하여 규제개혁이 미비한 분야를 집중 점검·개선

\* 현장 의견 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위해 간담회와 서베이 정례화 추진

② (금융혁신 실천) 생산적인 부분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물지원 강화 및 보수적 관행 개선 등 혁신 지속

-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관행개선 실적 등을 평가한 '은행 혁신성 평가'를 추진\*하고 창의적인 금융인을 우대하는 문화 조성

\* 평가결과를 은행의 보수총액과 함께 공시 및 정책금융 인센티브와 연계 추진

-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시장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금융관행을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

\* ①관행적 종합검사 축소, 컨설팅 중심 및 중대·취약부문에 검사역량 집중  
②인허가 업무의 신속성 제고, 불필요한 보고서 폐지 등 일하는 방식 개선

- 금융기관 성과보상체계 개선\* 추진

\* 임원의 성과평가시 '혁신성평가 결과' 반영,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도 성과주의가 정착되도록 유도

③ (추진체계) 금융개혁 주제별 연속 세미나를 통해 세부 개혁방안을 도출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 점검

\* 금융권의 '보수적 문화'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 9인으로 출범('14.9월)하여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점검하고 은행 혁신성평가 도입, 감독관행 혁신 등 추진

- '15.1/4분기까지 세부과제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2/4분기부터 본격 실행 및 점검

< 세미나 추진일정(안) >

세부 과제	일정(잠정)
① 금융권 공동 세미나 (주최: 협회 공동)	2.3일(화)
②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관련 은행권 세미나 (주최: 은행연합회)	2.10일(화)
③ 은행 혁신성평가 세미나 (주최: 금융연구원)	2.13일(금)
④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 (주최: 금융감독원)	3월
⑤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3월
⑥ 빅데이터 활성화	3월
⑦ 파이낸스존 및 핀테크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3월
⑧ 100세시대 대비 금융부문 역할 강화	3월
⑨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4월
⑩ 금융규제개혁	4월



## 나 금융환경 변화 대비 대응역량 강화

◆ 부동산시장 변화, 기후변화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대응은 다소 미흡

⇒ 부동산 금융, 안전금융, 기후금융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금융권의 역량을 강화하여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 ① (부동산 금융 활성화) 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에 맞춰 부동산 자금공급 기능 강화 및 부동산 금융의 선진·고도화 추진

\* 최근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전환 → 민간임대주택 수요 확대, 부동산 투자회수기간 장기화,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 증대 등

○ 부동산펀드 등 주요 투자자에 대한 부동산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본공급 강화 유도

○ 리스크 관리, 투자 회수, 유동화 등 주택금융 기법의 다양화·발전 지속 유도

### ② (주택금융 개선) 임대차시장의 구조적변화(전세→월세)에 맞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에 대한 보증 공급을 추진

○ 졸업한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저리의 월세대출\* 공급(국민 주택기금)을 위해 주금공을 통한 월세대출 보증을 공급

\*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 향후 전월세 시장 움직임, 서민 주거부담 등을 고려하여 월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기능 확대 검토

### ③ (우리은행 민영화) 경영의 자율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리은행의 다양한 매각방안 검토

④ (안전금융 선도) 재난 피해방지 및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보험 역할 확대, 안전관련 설비투자 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

-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재해예방 기능 강화, 피해보상 수준상향 등 재난안전보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안전점검범위를 기존 화재예방·소화시설 외에 폭발·붕괴 위협으로 확대하는 등 화재보험협회의 재난안전기능을 강화
  - 의무보험가입대상에 기존 화재 외 폭발·붕괴로 인한 사고를 추가하고 신체손해배상\* 외의 재산피해배상을 추가
- \* 신체손해배상 한도 상향 : 8천만원 → 1억원
- 안전관련 노후시설 교체 등에 대한 기업 대출 또는 직접 투자 지원을 지속하여 안전관련 설비투자 촉진

⑤ (기후금융\* 활성화) 금융권의 기후금융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배출권거래의 안정적 정착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취약성 감소 및 복원력 증대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금융
-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15.1.12일)되어 본격적으로 운영(환경부 주관)됨에 따라 거래시장의 안정적 정착 지원
  - \* 한국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매거래 및 그에 따른 청산·결제업무 수행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거래회원  
으로 참여하여 거래활성화 유도
- 관계부처와 TF를 운영하여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역량 강화 등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다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 금융업을 고부가 유망서비스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 금융의 외연확대를 지원하고 국내 금융환경을 국제화

### 1 (세일즈 외교) 금융회사 해외진출 수요 조사 및 지원을 체계화

○ 민·관 합동 정례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애로 사항 및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수요 조사

○ 정상회담·경제공동위·FTA협상 및 외국 금융당국간의 협의\*시 금융회사 해외진출 애로 사항을 중점 의제화

\* 정례협의(Shuttle Meeting)대상을 일본 외 중국·인니·베트남 등으로 확대, MOU 체결 지속 강화(인니 등은 MOU 기체결국의 금융회사만 진입 허용)

- FATF 의장국 등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 IT 등 한국형 금융인프라의 수출을 대외협력사업·금융회사 해외진출 등과 연계하고 신흥국 당국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 ASEAN 등 주요 신흥국 고위 당국자가 참석하는 국제금융협력포럼 정례화(연1회)

- 한영 금융포럼 등 금융 선진국과의 국제포럼도 정례화하여 신규사업 지속 발굴 (예: 위안화 허브, 제3국 진출 위한 금융협력 강화)

### 2 (해외진출 내실화) 금융회사의 단기적·보상성 해외진출 관행 혁파

○ 규모·환경 등이 유사한 외국 금융회사의 성공사례 조사 및 임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체계 개선 유도

○ 은행혁신성 평가의 해외진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

○ 정책금융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업무역량 강화

\* 주요 거점지역 금융수출 네트워크 확장, 해외진출 기업 지원 강화 도모 등

③ (한국형 위안화 허브) 위안화 무역결제(공급)·금융거래(수요) 확대

- 확실한 방향성 아래 지속적·단계적 과제들을 포함한 중장기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수립(기재부 협업)
  - 위안화 허브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를 발굴하여 중국 정부·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위안화 컨퍼런스를 정례화\*
    - \* 제1차 위안화 컨퍼런스에서는 RQFII 쿼터 승인, 중국 투자의 과세 문제 등 현안을 논의
- 무역 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해 위안화 결제 및 위안화 금융 서비스 다양화를 장려하고 중국 금융 교육과정 마련 유도
- RQFII 등 對中 위안화 투자 관련 규제 개선
  - \* 종합금융투자사의 외화대출 및 외화RP 거래 허용, 공모펀드의 중국 국채 편입한도 확대 추진

④ (금융중심지 활성화) 금융중심지 및 국제금융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

- 주요 금융중심지\*에 「금융중심지 활성화 글로벌 협의회」를 구축하여 한국 금융중심지 홍보, 금융전문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 동경, 북경·상해 등
- 국제컨퍼런스 및 해외금융인 면담시 관계를 맺은 국제 금융인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국제적 인지도 제고

⑤ (FTA 대응 역량 강화) FTA 내용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통상협정과 위반되는 정책 수립 및 검사·감독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협정 원칙, FTA 협정 내용 및 분쟁 사례 정리·발간
- 외국계 금융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정책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외국 공관·금융사와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 실천계획③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규제개혁 점검 및 평가	규제개혁 성과평가 서베이	금융규제 정비의 달 운영(9월)	규제개혁 지속추진	규제개혁 지속추진
제2차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방안 마련	추진방안 발표	규제개혁 지속추진	규제개혁 지속추진
금융혁신 추진	은행혁신성 평가	은행혁신성 평가	은행혁신문화 정착	은행혁신문화 정착
금융혁신 위원회 운영	매월 개최	매월 개최	매월 개최	매월 개최
부동산금융 활성화	부동산 투자규제 개선	부동산금융 활성화 지속	부동산금융 활성화 지속	부동산금융 활성화 지속
주택금융 개선	취업준비생 등에 월세대출 보증 공급	월세대출 보증 공급 확대 검토	임대시장 안정화 지속	임대시장 안정화 지속
우리은행 민영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 검토	우리은행 민영화		
안전금융선도	화재보험법 개정안 마련	화재보험법 개정	보험회사의 재난예방기능 지속 강화	
기후금융 활성화	배출권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세일즈외교	한영 금융협력 포럼개최	신흥국 초청국제 금융협력포럼개최	세일즈 외교 지속 추진	세일즈 외교 지속 추진
해외진출 내실화	외국 금융회사 성공사례 조사	해외진출 성과 평가지표 마련	금융회사 해외진출 추진 현황 점검	현황 점검 지속 및 성과 평가지표 평가
한국형 위안화 허브	위안화 투자 규제 개선	위안화 역외금융허브 로드맵 수립	위안화 허브 로드맵 이행	위안화 허브 로드맵 이행
금융중심지 활성화	금융중심지 활성화 글로벌 협의회 시범지역 선정	홍보실시 및 네트워크 강화		금융중심지 활성화 글로벌 협의회 구축
FTA 대응 역량 강화	전문가 TF 구성	해외 분쟁 및 당국 대응사례 등 정리·발간		

## 2. 금융시장 신뢰 확립

금융시장의 신뢰를 확립하여 금융산업을 새롭게 도약시키겠습니다.

### 〈 기본 방향 〉

- ◆ 금융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지원확대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고령화 대비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금융보안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안 해소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시장 참여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여 금융부문 신뢰 제고

#### ■ [실천계획 ④]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 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 나. 취약계층 금융환경 개선
- 다. 고령화 대비 금융지원 강화

#### ■ [실천계획 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가.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강화
- 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 다. 금융보안 확립

#### ■ [실천계획 ⑥] 금융부문 신뢰 제고

- 가. 금융권 신뢰제고 환경조성
- 나. 시장 및 거래제도 투명성 확보
- 나. 금융감독 선진화

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 등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1]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추진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 국회제출('14년말)

- 미소금융재단, 신복위, 행복기금 업무조직을 통합하고 근로자  
보증(햇살론), 서민금융 인프라 기능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
-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자금지원, 채무조정과 함께 종합상담,  
고용·복지·주거 연계지원, 금융상품 알선 등 종합적 지원

2] (서민금융상품 개편)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상품 개편

-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고 서민의  
제도금융권 정착을 지원하는 '징검다리 제도'\* 도입

\*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가 제도금융권 안착 前 이용하는 중간단계 상품

3] (맞춤형 채무조정) 수요자별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

- 상환능력을 감안한 사적채무조정 감면율 체계 개편, 신청요건  
완화 등 사적채무조정 중도탈락자 지원 강화

4]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개편) 원스톱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확대

- 서민금융 상담센터(지자체 內)를 통합지원센터로 최대한 확대·  
개편하고 기존 유관기관 '지역조직'은 통합·이관 추진
- 고용복지+센터 內 서민금융 상담센터 추가 개소

## 나 취약계층 금융환경 개선

◆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대학생 등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 등의 문제도 상존

⇒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환경을 지속 개선

1] (취약계층 피해예방 및 권리구제 강화) 취약계층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

○ (중점검사) 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 규제 준수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하고 위반시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

○ (금융상품 광고 정비)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과다채무의 위험성, 손실가능성 등)가 쉽게 인지되도록 형식규제를 강화

\* (저축은행) 경고문구 신설 / (금투·보험·여전·대부) 음성안내 의무화, 최소 노출시간 상향(예: 전체광고시간의 1/5 → 1/3 이상) 등

- 대부업 광고규제를 강화하여 광고시 표시해야할 필수내용을 정비하고 허위·과장 광고 규제를 강화

- 완화된 보험광고규제를 적용하는 보험 이미지광고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축소

\* ①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설명, ②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을 3회 이상 반복 금지

○ (청약철회권 도입)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금소법 제정 이전이라도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우선 적용을 검토

○ (분쟁조정제도 개선)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

\*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Fast-Track으로 처리하고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 도입 방안을 검토



② (대학생·청년층 지원)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대학생·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

- (생활자금 추가 지원)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대신 이용가능한 저금리대출(예: 한국장학재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연 200~300만원)를 2.9% 수준으로 대출중

- 저소득·저신용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

\* 예) 최대 800만원(4%대)까지 지원, 거치기간도 연장(1년 → 졸업시까지 연장)

- (고금리대출 전환) 장학재단 대출만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청년에게 전환대출 상품을 추가 지원

\* 현행 신복위의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보증상품(최대 1,000만원, 6.0%)을 개편

- 대출금리·보증료를 인하하고 거치기간도 연장하여 대학생 등의 고금리 채무부담을 경감

- (신용회복 지원) 대학생·청년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를 적극 지원

- 신용회복지원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졸업 후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예: 현행 2년 → 4년까지 가능)

③ (금융교육 강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상담 프로그램 확대

-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15.1월 예정)를 토대로 취약계층 대상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 금융사랑방버스(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의 격오지·업무시간 외 운영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금융상담 접근성 제고

## 다 고령화 대비 금융지원 강화

◆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국민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 ① (노후대비 상품개발) 개인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연금상품 공급

○ 평균수명보다 장수할 경우를 대비해 고연령(예: 85세) 도달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개발

○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보험사 임의 기준에서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인 기준으로 확대\*

\* 현행 보험사 상품은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인 1~2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1~5급까지 확대

○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인에 비해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

○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의 연계 등을 통해 주택연금의 이용 가능성 제고 및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 일방이 60세 이상(주금공법 개정)

### ② (사적보험 개선) 사적건강보험의 현황·상품구조 등의 분석을 통해 보험료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관리가 미흡한 보험회사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은 현행 수준(200만원)을 유지하여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

○ 비급여의료비 적정성 확인\* 등 보험금 지급관리를 강화하고 보험료 안내강화 등 공시체계를 개선

\* 예)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와 같이 의료비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 등이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③ (연금소비자 보호) 연금상품의 판매·운용·공시 쏘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 준칙을 마련하여 업권별 상이한 규제체계 정비

- 판매단계에서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비전문가인 연금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비교공시체계를 마련

\* 소비자의 상품 비교가 용이하도록 적립률 등 중요항목을 통합공시

④ (노후설계 인프라 구축) 연금정보현황 제공, 교육·컨설팅, 실태 조사 추진 등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대비 지원

- 연금포털을 통해 연금 가입정보, 미래 예상연금액과 노후 적정 생활비 등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 미래설계센터를 금년중 시범운영하여 노후대비에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저소득층에 1:1 노후재무설계 컨설팅 등\* 지원

\* 중소기업 등에 찾아가는 교육·상담을 실시(퇴직연금 도입대비 인식 제고 등)하는 등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노후대비 금융역량 강화

- 국민의 연금가입 실태조사, 연금정책·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연금정책 마련 등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⑤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운용 규제 전면 개선 등을 통해 노후 대비 자산관리서비스 선진화

- 퇴직연금 운용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DC/IRP형의 위험 자산 운용한도를 확대(40%→70%)

- 일임형 상품 및 디폴트 옵션\* 도입, 독자적 투자자 보호 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자산관리 전문성 및 투자자 보호 강화(고용부 협의)

\* 퇴직연금사업자별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이를 제시

## 실천계획④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서민금융총괄 기구 설립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서민금융 onestop서비스	서민금융 onestop서비스
서민금융 상품개편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 마련	신상품 도입 및 상품통합 협의	서민금융 상품 통합 및 개편	서민금융 상품지원 지속
맞춤형 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 개편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 개편	타부처 및 지자체 협의	통합지원센터 등 상담센터 확대	통합지원센터 등 상담센터 확대	통합지원센터 등 상담센터 확대
취약계층 권리 구제 등 강화	청약철회권 적용방안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감원 중점검사 실시	광고 관련 법령 및 규정개정  금감원 중점검사 실시		
대학생· 청년층 지원	장학재단과 연계방안 협의 서민금융상품 개편방안 마련·시행	대학생·청년층 금융애로 해소 지원 지속	대학생·청년층 금융애로 해소 지원 지속	대학생·청년층 금융애로 해소 지원 지속
금융교육강화	교육교재 개발	금융사랑방서비스 운영확대	금융교육 지속	금융교육 지속
상품개발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상품 개발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주금공법 개정)	상품개발	상품개발
사적보험 개선	상품구조 및 공시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관리 위한 관련부처 협의 및 법규개정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강화
연금소비자 보호	공시방안 마련	규정개정 추진		
노후설계 인프라 구축	연금포털 구축	맞춤형 연금제도 수립 방안 마련	인프라 고도화	인프라 고도화
퇴직연금 활성화	자산운용 관련 규정 개정	디폴트옵션 및 일임형 계약 도입	자산관리서비스 지속개선	자산관리서비스 지속 개선

**가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확립**

◆ 금융소비자 정책이 업권별로 추진됨에 따라 종합적 시각의  
방향제시가 미흡

⇒ 상시적·체계적인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

①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확립) 금융소비자 정책이 종합적  
시각에서 상시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구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 개정 추진

○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14.12월 既 발표)에 반영된 제도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하고 차질 없이 시행

\* 금소법 제정 후에는 동 종합계획을 토대로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매 3년마다 수립

○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민원발생평가와 통합하여 종합등급 산출, ‘16년 시행)

\* 종합등급은 공개하고 상·하위사에 대해 감독·검사시 incentive, penalty 부여

② (Feedback·협업 시스템 마련) 금융소비자 정책의 실수요자인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

○ ‘15년에 제1차 금융소비자 Survey를 시행하고 향후 매3년마다  
실시하는 등 금융소비자 Survey를 정례화

○ 금융당국·소비자단체·금융업권·학계가 참여하는 자문패널을  
구성하고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

③ (대부업 관리체계 개편)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서 직접 등록 및 검사·제재 수행

## 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 분야별 금융관행 개선, 기존 금융관행 개선협의회 상시화 등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지속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

① (소비자 불편개선) 민원분석 등을 통해 건별로 발굴하던 금융관행 개선방식을 주제별·분야별 점검 중심으로 개선

○ 과거 소비자 불만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일괄개선

\* 예) SMS 등 안내·통지 점검·개선, 상품 판매절차 개선 점검 등 분야별 개선

② (관행개선 상시화) '금융관행 개선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상시적으로 금융관행을 발굴·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 2015년 주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 >

□ (카드이용자 편의제고) 금융소비자들이 카드 이용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관행을 개선

○ 일부 가맹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유도

○ 카드 해지시 휴대폰 요금 자동납부 등 종전 카드에서 신규 카드로 이전될 필요가 있는 거래를 고객에게 전달

□ (보험소비자의 이해도제고) 소비자가 관여하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평가를 통해 보다 쉽게 안내자료를 기술토록 유도

\*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 등

\*\*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평가는 既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보다 쉽게 기술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임

□ (대출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 계약기간 내 행사횟수 제한 등을 통해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

\* 소비자가 대출 약정기간 중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다 금융보안 강화

◆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관련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

⇒ 신용정보 보호체계 전면 개편, 금융보안원 안착 등 추진

### ① (신용정보 보호체계 개편) 신용정보보호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용정보와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체계의 전면적 개편\* 추진

\* 신용정보 보호대상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모든 금융관련 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의무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전부 개정안)

#### ○ 신용정보의 처리 절차를 엄격화\*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제재 상향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강화

\* 제3자 제공절차를 엄격화, 불필요한 정보 삭제조항 신설, 동의없는 영업 목적 문자전송 금지, 금융상품모집인 등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등(정무위 案)

####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

\* 집중기관내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위원 중 일정비율 이상의 공익위원 선임을 의무화

#### -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집중기관과 민간 신용조회회사(CB)간 업무차별화도 검토

#### ○ 최소처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 금융회사가 처리 중인 정보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 재검토 추진

#### - 「신용정보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개별 신용정보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용정보 수집범위 재조정

② (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VAN사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IC단말기 전환도 차질없이 이행

- VAN사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결제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 의무를 부과
-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금융위(→여신협회 위탁)에 등록된 카드 단말기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③ (금융보안원 안착) 금융보안원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금융권 IT 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

- 보안사각지대 해소\*, 금융회사의 침해의심정보 공유, 업권간 상이한 보안관제방식 통합 등 추진

\* 보안관제가 필요한 금융회사 전체를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와 연계

- 보안기술평가 제도 운영 등 IT와 금융의 융합 기술 지원과 소비자 보호 및 새로운 보안 기술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④ (전자금융사기 대응) 대포통장 근절, 금융사기 이용전화 번호 정지 등 금융사기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 수립

- 대포통장의 발행·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포통장 과다 발급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명령 및 임직원 제재
  - 한편, 통장발급 관련 민원을 금감원 민원평가에서 제외하여 의심거래자에 대한 적극적인 통장발급 거절을 유도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대포통장 불법광고 등에 이용된 금융사기 이용전화번호 정지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효과적인 금융사기 대응 방안 강구



## 실천계획 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확립	금융위법 개정 금소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행 (’15년실적 대상)	
협업 시스템 마련	소비자정책 자문패널 간담회 개최	금융소비자 Survey 실시	소비자 의견 수렴 지속	소비자 의견 수렴 지속
대부업 관리체계 개편	대부업법 개정 추진	대부업법 개정	대부업법 하위법령 정비	대부업 관리감독 지속
소비자불편 개선	연중 발굴·개선	연중 발굴·개선	연중 발굴·개선	연중 발굴·개선
관행개선 상시화	금융관행개선 협의회 확대개편 검토	금융관행개선 협의회 확대개편 추진	관행개선 상시화	관행개선 상시화
신용정보 보호체계 개편	신용정보법 하위법령 정비 신용정보법개정안 국회 제출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	신용정보법전부 개정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		
카드이용자 보호 강화	여전법 시행령 마련	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록제 도입		
금융보안원 안착	금융보안원 설립	침해정보공유 보안관제방식통합 보안기술평가제도 운영	금융보안 강화 지속	금융보안 강화 지속
전자금융사기 대응	민원평가제도 개선	개선계획제출명령 보이스피싱법 개정	전자금융사기 예방 지속	전자금융사기 예방 지속

\* 국회 제출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 가 금융권 신뢰제고 환경조성

◆ 반복되는 금융사고, 일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난맥상 등으로 축소된 금융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는 환경조성

- ①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에 따라 금융회사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및 외부기관이 평가
  - \* 하반기 이후 은행, 금융지주사부터 이행상황 점검(제2금융권은 '16년부터)
  - 개별 금융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요건은 정비
- ② (기관투자자 책임준칙)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한국판 「Stewardship Code\*」 제정추진
  - \*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공시 및 활동 보고, 주주권 행사 지침 마련 등
  - 기관투자자 경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요인도 합리화
- ③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내의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제도를 정비
  - 준법감시인의 직무 독립성 제고 및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④ (금융 윤리규범 정립)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금융회사의 윤리의식 변혁을 위한 금융권의 윤리규범을 협회중심으로 재정비
- ⑤ (금융의날 제정)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하고 저축·기술금융·서민금융 등 분야별 포상을 실시

## 나 시장 및 거래질서 투명성 확보

◆ 공시·회계·신용평가 등 시장인프라 개선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공시제도 합리화) 사전적 공시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하되, 공시에 따른 사후적 책임성은 강화하여 공시의 신뢰 확보

○ 불필요한 공시부담을 발생시키거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공시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자율공시로 전환

\* 예) 생산활동 재개, 기술도입·이전계약 사항 등은 자율공시로 이전

○ 불성실한 공시가 지속될 경우, 거래소가 기업의 공시책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성 확보

② (독자신용등급 도입) 계열그룹 지원 없는 기업 자체적인 신용도를 최종 등급과 병기하는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

※ 독자신용등급이라는 명칭이 신용등급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명칭의 변경(예 : 자체신용도)도 검토

③ (회계규율 강화) 회계 사각지대에 대한 회계규율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화, 대형 비상장법인은 상장사에 준하여 규율

\*\* 회계품질 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도입 등

④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율) 신중 시장질서 교란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14.12.9, 국회통과)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및 본격 규율

\* 후속입법 추진 : 자본시장법 시행령(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과징금 부과기준)

⑤ (주가조작 단속)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정착시켜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검찰에 신속히 통보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활용을 통해 주가조작 혐의자 등의 도주 및 증거인멸에 적극 대처

## 다 금융감독 선진화

◆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감독관행은 정비하는 등 금융감독 선진화

1] (금융그룹별 감독도입) 금융그룹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별 감독 시스템」 추진방안 마련

○ 복합금융그룹\*의 범위를 정의하고 내부통제·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의무 부여 및 그룹전체에 대한 건전성 감독규제 도입 검토

\* 예) 사실상 금융지주그룹,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등

○ 장기적으로는 현행 금융감독원의 검사체계를 권역별 체계에서 금융그룹별 중심으로 전환 추진

2] (제재제도 선진화) 금융권 보신주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제재관행을 개선

○ 직원 직접제재 원칙 폐지 등 과도한 신분 제재관행을 지양하고 과징금 등 금전 제재 위주로 제재 시스템 개편 추진

○ 각 업권별 상이한 제재제도의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제재업무를 위해 제재심을 개편하고 시효제도 도입

3] (금융정보분석 선진화) 탈세 방지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FIU의 심사분석 시스템 및 기법을 개선

○ 법 집행기관(국세청, 관세청 등)의 특성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FIU에 지속 축적되고 있으나 그간 활용이 다소 미비했던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정보의 활용방안 마련

4] (업무위탁 개선) 금융회사가 업무위탁시 승인·보고 의무 완화 및 업무위탁 가능범위·재위탁 여부 명확화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 실천계획⑥ 금융부문 신뢰 제고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	연차보고서 작성 및 평가	사외이사 결격요건 관련 규정 검토	시행령 개정	
기관투자자 책임준칙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내부통제 강화		모범규준 마련	의견수렴 후 시행	
금융 윤리규범 정립	업권별 TF 구성 · 운영	윤리규범 마련		
금융의날 제정	관계부처 협의	금융의 날 행사 실시	금융의 날 행사 실시	금융의 날 행사 실시
공시부담 완화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공시규정 시행	거래소 공시 지속 운영	거래소 공시 지속 운영
독자신용등급제 도입	모범규준 개정	독자신용등급 시행	독자신용등급 지속 운영	독자신용등급 지속 운영
회계규율 강화	정부입법 절차 추진	법안 국회 제출		
질서위반에 대한 제재정비	하위규정 정비	자본시장법 시행	시장질서 교란행위 지속 단속	시장질서 교란행위 지속 단속
주가조작 단속	주가조작 단속 지속	주가조작 단속 지속	주가조작 단속 지속	주가조작 단속 지속
금융그룹별 감독도입	해외 사례 조사 국내 금융그룹 현황 분석	공청회 개최 및 감독방안 마련	금융그룹 감독방안 시행	
제재제도 선진화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관련법령 개정안 국회제출		
금융정보분석 선진화	관계부처 TF 운영	맞춤형정보제공 시스템 및 CTR 정보 활용방안 마련	지하경제양성화 지속 지원	지하경제양성화 지속 지원
업무위탁 개선	관련 규정 개정	외국계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 3. 금융안정 강화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 기본 방향 〉

- ◆ 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관리 및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
  - 기업 부실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위기 대응역량을 제고

#### ■ [실천계획⑦]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 나. 취약부문 집중관리
- 다.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 ■ [실천계획⑧]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대응

- 가.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 나. 시장친화적 재무구조 개선 지원
- 다. 취약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 ■ [실천계획⑨]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 가. 대외 리스크 요인 점검 및 대응
- 나. 국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다. 금융인프라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 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 구조도 획기적으로 개선

① (가계부채 연착륙)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 수준을 준수하도록 유도

○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계소득 제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

② (가계부채 구조개선)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 정착

○ 기존의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확대·활용하여 '15년 중 20조원 한도로 대출전환 추진

\* 필요시 유동화 여력 증대를 위해 주금공법을 개정하여 자본금 한도(현재 2조원)확대 추진

○ 대출 전환에 따라 차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 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등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③ (유인체계 정비)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

○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에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

○ 구조개선 실적에 연동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감면 추진

\* 현재는 개별 대출별로 만기, 상환구조, 금리구조에 따라 0.05%~0.30%의 출연료 부담중(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



## 나 취약부문 집중관리

◆ 처음부터 과도한 부채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

### ① (상환능력 심사 강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내실화하여 '처음부터 갚아 나갈 수 있는 구조'를 정착(금융소비자 보호 측면)

○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시 소득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심사

\* 은행권 주담대(328조원, 13년말) 중 소득 파악된 대출은 64.5% 수준, 상호금융권 실태조사 결과 DTI 미적용 대출은 대부분 상환능력 심사 생략

○ 금리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차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상환능력 심사시 이를 감안하도록 유도

### ② (모니터링 강화) 부채 부담이 큰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실 가능성을 적기에 파악

○ 저소득층을 유형별(주택보유여부, 연령, 종사상 지위 등)로 구분하여 정교하게 모니터링

○ 자영업자 대출은 업종별\*·담보별 대출 통계를 세분화하여 취약업종·담보 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

\* 대출금액이 업종별(음식업, 숙박업 등)로 세분화하여 집계될 수 있도록 구축

### ③ (맞춤형 금융지원)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를 구축

○ 이자유예·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지속하여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



## 다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는 한편,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위험의 전이·확산 가능성 방지

### ① (과도한 수신 증가 억제) 가계대출 증가\*의 근원인 과도한 수신 증가를 지속적으로 억제

\* 가계대출 증가율(%) : (08~11년 평균)14.1 (12년)6.0 (13년)7.3 (14.9월) 11.3 ↔ 은행 6.2

- 고금리 수신유치 억제, 수신 급증 조합에 대한 집중 검사 실시
- 수신 확대의 근본 요인인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現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에 계획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 후 폐지 추진

\* ('15년까지) 비과세 → ('16년) 5% → ('17년 이후) 9% 과세 (일반 세율 14%)

### ② (부동산담보대출 관리 강화) 주담대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비주택담보대출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관리

- 자체 내규로 LTV 규제중인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해 담보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LTV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예)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한도 부여 등

- 조합의 외부 감정평가사 선정·운영방식 등을 점검·보완

### ③ (대출구조 개선)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 이행계획 마련 유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17년말까지 15% 달성 목표 ('14.12월말 현재 2.6%)

### ④ (감독기능 강화) 금감원, 중앙회의 검사 인력 강화 및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연 2회 고위급(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으로 확대 개최

## 실천계획 ⑦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가계부채 연착륙	가계부채 증가율 모니터링	가계부채 증가율 모니터링	가계부채 증가율 모니터링	가계소득 제고방안 추진
가계부채 구조개선	가계대출 전환 추진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 점검	주금공 수권자본금 확대 (주금공법 개정)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속
유인체계 정비	은행권 혁신성 평가지표 반영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선		
상환능력 심사 강화	상환능력 심사 관행 정착	상환능력 심사 관행 정착	상환능력 심사 관행 정착	상환능력 심사 관행 정착
모니터링 강화	자영업자 대출통계 세분화	저소득층 대출 모니터링 강화		
맞춤형 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지원 지속	프리워크아웃 지원 지속	프리워크아웃 지원 지속	프리워크아웃 지원 지속
과도한 수신증가 억제	수신금증 조합 집중검사	수신금증 조합 집중검사	수신금증 조합 집중검사	예탁금 비과세 저율과세 전환
부동산담보대출 관리 강화	상가·토지담보 대출 실태조사 LTV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외부감정평가사 선정 운영방식 등 점검	지속점검	
대출구조 개선	구조개선 이행계획 징구	구조개선 추진 현황 점검	구조개선 추진 현황 점검	구조개선 추진 현황 점검
감독기능 강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확대 개최	금감원, 중앙회 검사 인력 강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지속개최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지속개최

## 가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 ◆ 기업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규모 및 신용도에 따른 양극화 현상으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수요 증대
-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우리 경제내 잠재적 불안요인 조기 해소

### ①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상시적 위험 진단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 (그룹) 재무구조평가(4월), 재무구조개선약정(5월)에 따른 자구 계획 이행 및 금융지원으로 대기업그룹의 부실 위험 해소
-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경영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워크아웃 등 추진

\* 개별대기업 정기신용위험평가 : 4~6월, 중소기업 정기신용위험평가 : 7~10월

###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현행 기촉법의 효력만료('15년말) 이전에 기촉법 상시화 등을 추진하여 제도적 안정성 확보

- 그간 제기된 기촉법의 법률적·실무적 문제점을 보완\*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상시법제화 등 추진

\* (대상채권) 금융기관 채권 →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

\* (대상기업)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 → 모든 기업

### ③ (주채무계열 평가제도 개선) 현행 주채무계열 평가제도를 점검하여 평가방식의 합리성 및 객관성 제고 방안 강구

- 모든 산업에 대한 획일적 평가를 지양하고 산업별 특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모색

## 나 시장친화적 재무구조 개선 지원

◆ 부실위험이 현재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판 제공 필요

⇒ 일시적 재무적 곤경에 빠진 기업에 대한 시장친화적 재무구조 개선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기회 확보

### ① (선박은행 조성) 해운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중고선박을 매입·지원하는 선박은행(Tonnage Bank) 체계 구축

- 자산관리공사와 민간투자자가 선박펀드를 출자·조성하고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하여 5년간 1조원 규모의 중고선박 매입 지원

\* 해운보증기구는 선박펀드의 원활한 지원 유인을 위해 후순위 보증지원

- 선박펀드 조성, 매입선박 선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지원 개시

### ②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산매입 후 임대지원, 중소기업 패스트랙 연장 등 추진

-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후 임대지원(S&LB)'을 통해 유동성 위기 극복 지원

\* 필요시, 금융회사 등의 매칭자금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 추진

-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을 '15년말까지 연장하여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 유도

\* '08년 이후 '14.10월말까지 8,720개 기업에 34.7조원 지원

### ③ (민간자본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재무안정 PEF 등을 활용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 지원

- 채권은행별로 분산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정상화를 추진하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 마련

## 다 취약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 경기민감업종 및 취약업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참여를 유도

### ① (기업정상화 촉진펀드 활성화)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정상화 촉진 PEF 지원 확대

-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PEF를 조성하여 당면한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매수여력 보완
- 참여기관 간 투자협의체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1조원 지원하고 구조조정 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성 검토

### ② (해운보증기구 출범) 해운보증기구 설립 및 업무개시

- 선박건조 프로젝트 후순위보증 지원 등을 통해 경기민감업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 지원
- 운영성과 등을 보아 발전·항공 등 여타 프로젝트 지원 고려

### ③ (해양금융 지원 활성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선박·해양금융 활성화 추진

- '해양금융종합센터', '해운보증기구' 및 '선박운용회사'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다양한 복합상품 개발, 민간 금융회사 참여 확대 등 해양·선박금융 활성화 유도

## 실천계획 ⑧ 상시적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대응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상시·선제적 구조조정	대기업그룹(4월) 취약업종 자금사정 모니터링(상시)	대기업(4~6월) 중소기업(7~10월) 취약업종 자금사정 모니터링(상시)	기업부실화방지 취약업종 자금사정 모니터링(상시)	기업부실화방지 취약업종 자금사정 모니터링(상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기촉법 개정 추진 (국회 협의)	기촉법 개정 추진 (국회 협의)		
주채무계열 평가제도 개선	평가제도 개선(3월)			
선박은행 조성	'15년 상반기매입 대상 선정(4월) 선박인도 · 용선 개시(6월)	'15년 하반기매입 대상 선정(10월) 선박인도 · 용선 개시(12월)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지원대상기업 선정(수시) 후 지원			
민간자본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	「민간자본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마련(6월)			
기업정상화 촉진펀드 활성화	투자협의체 구성 및 펀드운영 개시	기업정상화 촉진펀드 운영 지속	펀드운영 지속	펀드운영 지속
해운보증기구 출범	해운보증기구 본인가 및 업무개시	선박프로젝트 등 지원 지속	선박프로젝트 등 지원 지속	선박프로젝트 등 지원 지속
해양금융 지원 활성화	선박 · 해양금융 활성화 지속 추진			

## 가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강화

◆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대응체계 정비

① (위험점검시스템 재정비) 대외부문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 현재 既마련된 관계기관간 ‘거시경제금융회의’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
-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시장전문가들과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대외부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강화

② (대외부문 대응여력 확충) 美 금리인상 등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외환건전성 규제의 탄력적 운용방안 강구

-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매월 실시하여 충분한  
외화자금 보유를 유도

\* 위기발생시 최소 3개월 동안 견딜 수 있는 외화유동성 자체 확보

-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외환유동성 부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 규제체계를 개선

- 외화차입 유인 완화 및 장기차입 유도 확대를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체계를 단순화

\* (현재) 은행 → (개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나 국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 쏠림현상·상호연계 등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제2 금융권 건전성 및 자금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

①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부문내 쏠림현상, 상호연계성 확대 등과 관련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저금리 기조 등으로 급증 우려가 있는 ELS\*·MMF\*\* 등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투자자보호 및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 ELS잔액(조원):('10년말)29.5 →('12년말)36.0 →('13년말)47.9 →('14.9말)49.9

\*\* MMF잔액(조원):('10년말)66.9 →('12년말)63.1 →('13년말)66.4 →('14년말)82.4

○ 대외부문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부문으로 파급·확산될 수 있는 경로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

②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제2금융권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

○ 상호금융조합의 경영정상화 유도하고 필요시 구조조정 적극 추진 및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 이행 점검·독려

○ 외국자본 및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업계 진출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③ (자금시장 양극화 완화) 취약업종·비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 전반적인 회사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안정 P-CBO 운영기한 연장('15년까지)



## 다 금융인프라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 글로벌 수준으로 금융인프라를 정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국제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

### ① (국제규범의 국내도입) 바젤Ⅲ 등 국제규범의 국내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및 관련 제도 정비

- 바젤위원회 유동성 규제(LCR) 시행\*('15년)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및 D-SIB 도입('16년)을 위한 세부방안\*\* 확정

\* '15년 80%(일반은행) 기준으로 도입, '19년까지 매년 5%p씩 규제비율 상향

\*\* 선정기준, 추가 자본규제 및 정리회생계획 등 방안 검토

- 보험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시범운영 및 보험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18년)에 따른 사전준비 강화

\*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 체계와 현재·미래 지급여력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그림자금융(MMF, 증권화 등)에 관한 정책권고안 이행평가 대응

### ②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국제적으로 TR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TR의 국내 도입방안 마련

\* TR(Trade Registry):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실시간 취합·감독하기 위한 기구

\*\* CPSS-IOSCO는 최근 TR에 보고할 정보의 목적, 내용, 집계, 전달 등에 대한 보고서 발표('14.9월), 미('14.10월)·EU('14.2월) 既 시행

- TR 담당기관은 TR 도입목적, 정보의 특수성, 취합된 정보 활용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③ (전자증권법 제정) 증권의 전자 발행 및 유통으로 비용절감 및 거래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증권법 제정 추진

\* 美, 英, 日뿐만아니라, 中도 1993년 전자증권제도 도입

## 실천계획 ⑨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위험점검시스템 재정비	위험점검시스템 분석	위험점검 상설협의체 운영 추진	위험점검시스템 운영 지속	위험점검시스템 운영 지속
대외부문 대응여력 확충	외화스트레스 테스트	외화스트레스 테스트	외환건전성 대응여력 확보	외환건전성 대응여력 확보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점검개선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점검개선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감독강화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지속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지속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지속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지속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대부업체 진출 영향분석	제2금융권 리스크 지속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지속 점검	제2금융권 리스크 지속 점검
자금시장 양극화 완화		P-CBO 점검		
국제규범 국내도입	LCR 시행	D-SIB 도입방안 마련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도입방안 마련	관련 법령 개정	거래정보저장소 운영	거래정보저장소 운영
전자증권법 제정	관계부처 TF구성	전자증권법 제정안 발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준비	전자증권제도 시행

## IV. 금융 규제개혁 현황과 성과

1.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
2. 1, 2차 규제장관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3. 규제기요틴 조치현황
4. 규제신문고 접수 및 조치현황
5. '비정상적 정상화 과제'의 차질없는 개선

# 1. 규제개혁 실적과 성과

## 가 규제개혁 추진경과

□ (추진배경) 박근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금융업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규제개혁을 해법으로 제시

\*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규제폐지 및 네거티브 전환(2.25, 3개년 계획 담화문)  
금융분야 숨은규제가 많은 분야, 혁파 필요(3.20, 규제개혁장관회의)

○ 금융위는 현장 중심으로 법령 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를 개혁,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

□ (기본방향)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 구축

○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는 유지·강화, 준수비용 절감, 진입·영업활동은 폐지·개선 및 네거티브로 전환

- 실천과제로서 ①금융의 실물지원 강화·국민불편 해소, ②자율·경쟁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 ③숨은규제\* 개선 추진

\* 금융은 숨은규제가 많음. 숨은규제 개혁없이 반쪽짜리, 금융유관기관 등 소비자가 규제로 느끼는 사각지대 개혁 필요(대통령말씀, 규제개혁장관회의)

□ (추진노력) 기관장의 강력한 추진의지 하에 현장 중심으로 규제 개선과제 1,659건을 발굴하고 그 중 703건에 대한 개선 추진

○ 기관장의 12차례에 이르는 현장 간담회, 22개 금융유관기관 “규제심의 TF 운영” 등(14.3~6월)을 통해 규제개선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총 1,659건의 과제를 발굴

○ 1,659건 과제 검토 및 수용과제 703건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수립 후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7.10.)

➡ 1,659건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건별로 모두 공개(7.25)

□ 현장중심의 핵심규제 발굴·반영 노력

- 22개 금융유관기관별로 외부전문가(금융회사 등 피규제자 포함)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규제심의 TF\*”를 구성·운영(3~6월)

\* (구성) 전체TF위원: 155명(평균 : 7명), 외부전문가 : 102명(평균 : 5명)  
(역할) 각 기관이 마련한 규제목록, 민원분석, 개선방안 등을 검토·심의

- 금융위원장, 12차례 “금융현장 규제찾기” 릴레이 간담회 실시

- ① 창업·벤처기업(4.10, D.Camp), ② 장애인 및 학부모(4.17, 서울 경운학교),  
③ 은행 등 준법감시인(4.30, 은행연합회), ④ 국내 외국계금융사(5.8, 금투협회)  
⑤ 금발심위원 및 금융권 연구기관장(5.15, 은행연합회) ⑥ 금융투자업(5.19, 금투협회)  
⑦ 보험업(5.20, 금융위원회), ⑧ 부동산금융(5.21, 은행연합회)  
⑨ 여전업·저축은행업·신협(5.22, 여전협회), ⑩ 금융사 해외진출(5.27, 금융연구원)  
⑪ 중소기업수출입기업(5.28, 중소기업중앙회), ⑫ PEF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5.29, 금투협회)

< 현장의견 핵심규제 반영(사례) >

현장 의견		정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증권 계열사간 창구 분리로 종합서비스 곤란</li> <li>현행 영업점 공동사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li> </ul>	금융업권 간담회 (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증권간 복합점포에서의 계열사간 물리적 사무공간 구분 자율화</li> <li>계열사간 고객 동의에 기초한 정보 공유 간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 대출시 우수한 기술기업에도 담보, 보증 요구</li> <li>마이스터고 재학생을 청년 창업기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li> <li>예비창업자를 최하등급으로 평가해 특례보증대상에서 탈락</li> </ul>	창업벤처기업 간담회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창업특례보증의 창업 대표자 연령제한 완화(만 20세→만 17세)</li> <li>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창업자 특성에 맞는 기술평가모형을 새로 개발 적용(기술금융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회사가 겸영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중복절차 필요</li> <li>M은행이 파생상품 매매·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본법상 인가, 은행법상 신고가 모두 필요해 업무추진 지연, 비용 추가 발생</li> </ul>	보험업계 간담회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수·겸영업무 신고절차 간소화</li> <li>신규업무 추가 허용</li> <li>보험사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 허용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협중앙회의 주식운용 상한은 예탁금 자산의 10%임에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행정지도</li> </ul>	행정지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법령보다 더 강하게 지도한 이후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남은” 행정지도 폐지</li> </ul>

## 나 규제개혁 주요 실적

### ① (명시적 규제 개선) 등록규제 127건 폐지·완화(전체대비 14.0%)

- 창업지원 제약 해소, 자산운용 영업규제 개선, 기업 상장 활성화, 진입규제 네거티브 전환, 금융업 해외진출 지원 등

### ② (비명시적 규제 개선) 숨은 규제 총 680건 중 약 95% 일괄정비

- 총 680건 중 291건(42.8%)을 폐지하고 359건(52.8%)은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

#### < 2014년 금융위 규제개혁 주요 실적 >

명시적 규제 폐지·완화	비명시적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규제] 폐지·완화: 127건 (감축대상 규제 대비 14.0%)</li> <li>▪ [미등록규제] 폐지·완화 : 37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공식 행정지도 약 95%를 폐지·자율운영 (291건 (42.8%) 폐지, 359건(52.8%)은 업권에서 자율 운영으로 전환)</li> </ul>

검토 규제	→	발굴과제	→	개선과제
3,100건 (법령규제+숨은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장 12차례 현장간담회</li> <li>▪TF구성, 서베이</li> </ul>	1,76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69건 건별 검토의견 작성 및 공개</li> </ul>	703건

#### [ 2014년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에 대한 외부 평가 ]

언론	<p>“법령, 숨은 규제를 총망라한 종합개혁방안”이라는 공통된 평가와 함께, 현장행보시 강조했던 “금융업 외연확장 주력”,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결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논조</p> <p>※ 신문·방송 등 총 921건 기사화(3.1.~8.30.) 한국경제(1면 TOP), 조선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1면 노출 경제지의 경우 2, 3개면 전체를 할애해 주제별로 심층보도</p>
업계	<p>칸막이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반응이 대부분. 이는 업권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갈등이슈를 선제적으로 조율한 성과</p> <p>※ “증권사, 수익개선에 긍정적”(7.10., 연합) 금융투자업계, 규제완화 IB, 운용업 확대 계기될 것“ 환영(머니투데이 등) 은행 ”복합점포, 유니버설뱅킹 기대 커“(이데일리 등)</p>
전문가	<p>새로운 금융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개혁방향성을 적극 지지하면서, 규제개혁방안이 금융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p> <p>※ [금융연구원]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금융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조치” [신한금융지주]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행의지를 분명히 한데 긍정적” [KB경영연구소] “영업현장에서 대고객 금융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가져올 것”</p>

## 참 고

## 주요 핵심규제 개선 내용

과제명	개선실적	주요성과
창업관련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li> <li>* 연령요건 완화(20→17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 고교생 및 R&amp;D 벤처 등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li> </ul>
주택연금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연금 가입기준 합리화</li> <li>* 일시적 2주택자 및 다주택자 연금이용대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연금의 수요증가에 맞춘 노인 생활안정에 기여</li> </ul>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숨은규제 발굴을 위해 22개 관계기관을 통해 숨은 규제 목록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숨은규제 위주로 발굴·개선 하여 규제개선 체감도 극대화</li> </ul>
복합점포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 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소유 부동산 개량 개발을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의 자율적 자산운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li> </ul>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에서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li> <li>-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에 대체인증수단 제공(SMS, ARS)</li> <li>- ID/PW기반의 간편결제 선택시 추가인증없이 결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주도의 다양한 인증 및 결제방법 적용이 가능</li> <li>-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이용이 간편해져 무역역조 해소 및 온라인쇼핑시장 확대</li> </ul>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 비율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mp;A 제약 완화 등을 위해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개선</li> <li>*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사의 위험투자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모험자본 공급 촉진</li> </ul>
파생상품시장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운영의 자율성 확대</li> <li>*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개정</li> <li>- 전문투자자 참여 확대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자율성 확대 및 신시장 개설 등을 통해 투자상품 다양화 및 효율적 위험관리</li> </ul>



## 다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운영

- 정기적으로 4~6월 현장중심 간담회·서베이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7~8월 실무검토 후 9월에 일괄 정비
  - 기존 규제개혁 완료과제에 대한 현장반응 점검 및 과거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은 건에 대한 재검토 병행
- '15년에는 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금융혁신위원회 중심으로 추진
  - 금융구조 개혁을 통해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

### ② 금융규제민원포털 구축

- 규제개혁 상시화·투명성 제고, 금융권 보신주의 혁파, 행정지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금융규제민원포털을 구축

\* '15.2월까지 개발완료, 3월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 < 금융규제민원포털의 주요 기능 >



### ③ 규제비용총량 관리

- 금융규제에 부합하는 규제비용분석 매뉴얼 마련 및 기존 규제에 대한 비용분석 실시



## 2. 1·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는 총 12건(1차 9건, 2차 3건)

○ (1차) 총 9건 중 8건은 정부조치 완료, 1건\*은 방안마련 중

\*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도입여부 검토”(기재부 주관, 금융위 협업)

○ (2차) 총 3건 중 1건은 정부조치 완료, 2건은 관계부처 합동 TF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에서 진행 중

\* 국내온라인쇼핑몰 외국인 구매 활성화, 스마트폰 활용 금융 활성화

### < 1,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금융위 과제 내역 >

구분	과제명	주요 내용	현황	비고
1차	유한회사의 감사·공시 의무 강화 반대	일정규모 이하의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 및 공시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국회심의	주관
	국내보험사 외국인환자 유치허용	국내보험사가 외국인환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국회심의	협업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도입여부 검토	현행 과세체계내 수용가능성, 기존 세제지원 상품정비, 외국제도등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	방안마련	협업
	퇴직연금 규제 개선	기금형 제도도입 등 퇴직연금자산 운용방식 개선 추진	완료	주관
	자산운용수수료의 합리적 개선	국내 위탁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수수료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역량에 걸맞게 책정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완료	주관
	재창업 기업대표자 신용정보조회 한시적면제	우수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관리규약 개정	완료	주관
	연대보증 면제 민간 확대	기은·산은 등 정책금융기관부터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시중은행으로 확산	완료	주관
	전자금융거래제도 개선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완료	주관
	PEF 관련 규제개선	다양한 투자구조 허용, 자산운용 규제완화등 PEF 규제 합리화	완료	주관
2차	국내온라인 쇼핑몰 외국인 구매 활성화	온라인쇼핑몰 이용 전반의 규제 개선사항과 불편사항 해소 추진	TF운영중	협업
	글로벌 수준의 간편결제 서비스 환경 마련	보안성·재무적 능력을 갖춘 결제 대행업체는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할 수 있도록 개선	완료	주관
	스마트폰 활용 금융 활성화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 및 금융 거래가 가능한 환경 구축	TF운영중	협업

### 3. 규제기요틴 조치현황

- 금융위 소관 규제기요틴 과제 8건은 전부수용(4건), 부분수용(1건), 대안마련(3건)하여 제도개선(예정)

#### < 금융위 소관 과제 검토내용 : 8건 >

건의내용	검토내용	답변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막는 진입규제 완화	- 전자금융업 진출 위한 자본금 액수 완화 -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한도·이용한도 확대	수용
주류도매업 신용보증서 발급제도 개선(신용보증기금)	- 주류도매업에 대한 “보증취급 유의업종” 지정 해제	수용
면책채권 보증 차별 해소	- 면책된 경우 보증기관에서 일반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주금공, 신·기보)	수용
투자회사형 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제한(70%) 폐지	-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부동산펀드 투자상한 상향조정	수용
공시제도 개선 건의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진행사항 정기 공시 폐지 - 모회사 공시시 종속회사에 대한 공시 완화	-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은 투자자 정보제공 범위내에서 공시부담 최소화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부담은 완화하고 관련 규정은 명확히 개정	부분수용
주채무계열 및 감사인 지정관련 채무평가 방식 개선 - 부채비율 위주 평가방식에서 기업별·산업별 특성 반영	- 부채비율이 높은 주력사업(해운·조선·항공)의 특수성 감안하여 가점 조정	대안마련
펀드내 시총비중 10%이상 종목편입제한 완화	- 투자자보호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장성 있는 주식의 시총비중 이상 편입 허용	대안마련
공인인증기관의 등록 및 인증방법 평가관련 규제완화 - 인증평가 신청기준 완화	- 필요성이 줄어든 현행 인증방법평가 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기능 민간기관 이관	대안마련

## 4. 규제신문고 접수 및 조치현황

### 가. 접수 및 대응 현황

- 규제개혁장관회의(3.20일) 이후 총 316건이 접수(중복 건 제외시 205건)
- 답변 완료 된 311건 중 75건(24.1%)\*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용
    - \* 이 중 26건은 감독규정 개정, 규제방식 변경 등 후속조치 필요(조치 중)
  - 나머지는 형평성 문제, 건전성 문제 야기 등의 사유로 불수용
    - \* 불수용 건에 대해서는 불수용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추가로 가능한 조치 등을 안내

접수	답변완료	수용	후속조치필요	불수용 (중장기검토)
316건	311건	75건(24.1%)	26건	236건

### 나. 대표적 수용, 불수용 사례

제안내용	수용여부	검토결과
회생절차 종결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수용	실패한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재기 지원을 보다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코스닥시장 불성실 공시 관리종목 지정 기준 개선	수용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의 개정 완료
여신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방식 개선	수용	여신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방식을 Negative 방식으로 변경
자동차를 운행할 때에 한하여 보험가입	불수용	무보험 상태로 운행할 가능성이 높아져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오래된 채무에 대해 추심중단	불수용	채권의 회수는 채권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므로, 오래된 채권이라 하여 채권행사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려움

### 다. 향후 계획

- 수용이 불가한 사안이더라도 건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발굴하는 등 해결방안 적극 강구
- 특히, 수요자 중심으로 답변이 이뤄지도록 우수 사례 전파

## 5.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차질없는 개선

### 가 소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현황

□ 금융위원회 소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총 10개

- 보험사기·범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범죄, 꺾기 등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대부분
- 25개로 세부과제로 나누어 관리 중, 완료 22개, 부분완료 3개

#### < 금융위 소관 과제 목록 >

과제명	세부과제	완료여부
1. 보험사기·범죄 근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완료
	보험업법,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등 제·개정	부분완료
2. 보이스피싱, 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스미싱 등 대응 시스템 구축	완료
	신 입금계좌 지정제 시행	완료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	완료
	대포통장 의심거래자에 대한 예금계좌개설 절차 강화	완료
3.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 방지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추진	완료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완료
	대포통장 과다발생 금융사 현장점검 등 실시	부분완료
	대출빙자사기 피해금환급 원활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완료
4. 은행 꺾기 관행 개선	은행의 꺾기관행 근절을 위한 규제체계 개선	완료
5.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 방안 마련	완료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	완료
	금융회사가 유체동산 압류시 취약계층 보호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완료
6. 보금자리론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관행 개선	다세대주택 보유자의 보금자리론 이용시 화재보험 의무가입 폐지	완료
7. 신용보증기금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관행 개선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 업무처리기준" 개정	완료
	가격자문제 도입 및 시행	완료
8. 장애인 카드 발급시 장애유형에 맞는 본인확인 방안 마련	회사별 현황과악	완료
	대고객 고지강화	완료
	이행여부 점검	완료
9. 여신거래시 만기연장 가능여부 사전통지	대출만기연장가능 통보 현황 조사	완료
	관행개선방안 마련	완료
10.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경쟁 관행개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위주 운용관행 개선	완료
	특정사업자 간의 원리금 보장상품 집중교환 관행 개선	부분완료
	제공금리 차별 및 부당한 수수료 요구관행 개선	완료

\* 10개 과제 외 창조경제 활성화, 규제철폐를 위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제인 기술신용평가, 간편결제 활성화를 정상화과제로 추가 발굴하여 자체 추진 중

## 나 주요 과제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

### □ 주요과제 성과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 기술형 금융사기인 스미싱, 메모리 해킹은 시도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대책 추진 이후 크게 감소
  - 피싱·파밍 사이트 사전 차단, 스미싱 문자 분석 및 차단 시스템 구축 등으로 발생건수 대비 피해 발생율\*도 감소
- \* 발생건수 대비 피해 발생율(%)  
스미싱 : ('13) 92.8 → ('14.상) 37.7 / 파밍 : ('13) 22.1 → ('14.상) 15.5
- (보험사기 적발률 증가)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014년 상반기 2,869억원으로 전년 동기(2,579억원) 대비 11.2% 증가
- (은행꺾기 근절방안 시행) 관련 법령(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시행으로 꺾기 관행 개선 및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율 감소) 카드사(전업카드 9사, 겸영은행 11사)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 전년도 대비 17%p 감소
- (보금자리론 화재보험 의무가입 제도개선) 보급자리론 이용 다세대주택 보유자의 대출자의 보험료부담 완화('14.10월까지 380건, 46백여만원)
- (신보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제도개선)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보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감소

### □ 기대효과

- (사회안정) 전자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로 국민들의 물질·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안정 기여
-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꺾기·과도한 채권보전조치·장애인 금융차별·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 경쟁 개선 등으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 참 고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개선실적 및 주요성과

과제명	개선실적	주요성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13.12월) 및 보완대책(‘14.8월) 발표	- 스미싱 월평균 피해건수 80% 감소 - 발생건수 대비 피해발생을 감소 * (스미싱) (‘13년) 92.8→(‘14상)37.7% (파밍) (‘13년) 22.1→(‘14상)15.5
보험사기·범죄 근절	- ‘보험사기 근절대책’ 마련(‘14.7월) - 보험사기 적발실적 제고(기획조사)	- 보험사기 적발실적 증가 * (‘13상) 2,579억원→(‘14상) 2,869억원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 방지	- 대포통장 발급 비중 높은 금융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 신규 대포통장 개설 감소
은행 꺾기 관행 개선	- 꺾기 근절방안을 마련·시행 (‘14.2월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 꺾기 관행 개선으로 중소기업 금융부담 감소
취약계층 채무자 유체동산압류 개선	- 유체 동산 압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주기적 점검	- 취약계층 부동산 압류율 감소 * (‘12.10~‘13.2월)20%→(‘14.1~6월)3%
보금자리론 화재보험 의무가입 개선	- 다세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화재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 다세대주택 보유자 대출비용 절감 * 연간 약 4,600만원 절감
신보의 과도한 채권보전조치 개선	-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 업무 처리기준, 가격자문제 시행	- 채권보전조치 업체수 비율 감소 * (‘11~‘13년) 56.1% → (‘14.9월말) 55.0%
장애인카드 발급시 장애유형에 맞는 본인확인방안 마련	- 전업계 카드사(8개) 장애 유형별 본인확인 방법 마련	- 장애유형별 장애인들의 카드 발급 편의성 제고
여신거래시 만기연장여부 사전통지	- 대출만기 연장가능 통보 현황 조사 -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만기연장 가능여부를 사전 통지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 퇴직연금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 자사상품 위주 운용관행 개선 - 특정 사업자 간의 원리금보장 상품 집중교환 관행 개선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 기술정보 DB(TDB) 구축 - 기술신용평가기관(TCB)도입	- 기술신용평가 대출이 빠르게 확산* * 4개월(7~10월)만에 3.6조원 공급
간편결제 활성화	-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 Active X 이용환경 개선	-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통해 소비자불편 해소

## Ⅱ. 2015년도 예산집행사항

□ 2015년 예산집행현황('15.8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예산액	지출액
1. 인건비	20,631	14,336
2. 기본경비	7,067	4,321
3. 사업경비	192,619	56,886
· 저축의날행사및저축장려	68	7
· 농어가기금출연	49,390	49,390
· 금융소비자보호	156	49
· 자금세탁방지추진	1,226	763
· FIU전산망구축운영	4,786	2,353
· 금융관련국제협력	441	290
· 금융중심지추진	146	85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621	390
· 산업금융지원	130,000	-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	515	276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88	58
· 정책연구개발	619	40
· 금융정책알리기	401	190
· 청사유지관리	3,682	2,749
· 불합리한금융관행조사및개선	230	112
· 자본시장조사단신설운영	250	134
4.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000,000	377,000
·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전출금	1,000,000	377,000
합 계	1,220,317	452,543



### Ⅲ. 2015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 목 차

1. 금융개혁 추진 .....	97
2.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105
가. 거래소 경쟁력 강화 .....	105
나. 핀테크 육성 .....	106
다. 기술금융 활성화 .....	108
라. 정책금융기관 기능 제고 .....	109
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110
바.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및 금융중심지 추진 ...	111
사. 금융기관 민영화 추진 .....	112
3.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114
가.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추진 .....	114
나.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제고 .....	115
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116
라.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	118
마. 기업공시제도 개편 .....	119
4. 안정적 금융시스템 기반 구축 .....	120
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120
나. 기업구조조정 제도 정비 .....	122
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	123

## 1

## 금융개혁 추진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4대 구조개혁 과제로서 금융개혁 추진

### (1) 그 동안의 추진성과

#### 추진방향 및 체계

□ 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이를 통해 금융개혁이 지향하는 비전 3가지를 달성

- ①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증식
- ② 중소·벤처기업과 서민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 ③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 '15.3월, “3+1 추진체계” 구축 및 기본방향 수립

- 금융개혁회의 : 경제,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심의기구
- 금융개혁 추진단 : 관계부처 1급 및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구성. 협업과제 추진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 금융위원 합동으로 구성. 현장순회, 애로사항 발굴·해소
- 금융개혁 자문단 : 학계·연구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연구용역 및 안건 자문

#### 주요 개혁과제 추진현황

① 보수적 금융관행 혁신 → 적극적·창의적 금융문화 정착

○ 컨설팅 검사도입 등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향(4.22)

\* 종합검사 점진적 축소, 확인서·문답서 징구 관행 폐지 등

○ 기관·금전제재 중심의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9.2)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6.10)

## ② 거래소 구조개편 등 자본시장 육성

- 코넥스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혁 방향(4.23)
- 거래소 구조개편 등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7.2)
-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7.20)

## ③ 핀테크 활성화 및 다양한 서비스 출시 기반 마련

- 사전규제 최소화 등 IT·금융 융합지원방향(1.27)
- 핀테크 지원센터(3.30)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설치(4.14)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방안 마련(5.18),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마련(6.18), 클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 국회 통과(7.6)

## ④ “대출” 중심에서 “투자” 기반 기술금융으로 확대

- 기술금융 상위 은행 및 TCB사 대상 실태조사 실시(4~5월)
-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추진(6.8)

\* '15.7월말 기준 약 44.2조원, 68,581건 규모로 기술금융 공급

## 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추진

-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 관리 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품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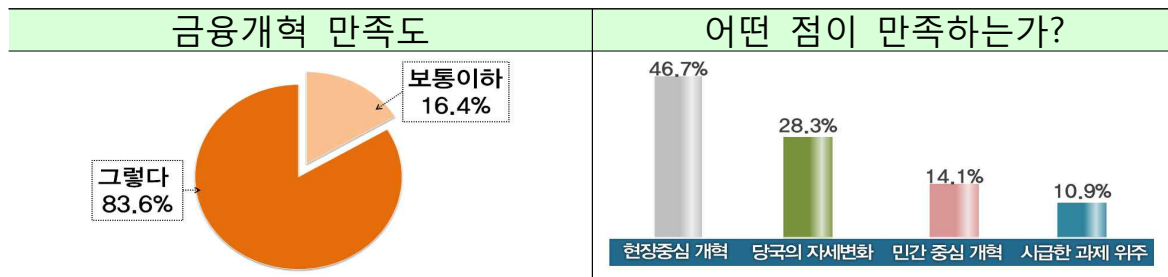
## ⑥ 외환·세제·연금 분야의 부처협업체계 구축·가동

- 금융개혁 추진단 등을 통해 외환·세제·투자금융·연금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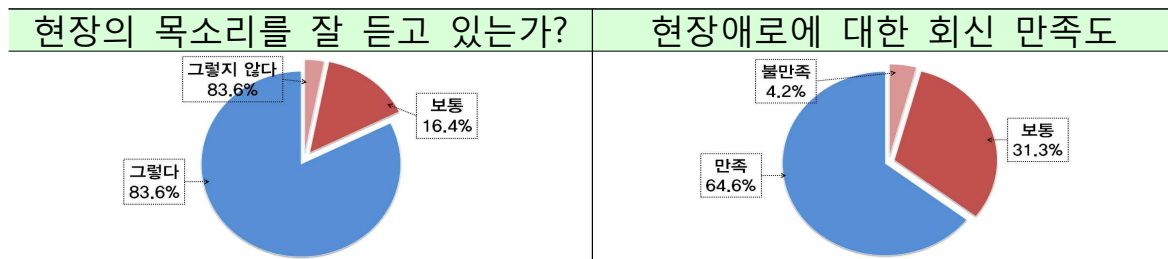
## 참고1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주요 결과

- (조사주체·시기) 한국 갤럽(전화 설문), 6.25일 ~ 6.29일
- (대상) 총 600여명의 인력 풀 중 110명 샘플링
  - 금융권 CEO(10인), 금융권 실무자(60인)
  - 학계/연구원(20인), 언론(10인), 기술금융 기업/IT 기업(10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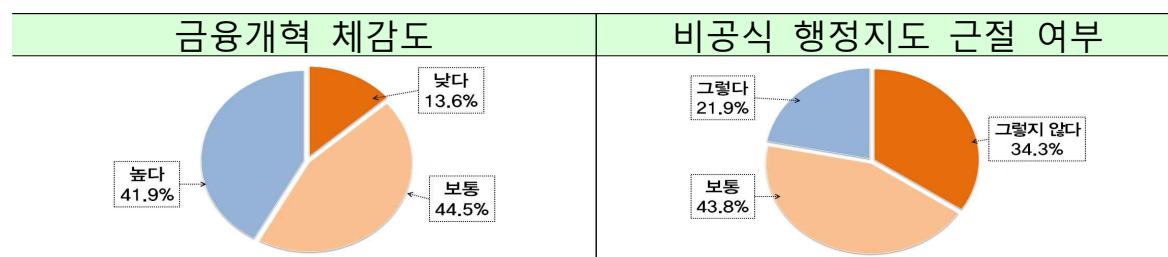
### □ 금융개혁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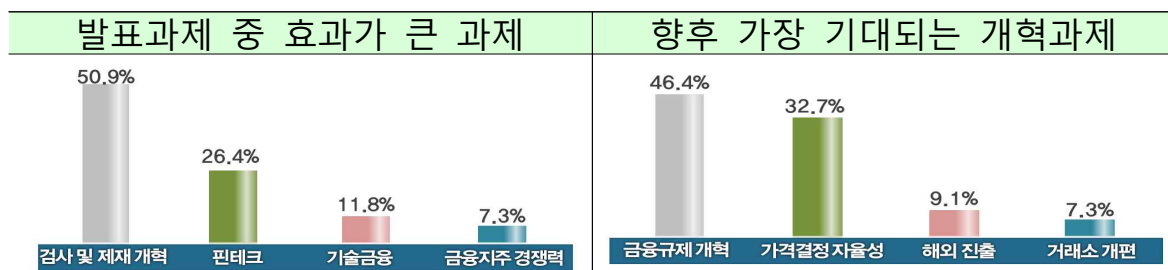
### □ 현장점검반의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 □ 금융개혁 체감도는 보통 답변이 가장 많음



### □ 향후 가장 기대되는 과제는 금융규제개혁



## 참고2

## 검사·제재 개혁의 주요내용

### ①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마련 (4.22)

-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검사 현장에 반영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검부담 완화

\* 컨설팅 검사 도입, 종합검사 점진적 축소, 확인서·문답서 징구 관행 폐지

-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추진

#### [ OO은행 종합검사시 임직원의 발언 ('15.4.13~5.13) ]

"은행의 합리적 의견을 검사역이 적극 수용하는 등 '단순 지적위주가 아닌 컨설팅 방식의 검사'라는 검사관행 개선의 취지를 느낄 수 있었음"

"확인서 징구방식이 검사의견서 교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확인서 제출시 있었던 검사역과 은행 직원의 갈등과 마찰이 사라졌습니다."

"면담시 은행 임직원의 일정, 사정 등을 최우선 반영하여 시간 조정하는 등 현업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②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6.10)

- 제재심 등의 안건 중 본인 관련 부분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수용가능성을 제고

### ③ 제재로 인해 금융사 신규사업이 제한되는 문제점 개선(6.25)

-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여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사업 진출이 어려운 문제 개선(3년→1년으로 제한기간 단축)

\* 최근 3년 이내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68개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가능

### ④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 (9.2)

-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아닌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하는 체제 정착
-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한 제재 관행 철폐
- 금전제재 실효성을 위해 과태료는 약 2배, 과징금은 약 3~5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 위탁(9개법 개정필요)

### 참고3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한 제도개선

□ 그 동안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9월초까지 215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약 2,65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음

\* 금융위, 금감원, 협회 파견인원으로 구성된 은행·지주,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4개팀으로 출범('15.3.26)하여 4.2일 최초 현장방문

○ 1~12주차까지 접수된 건의 중 현장답변, 법령해석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1,436건(수용률 46%) 전부를 회신 완료

○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현장점검반 출범 이후 84건 접수하여 이중 43건에 대해 회신완료

\* 접수 및 보완 중 14건, 내용검토 중 27건

○ 금융위는 현장점검반을 총괄·지원하기 위한 상시조직으로 「금융현장지원단\*」을 설치('15.8.13)

\* 단장, 현장점검팀·현장지원팀 2개팀으로 구성

□ 향후 금융개혁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감안, 금융당국의 對 시장 의견소통 창구로서 현장점검을 재포지셔닝할 계획

① 그동안의 「금융현장점검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현장 점검 체계를 상시화·체계화해 나갈 예정

②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와 금융회사 보신주의 타파 등 금융개혁의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점검의 대상·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방법론을 개선해 나갈 계획

③ 아울러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등의 내용을 금융회사, 금융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전파기능을 강화할 예정

## (2) 앞으로의 추진방향

- ◇ 금융규제개혁 및 자산관리 등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령개정 등 이행방안도 차질없이 준비

### 주요 추진과제

#### ①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

- 금융규제의 전수 조사·유형화\* (15.6월)를 토대로 규제 하나 하나에 합리화 기준(7개)을 적용하여 점검·개선

\*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 < 합리화 기준 >

- ① 사전 규제 → 사후 책임 강화, ② 글로벌 기준에 부합
- ③ 오프라인 → 온라인, ④ 포지티브 → 네거티브, ⑤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
- ⑥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⑦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 규제 또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는 각종 구두지도,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정비
- “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 도입,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

#### ②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추진

- 금융투자, 자산운용, 보험 등 세부 금융권역별로 경쟁과 자율 제고 등 개별 금융업권의 발전 방안 마련
- 특히, 저금리·고령화의 진전으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업의 자산관리기능 강화

\* 예) 업권별 칸막이 제거, 투자자문업 육성 등 →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과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수요 충족



### ③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 맞춤형 정책금융 및 정책-민간금융 협업모델을 구축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투융자 복합금융을 강화

### ④ 금융교육 대상 및 횟수 대폭 확대 등 금융교육 강화

- '1사1교 금융교육' 등 금융회사와 학교간 연계 강화, 소비자 맞춤형 교육 확대 등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 ⑤ 금융외교채널 확충 등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 중점진출 대상국 금융당국과 정례협의 추진 및 현지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등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제거

### ⑥ 새로운 금융모델을 차질없이 도입하여 혁신적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신청 접수(9월말)를 진행하여 예비인가(12월말)를 거쳐 '16년 상반기 본인가 및 출범
- 클라우드 펀딩 시행('16.1월)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 및 중앙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구축
-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출시('15.4/4분기)
- 은행 계좌이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6.2월부터 전국 은행지점을 통한 서비스 제공

### ⑦ 부처 협업과제 지속 추진

- 국민의 노후 안전판 강화 및 금융산업 성장기회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연금제도 개선 추진 등

## 이행 및 일정

◇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하고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 → 상시 평가 등 지속 점검·보완

□ 주요 개혁과제들은 연내 신속히 확정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순으로 추진
- 업권별 경쟁력 강화방안 등은 9~11월중 순차적으로 마련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거래소 구조개편 등 既 발표한 과제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및 서베이 추진

- 검사·제재 관행, 핀테크, 기술금융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금융개혁 자문단 등 외부기관을 통한 실태점검 추진(4/4분기)
- 전문가 및 이용자 대상 금융개혁 심층 서베이(12월중)

□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

- 금융규제개혁 등 개혁방안 확정시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 제출

\* 既 상정된 법안: 전자금융거래법(핀테크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거래소 개편),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상정 필요 법안: 전자증권법(전자증권도입, 10월), 여전법(투자금융활성화, 12월), 금융지주회사법 등 9개 법안(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16년) 등

## 2

##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 자본시장 선진화, 핀테크 육성, 정책금융 기능제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가. 거래소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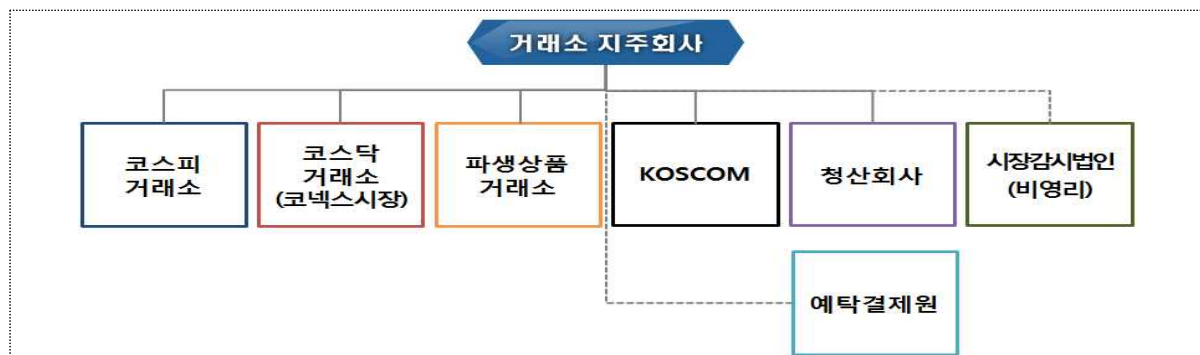
#### (1) 추진 실적

- 지난 7.2일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와 공공기관적 경영방식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 → 지주회사 전환 및 IPO 추진
  - 거래소가 IPO를 통해 완전한 영리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공적기능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
    - 이를 위해 IPO의 전제조건으로 상장차익 출연, 예탁결제원 지분 정리, 독립 시장감시법인 제도 도입 추진

#### (2) 향후 계획

-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준비
- 자본시장법 개정 후 개정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예탁원 지분정리, 시장감시법인 설립 등을 전제로 거래소 지주회사 IPO 추진

#### 【 거래소 지주회사의 기본 구조 】



## 나. 핀테크 육성

### (1) 추진 실적

- (진입 장벽 완화)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록자본금 완화\*,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및 심사항목 간소화(5월) 등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旣 발의(7.7일)

- (핀테크 생태계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3월) 및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제휴·협력 MOU 체결\*\* 지원 등

\* 사업성 검토, 금융회사 연계 등 약 175건의 상담 제공 / 총 4회의 Demo-day 개최

\*\* 기업가치평가, 보안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건의 제휴·협력 체결('15.8월)

- (규제 패러다임 전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3월) 폐지 등 기존 사전규제를 사후점검·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

- (다양한 서비스 출시기반 마련)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방안 마련(5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6월), 클라우드 펀딩 입법화(7월)

### (2) 향후 계획

-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및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개선 노력 지속

- 인터넷 전문은행<sup>1)</sup>, 클라우드 펀딩<sup>2)</sup>,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sup>3)</sup>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조속한 출시를 차질 없이 준비

1) 현행법 체계 下 금년내 1~2개 시범인가(12월중)

2) 하위법령 마련(10월),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12월) 등 제도 시행('16.1월) 준비

3) 생·손보험회로 나뉘어진 보험 비교공시 사이트를 단일 사이트로 개편(10월)

###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 □ 추진 실적

- ICT·금융 융합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방안’ 발표(6.18)

\* 주요국의 경우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운영 중('95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된 후, 미국 20여개, 일본 8개 및 최근 중국도 2개 인가·영업중)

#### □ 추진 방안

- (1단계) 현행법 체계下에서 1~2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9.30~10.1), 심사(10~11월)를 거쳐 예비인가(12월), 본인가('16년) 추진

- (2단계) 은행법 개정안(7.3, 신동우의원 발의\*)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근거하여 추가 인가

\*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의, 최저자본금 및 은행지분 보유 규제 일부 완화 등

- 은산분리 원칙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일부 완화\*

\* 대기업집단이 아닌 ICT기업 등이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지분보유 규제를 현행 4% → ‘50%이내’로 완화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보다 강화\*

\*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축소(자기자본의 25%→10%)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자체를 금지

## 다. 기술금융 활성화

### (1) 추진 실적

- 기술금융 인프라로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기술DB(TDB)를 조성하고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은행권 대출 개시('14.7.~)
-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내실화 및 기술기반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추진('15.6.8.)
  - \* (여신) 형식적인 기술평가 방지를 위한 실적 집계방식 및 평가체계 개선 (투자) 기술평가 기반 펀드 조성(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IP투자펀드)
- 은행이 자체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 방안으로서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15.8.27.)
- '15.7월까지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총 68,581건, 약 44.4조원의 대출자금이 국내 중소기업에 공급(잔액 기준, '14.7.~'15.7.)
  - \* '15.7월 중 공급된 기술신용대출 2.6조원 중 새로운 TECH평가기준에 따른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신규대출 및 대출증액분의 합계)은 2.2조원 규모(83%)
-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일반 중기대출 대비 건당 대출금액 4.6억원 증가(2→6.6억원), 금리 0.35%p 인하(3.94→3.59%)
  - \* 기술신용대출 이용기업 중 82.3%가 “매우만족” 또는 “만족”(400개 대상)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기술금융 이용실태 및 의견조사('15.4.)」)

### (2) 향후 계획

- 우수 기술기업에 연간 20조원의 기술신용대출\*을 신규 공급
  - \*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기준(기간연장 및 단순대환 제외) : '15년 약 26조원 공급 전망
-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에 따라 '16년 하반기부터 은행이 직접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대출을 실시
- 연내 투자형 기술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통해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 등 기술형 모험자본을 육성

## 라. 정책금융기관 기능 제고

### (1) 추진 실적

- 그동안 정책금융은 기관 간 중복을 해소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

\*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13.8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14.1월)

- 정책금융 단일화를 위해 산은지주~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한 '통합 산은' 출범('15.1월)

- 선박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 자회사로서 해운보증기구(한국 해양보증보험) 설립('15.8월)

- 창업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범위 확대

\* 우수 기술력(AA등급 이상: 자동면제, A등급: 선별면제) 보유 기업에 대한 대표이사 연대보증 면제('15.4월)

\* 연대보증 면제 기업(BBB이상)을 창업 1년내 → 3년내로 확대('15.9월)

- 한편, 창조 경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창의·혁신·기술기업의 성장 촉진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과 TF를 구성하고 정책금융의 역할강화 방안 검토 중('15.4월)

<정책금융(산은, 기은, 신·기보) 역할강화 기본 방향>

- ◇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
- ◇ 정책 금융기관별 핵심 기능에 집중하고 민간 협업을 강화

### (2)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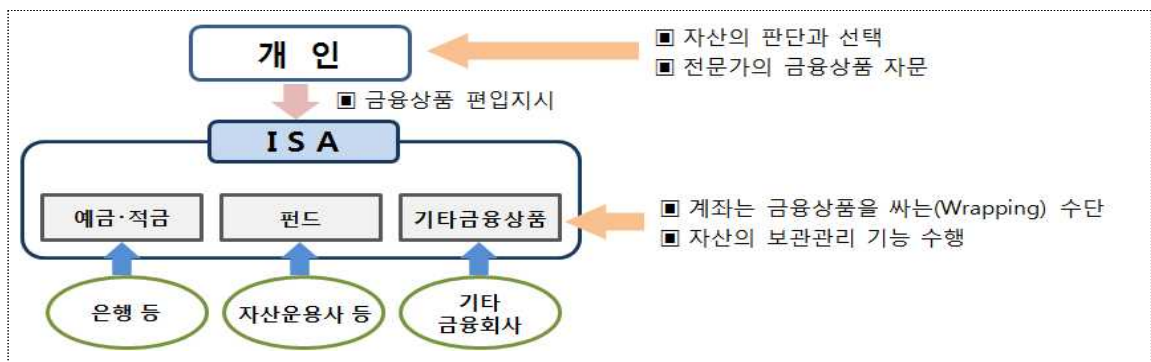
- 정책금융 역할강화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 (1) 추진 실적

-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이체 내역을 다른 계좌로 한꺼번에 이전함으로써 고객 자산관리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
- (기본구조) 가입자가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하는 계좌



- (가입대상·납입한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sup>1)</sup>가 가입 가능하고,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5년간<sup>2)</sup> 납입

1)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2) 15~29세 가입자·일정소득 이하 가입자는 의무가입기간을 5→3년으로 완화

- (세제혜택) 계좌내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

### (2) 향후 계획

-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9.11)되었으며, 하반기 중 국회 통과시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
-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 바.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및 금융중심지 추진

### (1) 추진 실적

□ (해외사업) 금융회사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15.7월) 및 추진

- 주요진출국 금융당국과 정례협약\*, 6개은행 공동대출·무보 보증 21억불 해외SOC펀드 협약\*\*, 해외진출 걸림돌 규제 개선\*\*\*

\* 한중일('06~), 일본('12~), 영국('14~), 인나('15~) 개최 / 베트남('15.8) 개최합의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각 3.5억불 금융지원 협약 체결(8.17일)

\*\*\* 금융기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유효기간 연장, 은행 일부 해외법인의 내부통제 담당직원 겸직 허용 등

□ (금융중심지 추진) 「금융중심지법」 제정('08) 및 금융중심지 지정(서울\*·부산\*\*, '09), 3차례 기본계획 수립 등 지속 추진

- IR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홍보, 외국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 구축 및 경영·생활환경 개선 등 지원

\* (서울시) 자산운용업 등 중점 투자유치산업을 선정하고, 자금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15.7, 조례제정)

\*\* (부산시) 해양금융종합센터 설치('14.9) 및 한국선박금융 등 해양금융 전문기관 유치('15.5)로 해양금융 기능 강화

### (2) 향후 계획

□ (해외사업) 정례협약의 대상국 확대(중국, 인도, 미얀마 등), 해외SOC 펀드 공동대출 본격화 및 잔여 규제개선과제\* 연내 완료

\* 해외지사 등의 설립절차, 회사형 공모펀드의 최소지분율,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증제한, 보험사 해외SOC금융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 등 개선

□ (금융중심지 추진) 긴 호흡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4차 기본계획\*('17~'19) 수립

\* 금융규제방향 변화, 중국 금융시장 개방 등 금융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 반영

## 사. 금융기관 민영화 추진

### 우리은행

#### (1) 추진 실적

- ☐ '10년 이후 4차례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우리은행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매각이 성사되지 않음
-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5.7월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방향' 발표
  - 매각방식은 민영화 3대 원칙을 감안하면서 매각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주주 또는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매각방식 추진
    - \* 민영화 3대 원칙 : 회수극대화, 조기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 과점주주 형태의 지배구조는 소수의 주요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
  - 매각물량은 민영화 과정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upside potential) 향유로 회수극대화를 추구하도록 예보가 일정 지분을 보유
    - 먼저, 과점주주 매각방식 또는 경영권지분 매각방식을 추진하여 예보 지분 48.07%中 30%~40%를 매각하고,
      - \* 금융 관련법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최소지분으로 규모로 보고 있는 30% 이상을 매각대상으로 설정
    - 잔여 지분(최대 18.07%)는 기업가치 상승을 향유하며 매각
  - 조기 민영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 병행 추진
    - 우리은행은 자체적인 기업가치 제고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및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원점(Zero-base) 제도 개선 추진

#### (2) 향후 계획

- ☐ 기업가치 제고, 시장수요 확충을 통해 매각여건을 성숙시키고 면밀히 매각수요자를 탐색(예: 중동국부펀드 등)하여 민영화 추진

## 대우증권 등 산은 자회사 매각

### (1) 추진 실적

- '13.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시 산은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매각 추진 계획을 밝힘

\* 매각대상 :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KDB생명

\*\* KDB인프라자산운용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생명은 '14년 중 2차례 매각을 추진

- 금년 초 「2015년 업무계획」 중 대우증권 매각 추진 계획을 발표

- '15.8.24 산업은행이 대우증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의 매각계획을 발표

\* 매각 대상(보유주식 전량) :

대우증권 1억4,048만주(43%), 자산운용 778만주(100%), 캐피탈 6,212만주 (99.9%)

- '16.1/4분기까지 조속히 매각하고, 대우증권 등 매각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

\* 매각 원칙 : ❶ 조속한 매각 ❷ 매각가치 극대화 ❸ 국내 자본시장 발전

- '15.9.4 산업은행은 원활한 매각 진행을 위해 매각자문사 등을 선정(국내·국외 매각자문사 각 1개, 법률·회계 자문사 1개)

### (2) 향후 계획

- 산업은행은 10월 중 매각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매각작업을 진행할 예정

- '15년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16.1/4분기까지 매각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 비금융자회사의 경우 정책금융 지원 및 투자목적을 달성한 경우 신속한 매각을 추진할 계획

### 3

##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 가.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추진

#### (1) 추진 실적

-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마련(6.23)
  - 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에 중점
- 동 방안에 따라 정책 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고용·복지 연계 강화 등 세부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중
  -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상한금리 인하(12%→10.5%, 8월)
  - 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 일자리 제공 - 재산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상품(드림셋)\*' 지원 실시(8월말)
    - \*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 일부를 저축(최대 월 20만원) 하면 정부에서 매칭 저축(3년 적립시 최대 2천만원 수령 가능)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한도(50만원) 신용카드 발급(7월)
    - ※ 그외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1천만원→2천만원), 저소득·저신용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1,200만원 이내) 등 실시 중(7월)

#### (2) 향후 계획

-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통과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추진
-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34.9%→29.9%) 함으로써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
- 금리 인하 등 최근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재산정될 수 있도록 유도

## 나.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제고

### (1) 추진 배경

- 은행,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 등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지역 고객기반 위축
- 이러한 상황에서, 본연의 역할인 지역/서민 중심 영업에서 벗어남에 따라 문제점 유발
  - 대형 저축은행의 광역화\* 및 전국단위 공격적 영업\*\* 증가
    - \* 저축은행은 대부업계·외국계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
    - \*\* 공격적 대출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 전국단위 고금리 신용대출 등
  - 상호금융권은 담보대출, 비과세 예탁금 위주의 영업방식으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 약화

### (2) 주요방안 (9.10일,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

- ① 민간서민금융회사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외형확대를 지양\*하여 서민금융 공급 강화
  - \* 영업구역 확대시 합병 인가 불허(부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시만 예외적 허용)
- ②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서민에 필요한 중금리·신용대출에 적극적인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마련\*
  - \* 고객접점 확대 지원, 부대업무 우선 승인 등
- ③ 여신심사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제 합리화
  - \* 대부업-저축은행 간 신용정보 공유, 신용평가시스템 정교화
- ④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대형사 건전성 규제를 강화(자본/자산건전성 기준 강화)하고, 업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강화

## 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1) 추진 실적

□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14.12월) 등에 따라 비교공시, 금융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

- ① (비교공시) 권역간 비교가능성이 높은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정보를 통합 비교공시('15.7월 방안 발표, '16년 가동 예정)
- ② (실태평가) 기존 금융회사 민원 건수 위주 민원발생평가 대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종합 평가('15.7월 방안 발표, '16년 도입 예정)
- ③ (금융교육)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교육의 초·중·고 정규 교과 반영(교육부와 협의) 추진 중

\* 금융위(부위원장)·금감원·예보·신복위·청교협·금융협회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

- 또한, 금융소비의 쉐과정\*을 규율하는 기본법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법안소위 계류)

\* 사전 정보제공 → 금융상품 판매 → 사후 피해구제

□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추진

- '14년중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적발된 인원은 84,385명으로 '13년 대비 금액은 15.6%, 인원은 9.4% 증가

#### 【 보험사기 적발 현황 】

구분	'12년	'13년	'14년	증감률(%)
적발금액(억원)	4,533	5,189	5,997	15.6
적발인원(명)	83,181	77,112	84,385	9.4

- 보험사기 **취약분야**(의료기관,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인력을 보강(특별조사팀 : 1팀→2팀)하여 **기획조사 역량 강화**

\* 외제차량번호 세탁을 통한 보험사기 의심자 20명, 13억원 적발('15.3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불법 사무장병원 57개소 조사 실시('15.6월)

- 금융위·금감원·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교육·홍보협의회**를 구성하여 보험사기 예방 관련 **홍보·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 보험사기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예방광고 및 프로야구 중계 케이블TV 가상광고 등 실시

## (2) 향후 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법령外 시행가능한 정책 과제를 적극 추진

-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소비자에게 일정기간(예: 7일)내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는 방안 추진('15.9월 중 방안 발표 예정)

- 금융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행 금융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15.10월 예정)

- 또한, 금소법 조속 제정을 위해 국회협의 등 노력 지속 경주

-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 등 입법노력 지속('15.하반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13.8.27일)

- 조직적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 시스템(IFAS)에 **사회관계망 분석기법(SNA)\*** 도입('16.상반기)

\* 보험사기가 의심자들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의심자 그룹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정비업체·가해자·피해자, 병원·환자 공모형 보험사기에 대응

## 라.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 (1) 추진 실적

□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계좌로 한꺼번에 손쉽게 일괄이전함으로써 고객 자산관리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

○ 은행권 공동으로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 구축

\* 각 은행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고객 누구나 무료로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으로 구축한 세계 최초의 통합 인프라임(www.payinfo.or.kr)

\*\* 영국·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고객이 은행지점을 방문하면 서비스 제공 중

○ Payinfo를 통해 은행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 필요시 건별로 선택·‘해지’ 가능(‘15.7.1)

#### 【 계좌이동서비스(Account Switch Service) 개요 】

○ (주요 서비스) 자동이체\* 연결 계좌를 변경

\* 요금청구기관에 이용료 납부(예: 통신비), 고객 스스로 설정한 자동송금(예: 월세·동창회비)

○ (부가 서비스) 리다이렉션,\* 기존 계좌 해지, 잔고이전 등

\* 요금청구기관이 오류 등으로 기존 계좌로부터 출금 요청시 계좌 변경내역을 통보

### (2) 향후 계획

□ Payinfo를 통해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부터 계좌‘변경’서비스를 시작(10월말) → 전체 요금청구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산(‘16.6월)

\* 요금청구기관(약 7만개) 중 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총 62개)이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약 2/3 차지(‘15.6월)

○ Payinfo(온라인) 뿐만 아니라 전국 은행지점(오프라인)에서도 자동이체에 대한 조회·해지·변경서비스 제공(‘16.2월)



## 마. 기업공시제도 개편

### (1) 추진 실적

- 현장간담회('15.5월)를 통해 제기된 기업 공시담당자, 투자 정보 수요자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시제도 개선 추진

\*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제도의 복잡성 및 과도한 공시의무 부담 해소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정보 신뢰성 제고 요청

-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을 발표('15.6월)하고, 공시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이행 완료 ('15.7월)

\* 투자자보호 공시강화, 공시정보 신뢰성 제고, 중복공시 통폐합 및 불필요한 공시의무 폐지, 공시종합시스템 구축, 자율적 해명공시 제도 도입 등

- 중복공시 통폐합, 불필요한 공시의무 완화 등으로 기업 입장에서 전년대비 약 6.7%(약 2,300건) 공시부담 완화 기대
- 아울러, 투자판단에 미칠 중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시 규제 신설\*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예: ① 주식형 사채 취득사항 공시, ② 최대주주 지위변경 우려가 있는 주식담보제공 행위 공시, ③ 분식회계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조치 공시 등

### (2) 향후 계획

- 거래소·금감원·상장협 등과 협업으로 기업공시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생산 비용의 획기적 감축 유도

(1단계 : '15년말, 2단계 고도화 작업 : '16.3월)

- 금융투자자를 위한 중요 정보의 적시성있는 전달을 위해 현행 열거주의식 공시제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열거주의) 공시규정에 나열된 중요 정보만 공시

→ (포괄주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정보를 스스로 공시

## 4

## 안정적 금융시스템 기반 구축

- ◆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

## 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1) 동향

- (총량) 과거 9%대에서 6%대로 증가속도가 안정화되던 가계부채는 '14년부터 증가세 확대('15.6말 1,130.5조원)

\* 가계신용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한국은행) :  
( '05~10년 평균)9.3 ('11년)8.7 ('12년)5.2 ('13년)5.7 ('14년)6.5 ('15.2분기)9.1

-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

\* 가계대출 증가(조원, 금감원) : ('13.8~'14.7월)40.7 → ('14.8~'15.7월)89.4  
은행 주담대 증가(조원, 금감원) : ('13.8~'14.7월)19.2 → ('14.8~'15.7월)66.0

- 실수요자 자금이용 제약완화 등에 따른 주택시장 활성화\*,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 주택거래(만호, 상반기) : (08)53.4 (10)39.1 (12)34.4 (14)47.3 (15)61.1  
공동주택 분양승인(만호, 상반기) : (14상)14.7 (14하)19.8 (15상)21.8

- (구조) 은행권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가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속 개선

- '15.3~4월 주택금융공사의 32조원 규모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금년 상반기 중 '15년말 정책목표(35%)를 거의 달성

## 【 연도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은행권, %) 】

(단위 : %)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15.3말	'15.6말
분할상환	6.4	7.7	13.9	18.7	26.5	29.8	36.4
고정금리	0.5	3.1	14.2	15.9	23.6	27.6	34.4

## (2) 대응방안

◇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

□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7.22)」을 차질없이 이행

①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

- 은행 고정금리·분할상환 연도별 목표 상향 [15년 35% → 17년 (고정)40, (분할)45%]
- 분할상환 방식이 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은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

② 금융기관의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 취급 유도

- 주담대 취급시에 활용하는 소득증빙 자료의 객관성 제고
- 변동금리 주담대인 경우 금리상승 리스크를 감안하여 대출한도 계산 등
- 상환능력 심사시에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감안하여 심사

③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非주택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풍선효과)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상호금융권 부동산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
- 토지·상가의 담보인정 기준 강화 등

④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 제고

- 바젤3에 따른 은행 필요자본 산정시 가계부채 리스크를 감안
- 주금공 자본금 확충, 주금공 유동화증권을 한은의 대출시 담보로 인정

□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대출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

\* 8월부터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구성·가동중(8.21일, 8.28일)

## 나. 기업구조조정 제도 정비

### (1) 추진 실적

#### □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추진 현황

##### ① 대기업그룹 구조조정 :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 제도

- 매년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대기업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선정 → 취약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15.5월)

\* '15년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

'14년말 금융권 신용공여액 1조 2,727억원('13년말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41개 계열 선정

##### ② 개별기업별 구조조정 : 기촉법 및 채권은행 자율협약

-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기준)은 상반기('15.6월), 중소기업은 하반기('14.10월)에 신용위험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등 추진

\* 개별기업별 구조조정 현황

- (대기업)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35개사(C등급 16개, D등급 19개) 선정  
(구조조정대상 대기업(개)):('12)36→('13)40→('14)34→('15)35)

- (중소기업)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125개사(C등급 54개, D등급 71개) 선정  
(구조조정대상 중소기업(개)):('12)97→('13)112→('14)125)

### (2) 향후 계획

- ① (신용위험평가 강화) 신용위험평가의 공정성·엄정성 제고 및 업종별 수시평가 활성화를 통해, 개별기업에 대한 점검 강화
- ② (기촉법 상시화) 현행법 일몰('15.12월말) 이전에 기촉법 상시화 작업을 완료하여,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
- ③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 부실금융채권 등을 출자받은 민간 PEF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토대로 한 구조조정 시스템 검토
- ④ (기 타) 중소기업·해운사 자산매입 후 임대지원(S&LB), 해운보증기구, 회사채신속인수 등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 기업 지원

## 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 (1) 추진 실적

□ 조사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  
엄정 단속

○ (패스트트랙) 신속한 증거 및 신병확보가 긴요한 사건은  
즉시 검찰에 통보

\* '15.1~8월간 패스트트랙으로 총 12건, 자체조사 등 증선위 의결을 통해  
37건을 검찰 고발·통보

구분	부정거래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계
패스트트랙	2	6	4	12
증선위 의결	6	14	17	37

○ (강제조사) 자체 조사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과 침단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 효과성 제고

\*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2회 실시('15.6월)하고 검찰의  
협조를 통해 디지털포렌식(복원) 기법 활용

### (2) 향후 계획

□ 중요 투자정보에의 우월한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 및  
상장사 임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 이를 위해 제보·접수 활성화를 위한 유선 핫라인 및 온라인  
제보 홈페이지 개설 등 조사 인프라 강화

□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규제 사각  
지대를 해소

\* ① 다차정보수령자 ② 외부자가 생성한 중요정보 이용 ③ 목적성  
없는 시세조정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15.7.1 시행)

○ 투자자·금융회사 및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해설책자 제작·배포 및 찾아가는 설명회 지속 추진

#### IV. 2014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 목 차

## 1. 금융위원회

1. 과도한 전관예우로 은행의 공공성이 무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133
2.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연구원의 중복업무를 허용하여 중복, 비효율 구조를 만든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33
3. 금융보안업무를 지급결제서비스 운영기관에서 분리하는 방안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34
4. 금융위원회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강제적으로 금융ISAC업무를 통합하지 말고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134
5. 현재 보안관제가 미흡한 금융업체와 ISAC에 연계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134
6. 전산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134
7. 금융 ISAC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시 통합대상기관 직원들이 전담기구로 이직을 하지 않을 경우 금융보안이 더욱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35
8. 기술금융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135
9. 민간으로 한정된 기술신용평가기관을 공공성이 있는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135
10. 기술금융 추진에 있어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이나 지원시스템이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내실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은행과 함께 보조를 맞춰 기술 금융을 추진할 것 ..... 136
11. 기술금융 운용에 있어 기술평가인력을 확충하고 시장성·사업성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 ..... 137

12. 기술평가 대출과 관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38
13. 기술금융 활성화 관련, 기존 거래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 기술력 없는 회사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나이스 신용평가 등 민간회사를 통한 기술신용평가 추진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138
14. 비수도권, 비우량 신용등급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원활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 140
15.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면책적용 강화, 중소기업대출 독려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보대출 및 우량기업 대출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41
16. 대출모집인과 법인을 통한 금융기관의 꺾기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검사와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 ..... 141
17. 정책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일정부분 담보하면서 유망 저신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142
18. 시중은행들의 자체적인 심사능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저금리 시대의 수익창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도할 것 ..... 143
19.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보증지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관심을 가질 것 ..... 143
20. 금융안정기금의 제도개선 및 존속기한 삭제를 통한 기금의 제도화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144
21. 동양그룹과 관련하여 지난해 국감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44
22.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145
23. 보증부 대출과 관련하여 과거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신용가산금리도 철저히 조사하여 대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 ..... 146
24. 현행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146



- 25.뱅크월렛카카오와 같은 신개념 금융 플랫폼 육성 지원책을 강구할 것 … 147
26. 독자신용등급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147
27.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부채급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48
28. 간주규제 위주의 현행 구속성 예금 규제는 풍선효과를 야기하므로 은행 내부관행 개선, 사후규제 강화 등의 대안을 검토할 것 … 149
29.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높아 기존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 149
30.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부정적인 이유는 비이자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므로, 은행들의 수익다변화를 유도할 방안을 강구할 것 … 150
31.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50
32. 금융회사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151
33. KB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증인심문 시, 지주회장과 은행장 간의 IT 임원에 대한 교체 요구 및 임원 추천에 대한 상이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사법기관과 금융 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증인들의 국정감사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의 위증고발을 위해 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할 것 … 151
34.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과 채무조정 기능의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152
35. 서민금융진흥원에 법상 금융권 등의 자본금 출자를 규정하여 금융권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152
36. 금융정보를 한 곳에 집중하면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153
37. 보험사가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소비자가 대출금리가 낮은 보험사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53
38.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카드사와 보험사의 대출 금리가 인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53
39. 해양금융종합센터가 해양금융의 중추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54

40. 보험업에 대한 금융위와 공정위의 이원적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대책을 강구할 것 ..... 154
41.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155
42. 다중채무자의 원리금 부담이 커져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으로 부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155
43.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므로 저금리 전환대출, 서민금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 156
44.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 157
45.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5%p 하향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157
46. 주택연금 보증사업비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 158
47.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에 비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영세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58
48. 대리점판매채널(GA)의 불완전판매율은 다른 채널에 비해 월등히 높고, 고아 계약이나 승환계약이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GA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 159
49. 일정규모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하여 불완전판매의 1차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160
50. 기업은행이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한 것과 관련 개선조치를 검토할 것 ..... 160
5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임직원은 미공개정보 등을 일반투자자에 비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 ..... 161
52. 전세자금 보증제도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162
53. 신용보증기금은 ‘13년부터 지식재산 보증제도, 스마트융합보증, 지식재산 가치평가제도 등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여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사업의 특화 및 전문화 방안을 강구할 것 ..... 162
54. 통합 산업은행의 인력효율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163

55. 중소기업이 신용평가등급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객관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 ..... 164
56.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관련 협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164
57.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대출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 165
58. 자기 직무와 연관된 대상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외부강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외부 강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 165
59.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166
60.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66
61.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의 무리한 수수료 인하요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인하 요구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부당한 인하 요구행위에 해당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167
62. IC카드 단말기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167
63. 대형가맹점과 뱅(VAN)사업자간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167
64. 정부나 금융공공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지출증빙을 철저히 할 것 ..... 167
65. 카카오, 네이버 등이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 등 금융 관련 업무로 진출하고 있으므로 금융보안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168
66. 산업은행의 브라질법인에서 국고를 2,000억원 낭비한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자를 처벌할 것 ..... 168
67. KB사태를 계기로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69
68. IP담보대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169

69.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및 활동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170
70. 모뉴엘 사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출금융과 보증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 170
71. 비상장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련 회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71
72.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부처간 신속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것 .. 172
73. 대체거래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172
74. 나라사랑대출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173
75. 피싱사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단할 대책을 마련할 것 ..... 173
76. 전임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 보장을 약속한 노사 양 당사자 합의서의 입회인으로 서명하고 보증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 174
77.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이 당사자간 합의와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 174
78. 담보물 평가물 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은행과 감정평가사협회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 174
79. 클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 전 투자자 보호 대책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74
80.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상승할 경우 상품 자체가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175
81.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76
82. 소득이 없는 저신용자들을 바퀴드림론으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76
83. 소액 장기 저소득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하여 재기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 177

84. 캠코가 사회취약계층 채권과 보유실익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78
85. CD금리를 담합한 은행을 제재할 것 ..... 178
86.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카지노협회로 하여금 회원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178
87. 지적자료 및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FIU가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법 또는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79
88. FIU법 개정시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FIU의 파견직원 비율 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79
89. 카드슈랑스의 경우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80
90. 영국의 사례와 같이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 및 수수료의 전체 상환액을 대출  
금액의 100%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81
91.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181
92.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시 캠코가 대부업체에 채권을 판매함에 따라 해당  
채무자들이 현재 채무상환 압박을 받는 등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 182
93.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82
94.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인출에 대해서는 무료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83
95.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것 ..... 183
96. 금융위원회 산하의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 인프라가 부족하고 역량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산하의 특별조사국에 통합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184
97. 외국인 등록 규정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84
98. 단기매매차익 환수율이 저조하므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85

99. 회계부정 방지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재점검할 것	185
100.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외국 채권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85
101. 분리형 BW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	186
102. 모든 은행과 카드사간 현금카드 제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86
103. 스마트폰 앱의 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6
104.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상환대책 개선안을 마련할 것	186
105. 금융정보 수집의 근거를 법령에 둘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87
10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원청업체 부실발생시 하청업체가 변제해야하는 문제가 있는바, 보험가입의무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87
107. 연금저축에 대하여 계좌이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88
108. 은행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것	188
109. 새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9
110. 신용카드사에도 보험상품 판매비중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89
111.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신용평가회사의 경영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할 것	190
112. 4대보험을 연체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보증, 각종 R&D사업 등의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90

## 2014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과도한 전관예우로 은행의 공공성이 무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월)</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15.7월)</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마련('15.9월)</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16.8월)</p> <p>○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여 함</p> <p>○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고 위원장이 사외이사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표이사 후보 등을 추천 하여야 함</p>
2.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연구원의 중복업무를 허용하여 중복, 비효율 구조를 만든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ISAC과 금융보안연구원의 중복 기능 제거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 계획을 수립('14.9월)하였고,</p> <p>○ 상기 계획을 기반으로 금융보안 전담기구(금융보안원) 설립('15.4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금융보안업무를 지급결제서비스 운영기관에서 분리하는 방안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보안원 설립('15.4월)시 지급결제 관련 금융보안업무는 금융결제원에 존치</p>
4. 금융위원회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강제적으로 금융 ISAC업무를 통합하지 말고 금융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및 금융ISAC 협의 등을 통해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 기본 계획을 확정('14.9월)하였고,</p> <p>○ 상기 계획을 기반으로 금융보안 전담 기구(금융보안원) 설립('15.4월)</p>
5. 현재 보안관제가 미흡한 금융업체와 ISAC에 연계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ISAC 연계가 필요한 금융회사가 ISAC에 연계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가입을 독려(10차례 설명회 개최)</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보안컨퍼런스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금융보안원(ISAC) 지속 안내·홍보</p> <p>○ ISAC 미연계 금융회사 가입 독려</p>
6. 전산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보안전담기구(금융보안원) 설립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기관으로 지정('15.4월)</p> <p>○ 전산사고 발생 시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 전산사고의 원인분석 등을 지원</p> <p>※ 전자금융거래법규상 전산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책임을 부담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금융 ISAC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시 통합대상 기관 직원들이 전담기구로 이직을 하지 않을 경우 금융보안이 더욱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통합대상기관 설명회 등을 통해 통합 대상기관 직원 대부분이 전담기구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속 유도</p> <p>○ 금융보안전담기구(금융보안원) 설립 ('15.4월)</p>
8. 기술금융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술 신용평가기관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14.7월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출범 당시 기술평가인력 등 35명 수준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나,</p> <p>○ '15.7월 80~180명(이크레디블 87명, 나이스 평가정보 98명, 한국기업데이터 176명) 수준으로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운용 중</p> <p><input type="checkbox"/> 또한, 일부 기술영역에 대해서는 외부 자문기관과의 업무제휴를 맺고 내부 기술평가 전문인력과 협업</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평가의 속도와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p>
9. 민간으로 한정된 기술신용평가기관을 공공성이 있는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14.6.20, 박대동의원)이 발의되어</p> <p>○ '기술신용조회업' 허가대상에 기술 이전촉진법상 공공 기술평가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추가</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를 경우 기술 신용평가기관 허가대상은 기술신용 정보 산출·제공을 겸업 신고한 신용 조회회사에 국한됨</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 지속</p>
<p>10. 기술금융 추진에 있어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이나 지원시스템이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내실 있는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은행과 함께 보조를 맞춰 기술금융을 추진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은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금융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15.6.8.)</p> <p>○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역량 확보를 위한 로드맵 수립,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 세분화 및 체계화, 기술금융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은행의 기술금융 역량 확보를 통해 ‘16년 하반기부터 자체 기술신용평가가 가능해질 전망</p> <p>□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결과 및 이에 기반한 대출의 부실률 등을 기술정보DB(TDB)에 집적함으로써,</p> <p>○ 기술신용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1. 기술금융 운용에 있어 기술평가 인력을 확충하고 시장성·사업성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관리를 통해 내부인력의 역량 강화 및 외부자문인력 운영 효율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평가사제도 및 평가사보수과정, 산업동향 등 연수프로그램 운영</li> <li>○ 외부자문기관 20개와 외부자문인력 1,074명을 확보하여 평가시 활용</li> </ul> </li> <li>□ 신규보증 지원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기술평가보증 지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보증 지원</li> </ul> </li> </ul> <p>* 기술사업평가체계는 기존 재무제표와 신용도 위주의 중소기업 심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시스템으로 재무·신용등급만으로 지원이 곤란한 기술성·사업성 우수기업 지원에 적합</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부평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 및 지속적인 신규 평가인력 채용</li> <li>□ 기술성시장성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지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2. 기술평가 대출과 관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개 은행과 TCB사가 참여한 「TCB 활용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기술신용평가 표준모형 도출('1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TCB는 표준모형을 토대로 각사 평가시스템에 맞추어 평가 실시 중</li> </ul> </li> <li>□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기업단계 및 업종별 평가모형 다양화 지속 추진 중</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DB 및 TCB 협의체 운영을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CB간 평가모형의 일관성을 기하며 평가의 정교함을 발전시켜 나가고,</li> <li>○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결과 및 이에 기반한 대출의 부실률 등을 기술정보DB(TDB)에 집적함으로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신용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li> </ul> </li> </ul> </li> </ul>
<p>13. 기술금융 활성화 관련, 기존 거래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제, 기술력 없는 회사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나이스 신용평가 등 민간회사를 통한 기술신용평가 추진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혁신성 평가 중 기술금융 분야 평가지표 설계시 기술등급 10단계 중 상위 6단계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하여 기술력 없는 회사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 유인을 방지('15.1.28)</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또한, 기술금융 실적 중 창업기업과 신규거래 기업 지원비중 평가지표를 두어 새로운 기업 발굴노력을 유도</p> <p>- 다만, 은행이 기술금융을 통해 신규 거래 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거래 기업을 정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책취지에서 어긋남</p> <p>□ '14.7월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출범 당시 기술평가 전문인력 등 35명 수준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나,</p> <p>○ '15.1월 80~100명(한국기업데이터 82명, 나이스평가정보 98명) 수준으로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운용 중</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 기술금융 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함으로써 은행이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질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p> <p>□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평가의 속도와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4. 비수도권, 비우량 신용등급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원활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재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우대지원 제도 변경 ('14.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력기업 영위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대보증 지정 및 보증료 감면(0.1%p)</li> </ul> </li> <li>○ 지방소재창업기업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후 3년 이내 → 창업후 5년 이내</li> </ul> </li> </ul> </li> <li>□ 신규보증 지원시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술평가보증 지원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보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업평가체계는 기존 재무제표와 신용도 위주의 중소기업 심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시스템으로 재무·신용등급만으로 지원이 곤란한 기술성·사업성 우수기업 지원에 적합</li> </ul> </li> </ul> </li> <li>□ '15년에도 전체 신규공급의 50% 이상을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중소기업 신규보증 비중(%) ( '13년) 50.5 → ( '14년) 51.8 → ( '15.8월) 50.7</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수도권, 비우량 중소기업에도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보증을 지속적으로 확대</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5.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면책적용 강화, 중소기업대출 독려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보대출 및 우량기업 대출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로 산출한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보증지원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업평가등급 우수기업은 은행에서 선별 기준으로 중시하는 재무제표 중심의 신용 우량 기업과는 상이</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재무우량기업에 대한 단계별 보증 감축 제도 시행('14.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만기시 보증비율 차등 인하 적용 (최대 70%)</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 기업의 보증을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li> </ul>
<p>16. 대출모집인과 법인을 통한 금융기관의 꺾기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검사와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정무위 심사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기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법률안은 대출모집인과 법인에 대한 금감원(금소원)의 검사권을 규정</li> <li>○ 또한,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 위반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등의 제재 근거를 규정</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div>&lt;향후 추진계획&gt;</div> <div><div><input type="checkbox"/>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div><div>*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논의 중</div></div>																
17. 정책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를 일정부분 담보하면서 유망 저신용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div>&lt;처리결과&gt;</div> <div><div><input type="checkbox"/> 신규보증 지원시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평가를 통해 기술평가보증 지원중</div><div><div>○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보증 지원</div></div></div> <div><div><input type="checkbox"/> 신규보증의 50% 이상을 기술창업기업에 배분하여 지원</div><div><div>* 기술창업기업 신규보증 (단위 : %)</div><div>(‘13년) 51.5 → (‘14년) 54.5 → (‘15.8월) 56.6</div></div></div> <div><div><input type="checkbox"/>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금융소외기업 및 재무등급이 없는 기업 등에 대한 보증 비중도 매년 확대</div></div> <div><table><tr><td>구 분 (단위 : %)</td><td>‘13년</td><td>‘14년</td><td>‘15.8월</td></tr><tr><td>금융소외기업*</td><td>43.2</td><td>46.6</td><td>48.0</td></tr><tr><td>재무등급 없는 기업</td><td>30.2</td><td>32.7</td><td>35.3</td></tr><tr><td>매출실적 없는 기업</td><td>8.9</td><td>11.4</td><td>13.8</td></tr></table></div> <div><div>*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업중 재무등급 B0 이하 기업</div></div> <div>&lt;향후 추진계획&gt;</div> <div><div><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유망 저신용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div></div>	구 분 (단위 : %)	‘13년	‘14년	‘15.8월	금융소외기업*	43.2	46.6	48.0	재무등급 없는 기업	30.2	32.7	35.3	매출실적 없는 기업	8.9	11.4	13.8
구 분 (단위 : %)	‘13년	‘14년	‘15.8월														
금융소외기업*	43.2	46.6	48.0														
재무등급 없는 기업	30.2	32.7	35.3														
매출실적 없는 기업	8.9	11.4	13.8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8. 시중은행들의 자체적인 심사능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저금리 시대의 수익창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도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성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은행이 보수적인 여신관행을 혁신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차 은행 혁신성평가 실시('15.1, '15.8) → 기술금융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li> <li>* 「2014년 하반기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1.28)</li> <li>「제2차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8.27)</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혁신성평가” 등을 통해 기술금융 확산·보수적 관행개선 지속 유도</li> <li>○ '16년 하반기부터 은행 자체 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실적 인정 예정</li> <li>*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8.27)</li> </ul>
<p>19.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보증지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관심을 가질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산업완성보증 지원 확대를 통한 고부가콘텐츠 제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문화산업완성보증 지원계획을 600억원으로 증액('14년 계획 500억원)</li> </ul> </li> <li>□ 지식문화산업 보증지원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등 지식문화산업 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하여 보증잔액 15% 이상 유지</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div>(단위: 억원)</div> <table><tr><th>구 분</th><th>'14년 계획(A)</th><th>'15년 계획(B)</th><th>증감 (B-A)</th></tr><tr><td>지식문화산업 보증잔액</td><td>28,050</td><td>29,250</td><td>+ 1,200</td></tr><tr><td>지식문화산업 공급</td><td>29,000</td><td>30,000</td><td>+ 1,000</td></tr><tr><td>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td><td>1,000</td><td>1,000</td><td>-</td></tr></table> <div>&lt;향후 추진계획&gt;</div> <div><input type="checkbox"/>향후에도 문화 콘텐츠 기업의 자금 수요에 관심을 갖고 대응</div>	구 분	'14년 계획(A)	'15년 계획(B)	증감 (B-A)	지식문화산업 보증잔액	28,050	29,250	+ 1,200	지식문화산업 공급	29,000	30,000	+ 1,000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1,000	1,000	-
구 분	'14년 계획(A)	'15년 계획(B)	증감 (B-A)														
지식문화산업 보증잔액	28,050	29,250	+ 1,200														
지식문화산업 공급	29,000	30,000	+ 1,000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	1,000	1,000	-														
20. 금융안정기금의 제도개선 및 존속 기한 삭제를 통한 기금의 제도화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div>&lt;처리결과&gt;</div> <div><input type="checkbox"/>금융안정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마련</div> <div>&lt;향후 추진계획&gt;</div> <div><input type="checkbox"/> '15년 하반기내 금융안정기금의 신청기한 연장 또는 폐지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예정</div>																
21. 동양그룹과 관련하여 지난해 국감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div>&lt;처리결과&gt;</div> <div><input type="checkbox"/>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개선·정비중</div> <div><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3.10월)에 따라 금지된 계열사발행 투기등급 CP·회사채 부당 판매행위 적발시 엄정 제재</div>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예금자보호법」을 개정('14.5월)하여 예보의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요청권 강화</p> <p>* 단독조사 결과에 따른 예보의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요청권을 신설(공동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요청권은 '12.3월 신설)</p> <p>○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검사기간: '13.11월 ~ '14.1월)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완료('15.4월)</p> <p>* 3개 신평사에 대한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 독자신용등급의 도입시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p> <p>* '15.6월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시 참석자들은 최근의 경제상황 및 회사채 시장 위축 등을 감안하여 ‘독자신용등급’의 도입 시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p>
<p>22.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p>□ 금년초 카드사 정보유출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p> <p>*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3.10.)</p> <p>○ 동 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예정('15.9.12)</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3. 보증부 대출과 관련하여 과거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신용가산금리도 철저히 조사하여 대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가산금리 부당부과 등 금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중</p> <p>○ 고금리* 보증부대출기업에 대한 특별사후관리 실시 ('10.12월)</p> <p>* 평균금리의 1.5배 초과</p> <p>○ 고금리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및 금융감독원 통보</p> <p>* 금감원 “고금리 보증부대출 선정기준” 마련 ('13.11월)</p> <p>** 모니터링 건수('13.11월~'15.6월)</p> <p>(신보) 609,351건, 고금리대출 통보실적: 2건</p> <p>(기보) 150,067건, 고금리대출 통보실적: 20건</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신용가산금리 부과 등 금리 부당부과 억제 노력</p>
<p>24. 현행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p>	<p>&lt;검토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제3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앞서 병원 방문조사 또는 서류심사*를 통해</p> <p>○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및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등의 손해사정 업무가 필요함</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류심사시에도 병원이 발행한 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등 병원발급 서류 점검 및 장애등급 판단 등 보험금 지급 필수 요소를 측정하여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손해사정 영역임</p> <p>□ 이러한 차원에서 '11.1월 시행령개정을 통해 제3보험 손해사정사 의무고용을 포함시킨 것이며,</p> <p>○ 생보사라 하더라도 제3보험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의무고용이 필요</p> <p>□ 참고로 미국(뉴욕州, 플로리다州)의 경우, 우리나라의 제3보험 영역에 해당하는 상해·건강보험(Accident and Health Insurance)에 대한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자격을 요구</p>
<p>25.뱅크월렛카카오와 같은 신개념 금융 플랫폼 육성 지원책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IT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IT·금융 융합지원방안(‘15.1.27)*」 마련·시행 중</p> <p>* IT회사·금융사 법적 책임 분담 명확화, 클라우드 편딩 활성화 등 IT 플랫폼 활용 촉진 방안 포함</p>
<p>26. 독자신용등급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독자신용등급의 도입시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27.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부채급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하여 금융채무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p> <p style="padding-left: 20px;">* 채무조정 중도탈락시 기한의 이익 부활 요건 완화, 채무조정 유예대상 확대, 대학생·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15.2 서민금융협의회)</p> <p style="padding-left: 20px;">** 차상위계층 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 감면율 확대(50%→60%), 기초수급자에 대한 상환 유예제도 강화 등('15.6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p> <p style="padding-left: 20px;">○ 사적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이 어려운 채무자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으로 신속 연계</p> <p><input type="checkbox"/> 금융취약계층의 소득 창출을 위해 고용부, 복지부 등과 협업하여 취업·창업 등 자활지원 강화</p> <p style="padding-left: 20px;">* 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 연계상품 마련('15.6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LTV 기준 강화('15.8월 행정지도)</p> <p style="padding-left: 20px;">* LTV 기본비율 최소한도 및 가산비율 각각 하향 (60% → 50% / 15~20% → 10%)</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8. 간주규제 위주의 현행 구속성 예금 규제는 풍선효과를 야기하므로 은행 내부관행 개선, 사후규제 강화 등의 대안을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명시적인 꺾기 간주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객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꺾기에 해당하도록 되어</li> <li><input type="checkbox"/> 꺾기 적발 시 과태료를 건별로 합산 부과토록 하여 금전적인 제재 수준을 강화</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은행내에서 꺾기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적절히 마련·운영 하도록 지속 유도</li> </ul>
29.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높아 기존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 등 주요 금리·수수료 수준에 대하여 해당 협회에서 비교 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간 가격경쟁을 유도</li> <li><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의 합리성· 적정성과 관련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법학회의 연구용역*(은행연합회 발주) 결과 및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 (‘14.11)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은행들이 자율 개선토록 유도 중</li> </ul> </li> </ul> <p>*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 및 적정 성에 관한 연구」</p>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하도록 지속유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0.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부정적인 이유는 비이자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므로, 은행들의 수익다변화를 유도할 방안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은행 수익성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p> <p>* ‘금융규제 개혁방안’(14.7월),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15.8월)</p> <p>예시) 부수업무 확대, 수수료 등 자율결정 관행 확립</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영업관련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p>
<p>31.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와 관련하여</p> <p>○ 은행법학회의 연구용역*(은행연합회 발주) 결과 및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14.11)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은행들이 자율 개선토록 유도 중</p> <p>*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 및 적정성에 관한 연구」</p> <p>○ 동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일부은행은 대출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를 시행*중이며, 여타 은행들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p> <p>* &lt;기업은행 사례&gt; 담보대출 : 1.2%(고정), 0.9%(변동) / 신용대출 : 0.8%(고정), 0.5%(변동)</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하도록 지속 유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2. 금융회사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지주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그룹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건전화를 위한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15.7.31 공포, '16.8.1 시행)</li> <li>○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24)</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15.6.22)하고 관련 금융지주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작업* 진행 중</li> </ul> </li> </ul> <p>*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5.8.13~9.2)</p>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필요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li> </ul>
<p>33. KB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증인 심문 시, 지주회장과 은행장 간의 IT 임원에 대한 교체 요구 및 임원 추천에 대한 상이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사법기관과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증인들의 국정감사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의 위증고발을 위해 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회하여 관련 내용을 정무위원회에 제출('15.9.9)</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4.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과 채무 조정의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강구·마련</li> <li>○ 채무조정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를 법률상 진흥원과 분리하여, 채무조정안 심의 및 신용회복지원협약 등 핵심 의사 결정을 독립적으로 담당토록 함</li> <li>○ 신용회복위원회 지배구조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 검토</li> </ul> <p>* 신복위 총회에 채무자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 등</p>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심의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안 국회통과 노력 지속</li> </ul>
<p>35. 서민금융진흥원에 법상 금융권 등의 자본금 출자를 규정하여 금융권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안 제41조)에 금융기관 등이 진흥원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li>○ 다만, 이는 해당 기관과 출자 여부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출자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님</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후, 필요시 금융권 등과 출자를 협의하여 추진</p> <p>*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에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되어 온 자원들을 우선 통합하여 자본금 조성 예정</p>
36. 금융정보를 한 곳에 집중하면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ISAC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전담 기구가 신용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음</p> <p>○ ISAC은 외부에서 금융회사에 해킹 등의 침해가 발생하는지를 24시간 관제하고, 침해가 발생하면 함께 대응하는 것으로, 관련된 신용정보 수집 등은 ISAC과 무관</p>
37. 보험사가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소비자가 대출금리가 낮은 보험사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보험사·상품별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에서 대출금리 비교 공시 시행('15.7월)</p>
38.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카드사와 보험사의 대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 대출금리 산출방식 합리화를 위해 은행 등 타업권 사례를 참고하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마련('15.4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39. 해양금융종합센터가 해양금융의 중추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수은, 무보, 산은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이 부산으로 이전하여 해양금융 종합센터 설립완료('14.9.27, 77명)</p> <p>* '14.11.4 개소식 개최</p> <p>* 인력 : ('14.9월) 77명 → ('15.6월말) 116명(현지채용인력 포함)</p> <p>○ 센터의 내실있는 운영방안 추진 완료</p> <p>* 3개 기관 정관에 선박금융 조직의 부산 설치 명시, 센터 본부장에 인사·조직·예산 전결권 위임, 3개 기관간 운영협약 체결 등</p> <p><input type="checkbox"/> 지원실적('15.7월말) : 설립 후 20조원 공급</p> <p>* 대출 9.9조원, 보증 10.1조원</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해양금융종합센터 활성화 지속 추진</p> <p>○ 해운보증기구, 선박운용회사 등 선박 금융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p>
<p>40. 보험업에 대한 금융위와 공정위의 이원적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대책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완화 및 효율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금융위-공정위간 MOU 체결('15.1월)</p> <p>○ 금융위-공정위 국장급 실무협의회 2회 개최(2월, 8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복규제 등 현안 문제 해소 노력을 지속할 계획</p>
<p>41.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수립(‘15.7월)</p> <p>①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분할상환)’으로 전환</p> <p>②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p> <p>③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非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p> <p>④ 금융회사·주금공·가계 대응력 제고 및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p>
<p>42. 다중채무자의 원리금 부담이 커져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으로 부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다중채무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계소득 증대, 취약계층 지원*,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p> <p>* 서민층에 대한 충분한 자활 지원 등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수립(‘15.6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또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상호금융권 총당금을 추가적립하고 업권간 정보 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강화</p> <p>* 고위험대출종 요주의·고정·회수의문 대출에 대한 총당금을 10% 추가적립중이며 향후 상향조정</p> <p>** 대부업 등 대출정보 포함(15.3월~)</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과 범정부적인 경기 활성화, 경제 구조 개혁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추진</p>
<p>43.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므로 저금리 전환대출, 서민 금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p>□ LTV·DTI규제 합리화 등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해소하여</p> <p>○ 고금리 2금융권 대출의 저금리 은행권 대출전환을 통해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p> <p>□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시스템 위험이 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지속강화</p> <p>□ 서민 금융상품 공급 확대* 및 금리부담 경감 등 서민·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15.6월)</p> <p>○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 인하</p> <p>* 4대 서민 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미소금융) 공급 확대(연간 4.5조원→5.7조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4.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15.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음(분할상환)으로써 개인의 총이자부담액 절감 및 매년 가계부채 총량 감축효과</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발표(‘15.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분할상환)’으로 전환</li> <li>②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li> <li>③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非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li> <li>④ 금융회사·주금공·가계 대응력 제고 및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및 모니터링 강화</li> </ul>
45.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5%p 하향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가계소득은 늘리고 부채는 줄여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장적 거시 경제정책 운영, 일자리 창출, ISA 도입(‘16년~) 등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 추진</li> </ul> </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관계기관 합동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7.22)을 통해 적절한 부채관리</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과 범정부적으로 경기 활성화, 경제 구조 개혁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추진</p>
46. 주택연금 보증사업비 부족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재정 출연 등 주택연금 재정 보강을 추진</p> <p>○ 중기사업계획(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 출자 반영 추진 등</p>
47.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에 비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영세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p>□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p> <p>* '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22년까지 전면의무화</p> <p>○ 특히,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기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적립금과 수수료를 지원*</p> <p>* 저소득 근로자(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 자산운용수수료의 50% 지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고용부에서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등을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 중</p> <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14.11.26발의) 국회 환노위 계류 중</p>
<p>48. 대리점판매채널(GA)의 불완전판매율은 다른 채널에 비해 월등히 높고, 고아계약이나 승환계약이 다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GA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GA(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p> <p>① 대형 비전속 비전속보험대리점의 공시 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14.4.15 감독규정 개정)</p> <p>* (종래) 불완전판매비율만 공시 ⇒ (개선) ①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② 불완전판매비율 및 발생사유, ③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이상 지적을 받은 내용 등 추가</p> <p>② 법인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모든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이력조회시스템 운영 개시('15.7.8일)</p> <p>* 불완전판매, 먹튀·철새 설계사의 재취업을 제한</p> <p>③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보험대리점이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는 우회진입 금지 추진(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15.6.17)</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49. 일정규모 이상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에 대하여 불완전판매의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대형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15.8.27일)</p> <p>① (1단계) 과당경쟁,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자율규제 정비('15.9월)</p> <p>② (2단계) 법인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15.하반기)</p> <p>③ (3단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을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시키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화하는 법개정을 연구 용역을 거쳐 추진('16년 이후)</p>
<p>50. 기업은행이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한 것과 관련 개선조치를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가계대출 증가방지 등을 위해 기은의 가계대출 순증한도를 축소('14.12.30)</p> <p>○ LTV·DTI 규제합리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순증한도 증액요청('14.9)에 따라 필요 최소 범위내에서 승인('14.10)하였으나,</p> <p>※ 순증한도 10,000억원 → 13,700억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15년에는 과도한 금리인하를 통한 가계 대출 증가방지를 위해 순증한도 축소 조치</p> <p>※ '15년도 기은 업무계획 승인시('14.12.30, 금융위의결) 가계대출 순증한도를 13,700억원 → 10,000억원</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방지 등을 통해 승인해 준 한도 범위내에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p> <p>○ 다만, 기준금리 및 소비자부담 경감을 감안 대출금리를 합리적 수준에서 운용</p>
<p>5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임직원은 미공개정보 등을 일반투자자에 비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주식거래시 관련규정 철저 이행 촉구</p> <p>○ “자본시장법” 및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공지(매월 1일)</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 개정추진</p> <p>○ 거래규모 및 횟수 제한, 신고대상 확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 내용의 규정 개정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2. 전세자금 보증제도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서민 전세자금 지원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실시</p> <p>① '14.5월, 은행재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대상을 임차보증금 6억원 이하에서 4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축소</p> <p>② '15.1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보증 출시</p> <p>-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또는 부모소득 3천만원 이하자 대상</p> <p>③ '15.7월, 저소득자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p> <p>- 연소득 1,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연간인정소득 상향 조정 및 보증 한도 확대</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재원 전세대출 출연요율 인하(연0.3%→0.26%)</p> <p>○ 주금공 시행규칙 개정('16.1월 시행)</p>
<p>53. 신용보증기금은 '13년부터 지식재산 보증제도, 스마트융합보증, 지식재산가치평가제도 등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여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사업의 특화 및 전문화 방안을 강구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신·기보간 업무특화 운용으로 업무중복 우려를 최소화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한국발명진흥회 등 전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심사에 반영하여 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한편,</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과 기업가치를 산출하여 평가의 정합성을 제고</li> <li>○ 이 외에도 지식재산 우대보증제도*를 별도로 운용 중</li> </ul> <p>*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 3)에 등록된 특허권 등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보유 지식재산 평가수준에 따라 보증을 지원</p>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기보간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영역 특화의 범위에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li> </ul>
54. 통합 산업은행의 인력효율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산은 합병위원회” 논의과정(14.6~12) 등을 거쳐 통합산은의 조직·인력 운영 방안 확정</li> <li>○ 개정 산은법에 따라 3개 기관(정금공, 산은지주, 산은)의 직원은 모두 포괄승계</li> <li>○ 단, 중복기능을 통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원수 축소* 및 향후 총정원 점진적 감축 추진</li> </ul> <p>* 통합직전 3개 기관 현원을 통합산은의 총정원으로 조정(통합직전 대비 정원 161명 감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통합 산업은행의 효율적 인력운영 지속 추진</p>
<p>55. 중소기업이 신용평가등급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객관적인 신용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신용평가 체계 구축은 민간(신용조사회사)의 고유영역으로, 각 회사별 통계적 방법에 따라 신용평가 체계(모델)를 설계하여 운영중</p> <p>○ 또한, 현재 일부 신용조사회사의 경우 이미 기업의 규모별·업종별로 별도 신용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평가</p>
<p>56.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관련 협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은행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방만한 경영으로 지적된 개인연금지원액 삭감, 연차휴가보상제도 개선, 국외출장 규정 개정 등 14건에 대해 조치 완료</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이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정기 검사 실시('14.10월)</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협회 건전경영 및 내규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p> <p>○ 불합리한 내규 지속 발굴·개선</p> <p>○ 또한, 향후 금감원의 금융관련 협회 검사결과를 면밀히 확인·점검</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7.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대출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원 확대를 위한 'IBK상생결제론' 출시</p> <p style="padding-left: 20px;">* '15.4월 시행, 8월 현재 매출채권 수취실적 3,572억원, 매출채권 할인실적 639억원</p> <p style="padding-left: 20px;">○ 영세한 2,3,4차 협력사까지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상황청구권 없이 저금리의 담보대출 수혜 가능</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IBK상생결제론'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p>
<p>58. 자기 직무와 연관된 대상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외부강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외부 강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업무와 관련된 대상자를 상대로 외부강연 시 대가수령을 금지토록 운영('14.10)</p> <p><input type="checkbox"/> 권익위 및 금융위의 외부강의 관련 기준을 엄격히 준수토록 전직원 공지(매월 1일)</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관라운영</p> <p style="padding-left: 20px;">○ 외부강의 신고시 강의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는 등 관라운영 강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59.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및 금융인력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년 업무계획에 글로벌 인력 양성과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보험연수원) 회의 개최(3회)</li> </ul> </li> <li>□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15.7월)</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금융회사 해외진출 촉진 안전 상정 ('15.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국제금융연수원 등에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지속 추진</li> </ul> </li> </ul>
<p>60.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신협회 TF를 중심으로 수수료율 재산정 방안 논의 중</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TF 논의 결과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년말 수수료 재산정을 추진</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1.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의 무리한 수수료 인하요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인하 요구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부당한 인하 요구행위에 해당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에 이견이 존재하였으며,</p> <p>○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수수료 인하 여부 등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p>
62. IC카드 단말기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여신협회 중심으로 IC단말기 전환 기금 사업을 추진 중('15.6월 사업자 선정)</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IC단말기 전환 기금 사업을 통해 영세 가맹점부터 우선 전환을 추진하겠음</p>
63. 대형가맹점과 벤(VAN)사업자간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여전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 ('15.7월 시행)</p> <p>* 대형가맹점과 VAN사간 리베이트 금지 → 위반시 5년 ↓ 징역 또는 3천만원 ↓ 벌금</p>
64. 정부나 금융공공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지출증빙을 철저히 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지출증빙 강화) “연구용역에 대한 사후 정산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협의 후 조치완료('15.9.3)</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조기발주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경쟁입찰 추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p>
65. 카카오, 네이버 등이 온라인 지급 결제서비스 등 금융 관련 업무로 진출하고 있으므로 금융보안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보안을 토대로한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IT·금융 융합지원방안(‘15.1.27)*」 마련·추진 중</p> <p>* 금융권 자율보안체계 구축, 정보보호 및 금융 보안 입법 노력 강화 등 포함</p>
66. 산업은행의 브라질법인에서 국고를 2,000억원 낭비한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자를 처벌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담당자 2명을 면직처리(‘10.4.)하고 형사고발을 진행(‘14.12.)하는 등 엄중히 문책</p> <p>○ 또한, 관련자 5명 및 담당부서에 주의 조치</p> <p><input type="checkbox"/> 담당자 2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승소(‘10.8), 발견 재산 강제 집행 완료</p> <p><input type="checkbox"/> 담당자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15.6)하여 조사 진행 중</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관련자 처벌을 위한 법적 대응 지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67. KB사태를 계기로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민간위원 Pool제* 등 제재심의의 공정성·전문성·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15.2月)하여 시행** 中</p> <p>* 제재심의의 민간위원 6명을 12명의 Pool로 운영하고 법조계·학계·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p> <p>**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완료('15.6月)</p> <p>○ 제재대상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반론권 강화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제고</p> <p>*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완료('15.7月)</p>
<p>68. IP담보대출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IP담보대출 확대 여건 마련</p> <p>○ 기보-은행권간의 IP 담보대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4.11월)</p> <p>* 평가료 지원, 보증 및 대출 공동지원 등 IP 담보대출 정착을 위한 공조 체제 구축</p> <p>○ 가치평가서에 기반한 IP담보대출을 이차보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운용('14.11월)</p> <p>○ IP담보대출의 담보가치 산정용 기술가치 평가서 제공 확대('14.11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특허청의 “IP담보대출 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 기업 및 은행의 비용부담 완화</p> <p>○ IP보증과 IP담보대출(은행)을 결합한 "1+1 IP담보대출" 확대('15.2월)</p> <p>* 기보-기은간 협약을 통해 기술가치금액이내에서 IP사업화자금 공동지원</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IP 담보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노력</p>
<p>69.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및 활동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14.12.24)</p> <p><input type="checkbox"/>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독립성 등을 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5.7.31)</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추진</p>
<p>70. 모뉴엘 사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출금융과 보증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수출금융 관련 현황점검 실시 및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 검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금감원을 통해 10개 채권은행('14.10.27~11.19) 및 무보('15.1.22~3.13)에 대한 현장검사 진행</p> <p>○ 산업부(주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TF('14.12월~'15.4월)에 참여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모니터링 및 수출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p> <p>- 무보의 거액건 수출계약진위 확인, 금감원 검사를 통한 감독 강화 등</p> <p>-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서류 검증절차 강화, 분식회계적출 시스템 개선 등</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 무보-은행은 무역금융 위축방지 및 심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계획</p> <p>○ 우수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노력 지속</p>
<p>71. 비상장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련 회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p>□ 현행 규정으로도 증선위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금융감독원이 비상장회사의 감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p> <p>*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7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72.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부처간 신속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모뉴엘사태 이후 관계부처 합동 TF('14.12월~'15.4월)를 통해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강화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무보 업무협약 체결('15.7월)로 무보 보험사고 정보 및 관세청 통관 정보 공유</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인 '감독정책협의회', '금융현안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관세청, 은행, 무보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통관 및 수출금융 관련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li> <li><input type="checkbox"/>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li> </ul>
<p>73. 대체거래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15.7월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을 통한 거래소-ATS간 경쟁체제 구축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업계, 협회, 거래소와 공동으로 ATS규제 관련 T/F 운영(총4회)</li> </ul> </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4분기 중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 ATS가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4. 나라사랑대출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농협은행이 추가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보훈처와 세부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됨</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나라사랑대출 상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p>
75. 피싱사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단할 대책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수립 (관계부처 합동*, '14.12월)</p> <p>* 금융위,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등</p> <p>○ 대포통장, 사기이용 전화번호, ATM 등 3대 핵심범죄이용수단 관리 강화</p> <p>○ 금융회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 구축,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노력 강화</p> <p>○ 정부-금융회사의 적극적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등</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대포통장의 발행·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명령 및 임직원 제재</p> <p><input type="checkbox"/>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대포통장 불법광고 등에 이용된 금융사기 이용전화번호 정지</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6. 전임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 보장을 약속한 노사 양 당사자 합의서의 입회인으로 서명하고 보증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하나·외환은행 노·사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통합에 합의('15.7.13)</p> <p>○ 하나·외환은행 합병신청을 인가(8.19)</p>
77.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이 당사자간 합의와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하나·외환은행 노·사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통합에 합의('15.7.13)</p> <p>○ 하나·외환은행 합병신청을 인가(8.19)</p>
78. 담보물 평가물 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은행과 감정평가사협회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은행권-감정평가사협회간 협의 진행중</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협의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p>
79. 클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기 전 투자자 보호 대책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투자위험이 높은 클라우드펀딩 시행에 따른 투자자피해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률안에 엄격한 투자자보호 장치*를 기마련</p> <p>* 투자금액 제한, 증권발행의 취소, 1년 간 매도 제한,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 청약 증거금의 별도예치, 증권예탁 의무 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및 정보 비대칭성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대안*을 제시, 국회 통과('15.7)</p> <p>* 광고규제 강화, 발행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실확인,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강화, 1인당 투자한도 규제 구체화 등</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p> <p>* 기업별 투자 한도, 사실확인사항 등 구체화</p>
<p>80.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상승할 경우 상품 자체가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서민금융상품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p> <p>○ 수요자의 소득수준 감안 등 지원기준을 합리화</p> <p>* ① (미소금융) 현금흐름표 심사 도입(14.6월)</p> <p>② (바꿔드림론) DTI 심사 강화, 재직·소득 확인의 적정성 강화 (13.10월/14.6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81.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창업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그간 햇살론, 바뀌드림론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등을 지속</p> <p>○ 지신보 사업자 햇살론 및 미소금융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속 공급 중</p> <p>* 미소금융 창업초기 자금 지원 실시('14.7월~)</p> <p>□ 이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6.23)'을 통해 자활·재기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 마련·추진 중</p> <p>* '채무조정-일자리연계-재산형성'을 연계한 '드림셋' 지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저소득·저신용 장애인 생계자금 지원(1,200만원 이내) 등</p>
<p>82. 소득이 없는 저신용자들을 바뀌드림론으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바뀌드림론, 햇살론 전환대출을 통해 고금리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속 지원 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또한, 수입이 일정치 않은 대학생·청년 대상 전환대출(신복위)을 강화*</p> <p>* (금리인하) 6.5% → 5.5% (거치기간 연장) 현행 없음 → 최대 4년</p> <p>□ 소득이 없는 저신용자들의 경우 취업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도 지속</p> <p>* 고용·복지+센터 내 서민금융상담센터 입주를 통해 서민금융과 함께 복지·고용 연계 지원중</p>
<p>83. 소액 장기 저소득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하여 재기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상환능력이 없어 채무조정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등에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으로 연계중</p> <p>□ 아울러, 차상위계층 채무자에 대한 감면율 확대(50%→60%) 등 사회소외 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추진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4. 캄코가 사회취약계층 채권과 보유 실익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국민행복기금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일반 채권보다 높은 60~70%의 원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p> <p>○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공적채무조정으로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상환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 채권의 경우 장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등 채무상환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p>
85. CD금리를 담합한 은행을 제재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검토</p>
86.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카지노협회로 하여금 회원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카지노 협회의 회원사 자율점검을 국감 직후 중단토록 조치</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현행법령에 따라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정보 분석원이 검사를 수행</li> <li><input type="checkbox"/> 장기적으로 카지노 분야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검사를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li> </ul>
<p>87. 지적자료 및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FIU가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법 또는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FIU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 (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14.12.4) 국회 제출*</li> </ul> <p>* 현재 소관위(정무위) 계류 중</p>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상기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li> <li><input type="checkbox"/> 지적자료 요청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li> </ul>
<p>88. FIU법 개정시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FIU의 파견직원 비율 제한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FIU 중기인력계획(2014~2018) 및 FIU 소요정원(2016)에 법집행기관 파견인력 감축안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 ('15.5월)</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14.10.10)하여 감축방안 논의</p> <p>&lt;향후 추진계획&gt;</p> <p>□ 최근 늘어나는 심사분석 수요를 감안할 때, 당장 파견인력 감축은 어려운 상황</p> <p>□ 향후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파견인력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p>
<p>89. 카드슈랑스의 경우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 카드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완전 판매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p> <p>○ 보험회사가 신용카드사 보험판매에 대한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 및 완전 판매 모니터링** 실시 제도화('14.4월 감독규정 개정 완료)</p> <p>* 보험계약 체결시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사후적으로 표준상품 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p> <p>** 청약후 10일 이내에 ① 중요사항 설명 여부, ② 약관·청약서 부분 수령 여부, ③ 자필서명 이행 여부 등을 확인</p> <p>○ 카드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집중 점검·제재('13.6~7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0. 영국의 사례와 같이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 및 수수료의 전체 상환액을 대출금액의 100%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우리나라는 대부업법상 연 최고금리 규제가 있어 영국과 같은 원리금상환 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도입시장·단점, 규제간 상충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p> <p>○ 특히 우리나라는 연이율 상한(34.9%)을 두고 있으며 영국의 이자상한인 100% 보다 낮으므로,</p> <p>○ 우리나라 제도가 채무자에게 제도적으로 유리*</p> <p>* 영국의 경우 1년 미만 단기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금액의 100%를 이자로 수취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1년 대출시 34.9%까지만 수취</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시 장기연체자 등에 대해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시행하여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p>
<p>91.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국세청과 금융회사에서 과다하게 원천징수 세금 확인 및 환급조치('14.10월)</p> <p><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 해지시 원천징수 과오납입 발생하지 않도록</p> <p>○ 금융회사의 세제 설명의무와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확인의무 강화('14.11월)</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2.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시 캠프가 대부업체에 채권을 판매함에 따라 해당 채무자들이 현재 채무상환 압박을 받는 등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조조정 기금의 잔여 무담보채권 매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기준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제한하여 매각을 추진 하였고('14.10.24일 계약체결),</li> <li>○ 대부업체에 재매각되지 않도록 재매각 금지기간을 늘리고 위약금 규정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li> </ul> </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에도 과도한 채권추심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음</li> </ul>
<p>93.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3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규정 개정을 통해 '리포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 도입 완료(시행일: '15.5.29)</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7월 협회 주도로 발족된 '리서치 센터장 정기협의체'를 통해 리포트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협의 지속</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4.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인출에 대해서는 무료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제공 제언</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무료인 주요 금융거래내역* 안내 문자서비스를 저축은행까지 확대·시행('15.9.1일)</p> <p>* 대출 신규·변경, 통장 신규·재발급·해지, 입출금 내역 등 19개 내역</p> <p>○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피해예방 요령 등을 안내</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통신당국과 협의하여 피해예방 문자알림메시지 무료 제공을 추진</p>
<p>95.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것</p>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14년 하반기 매매체결내역을 이용하여 불법 선물대여계좌 여부를 조사</p> <p>○ 점검결과 51개 계좌를 폐쇄하고 17개 계좌를 수탁거부 조치</p> <p>※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공유시스템(업계공동)”을 통해 불법 대여업자가 증권사를 옮겨가며 불법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상시점검체계 운영중</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정기적(반기별)으로 불법대여계좌를 조사하고, 호가 및 매매거래 양태 등 분석을 통해 적출기준을 지속 개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96. 금융위원회 산하의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 인프라가 부족하고 역량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산하의 특별조사국에 통합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민간기구인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의 강제조사 등을 할 수 없어 자본시장 조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조사단은 강제조사*(압수·수색) 및 협업을 통한 첨단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효과성을 제고</li> </ul> </li> </ul> <p>* '15.6월 강제조사(압수·수색) 2회 실시 ** 디지털포렌식(디지털기기 복원) 기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내·외부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인프라 및 역량을 강화 하고 있음</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및 유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조사인프라 및 역량 강화 예정</li> </ul>
<p>97. 외국인 등록 규정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lt;처리결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내국인으로 가장한 외국인('점은머리 외국인')이 공모주 배정을 받을 수 없도록 청약·배정제도 개선('14.12월)</li> </ul> <p>&lt;향후 추진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혐의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거래 사실 확인시 외국인 투자등록 취소 등 조치할 계획</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8. 단기매매차익 환수율이 저조하므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12.8월 공시서식을 개정하여 단기매매차익 공시를 강화한 이후, 기업 등의 단기매매차익 환수 및 반환청구율*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p> <p>* (기업 등 환수 및 청구 금액) / 증선위 통보 금액 ( '13) 66.3% → ( '14) 67.7% → ( '15上) 69.5%</p> <p><input type="checkbox"/> 단기매매차익 환수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시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p>
99. 회계부정 방지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지정제도를 재점검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일정 재무요건에 해당하는 상장기업, 횡령·배임 공시기업 등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제도를 확대하였음('14.11월)</p>
100.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외국채권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일반투자자의 해외국채 직접투자시 투자자보호문제, 해외사례 등을 신중히 검토 중</p> <p>* 정보가 제한적인 해외국채에 대해서는 펀드 등 전문가를 활용한 간접투자가 일반적</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추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01. 분리형 BW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법 개정('15.7.24)으로 상장기업의 분리형 BW 공모발행이 재허용</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분리형 BW 공모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등을 모니터링</p>
102. 모든 은행과 카드사간 현금카드 제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은행과 카드사간 제휴 현황 점검 중 ('15.9월)</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과 카드사 간 제휴 확대 유도</p>
103. 스마트폰 앱의 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은행 등 금융회사가 스마트폰 앱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의 영업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p> <p>※ 금융회사의 자율 추진 독려</p>
104.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상환대책 개선안을 마련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용상의 개선방안 및 상환대책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중</p> <p>○ 다만, 부담주체인 금융권 및 관계기관간 중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향후 회수규모, 예금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p>
105. 금융정보 수집의 근거를 법령에 둘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37의2, '14.8.7)하여 금융회사 등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p> <p>○ 다만 국민행복기금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금융위원회 고시로 지정되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법정주의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시로 지정된 기관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예정('15.9.12)</p>
10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원청업체 부실발생시 하청업체가 변제해야하는 문제가 있는바, 보험가입의무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미결제기업에 대한 공동제재 근거(은행권 규약 반영)를 마련('15.1월)</p> <p>○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행('15.6월)</p> <p>* 「납품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 시행」(6.24, 금감원)</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7. 연금저축에 대하여 계좌이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계약이전 간소화 방안 지속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을 수익률, 수수료 등의 이유로 타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계약자를 위해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제도 시행 중('01년)</li> <li>○ 계약이전을 위해 계약자가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것을 계약이전을 원하는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15.4월)</li> </ul>
<p>108. 은행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부수업무신고관련 제도 정비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이 공고된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다른 은행의 신고의무를 면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4.12월)</li> </ul>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부수·겸영업무 신고 절차 합리화*를 위한 법령 개정 지속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법에 따라 인가받은 겸영업무에 대해서는 은행법상 별도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은행법」 개정안(이한구 의원안, '14.12월) 국회 계류 중</li> </ul>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109. 새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도 정비(시행령 개정, 14.12)</p> <p>○ 전자위임장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구축('15.1)하고, 감사 선·해임 등 일부 안전에 대한 우선 권유 허용</p> <p><input type="checkbox"/> 법인이 전자투표 및 위임장권유를 시행한 경우 ①감사(위원) 선·해임, ②지분 분산이 과도한 법인의 일반 안전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새도우보팅 적용</p> <p>* 자본시장법('14.12) 및 금투업규정('15.2) 개정 완료</p> <p><b>&lt;향후 추진계획&gt;</b></p> <p><input type="checkbox"/>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등의 시스템을 지속 정비</p>
<p>110. 신용카드사에도 보험상품 판매 비중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b>&lt;처리결과&gt;</b></p>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사의 보험판매 시장의 현실 고려*하여 '16년까지 보험상품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되,</p> <p>* ①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보험사가 중소형사 2~3개에 불과하여 25%룰을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곤란</p> <p>② 카드슈랑스가 전체 보험시장의 1%도 안되는 규모로 기계적인 25%룰 강제에 따른 효과도 크지 않음</p> <p>○ 2017년부터는 카드사에 대해서도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같이 예외 없이 25%룰을 적용</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1.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신용평가회사의 경영 및 업무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의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검사기간: '13.11월 ~ '14.1월)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완료('15.4월)</p> <p>* 3개 신평사에 대한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독자신용등급의 도입시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p> <p>* '15.6월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시 참석자들은 최근의 경제상황 및 회사채 시장 위축 등을 감안하여 '독자신용등급'의 도입 시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p>
112. 4대보험을 연체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의 보증, 각종 R&D사업 등의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p>&lt;처리결과&gt;</p> <p><input type="checkbox"/> 신규보증 심사시에는 조세, 공과금의 체납 여부를 점검</p> <p>○ 4대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신용도기업으로 분류하여 보증한도 축소, 전결권 상향하는 등 제한적으로 보증을 지원</p> <p><input type="checkbox"/> 보증기한 연장시에도 4대 보험 체납 정보를 열람 확인('15.8월부터)</p> <p>*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재·고용보험료 등 체납정보를 수집하여 만기 연장시 활용</p> <p>&lt;향후 추진계획&gt;</p> <p><input type="checkbox"/> 보험료 연체,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해 보증 심사 강화 등을 지속 운용</p>



V. 2015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원은 '15년 금융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15.03.18~03.31, 총 10일)』,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15.04.01~04.28, 총 20일)』 감사를 실시하였음
- 또한, 감사원은 '14년 실시한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5년에 통보하였음

###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 (‘14.03.17~04.18)>

지적사항	조치결과
<p>□ 휴면예금 처리에 관한 지도·감독 부적정 (통보,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등으로 하여금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예금에 대해 예금조회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예금주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하는 등의 예금주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li> <li>○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휴면예금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li> </ul>	완료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 ('14.08.22~09.04)>**

지적사항	조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보험관련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등에서 보험관련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li> <li>○ 질병정보의 집중관리·활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li> <li>○ 질병정보의 보유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단축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li> </ul>	조치 중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15.03.18~03.31)>**

지적사항	조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청사보안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경쟁 대상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청사보안용역 계약업무를 철저히 할 것</li> </ul>	완료
<p><input type="checkbox"/> 정책연구용역 검사업무 처리 등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수행 여부의 적정성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용역계약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li> </ul>	완료
<p><input type="checkbox"/> 2014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계획 수립시 단위사업 관리과제를 설정할 것</li> <li>○ 성과계획서와 상이한 성과실적 보고를 하지 않도록 성과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li> </ul>	완료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15.04.01~04.28)>

지적사항	조치결과
<p>□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위탁근거없는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li> <li>○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적법한 제재 업무 수행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li> </ul>	조치 중
<p>□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록취소 통보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통보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li> </ul>	완료
<p>□ 자산유동화 대상 회사채 연체정보 집중·관리 방안 미비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연체 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li> </ul>	조치 중
<p>□ 전국은행연합회의 사망자 관련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 관련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등을 점검·정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li> </ul>	조치 중
<p>□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신용카드 소멸포인트를 이용한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 소멸포인트를 이용한 사회공헌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li> </ul>	조치 중

지적사항	조치결과
<input type="checkbox"/> 한국거래소의 상장법인 공시 점검 시 예탁결제원 연체정보 미활용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체발생 사실 공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간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할 것</li> </ul>	완료

#### ☐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5년도 8월말 현재기준 「금융연구원」('15.04.15 ~ 04.23)에 대한 종합감사와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15.06.01 ~ 06.10)에 대한 종합감사 등 총 2건의 산하기관 감사를 실시

\* 여신금융협회 감사의 경우 처분요구에 대한 최초 조치현황을 10월말에 회신예정

- 이후 하반기 중 2~3곳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금융위 자체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

#### <금융연구원('15.04.15~04.23)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input type="checkbox"/> 직원 업무시간 산정 부적정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복무규정에 1일 총 업무 시간 및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li> </ul>	완료
<input type="checkbox"/>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필요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목고 및 특수계열 대학 재학 직원 자녀 등의 등록금 지원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할 것</li> </ul>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관련 (통보)</p> <p>○ 자가운전보조비 지원 대상자에 대해 사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별도의 지원 근거 없이 직원 등에게만 지원하는 정기주차권 지급체계를 개선할 것</p>	완료
<p><input type="checkbox"/> 지출예산 편성방법 부적정 (통보)</p> <p>○ 현행 단순한 비목별 지출예산 편성방법을 지양하고 부서별, 사업별 구분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기관별, 부서별, 사업별 성과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p>	완료
<p><input type="checkbox"/> 섭외성경비 집행 관련 (통보)</p> <p>○ 향후, 법인카드의 클린카드 예외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섭외성 경비’는 규정에 맞게 회계처리 할 것</p>	완료
<p><input type="checkbox"/> 학회 및 연구단체 찬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p> <p>○ 향후 명확한 지원기준이나 목적없이 학회 등에 임의로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동 사업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할 것</p>	완료
<p><input type="checkbox"/> 정기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통보)</p> <p>○ 우편발송 무료배부 간행물에 대해 수신자의 수신의사를 주기적 확인 및 간행물의 대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예산 절약과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p>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p>□ 퇴직금제도 운용 부적정 (통보)</p> <p>○ 향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 대한 내부규정을 신설하고, 퇴직급여 관련 회계처리방법을 개선하여 관련 회계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p>	완료
<p>□ 예산,회계 규정 정비 필요 (통보)</p> <p>○ 고유목적사업회계에서의 유형자산 관련 회계업무 처리방법에 대한 내부규정을 신설하는 등 예산·회계 규정을 정비할 것</p>	완료
<p>□ 연도별 사업계획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통보)</p> <p>○ 장기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과제추진, 연구성과 활용 등 과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시행할 것</p>	완료
<p>□ 위탁 연구용역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p> <p>○ 향후, 위탁 연구용역사업 수행시 계약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탁 연구용역사업의 계획 및 집행, 사후 활용방안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할 것</p>	완료

## VI.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현황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은 1개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은 8개

### 가. 공공기관이 아닌 산하기관

#### ①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

- 금융회사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에 의한 금융회사 감독,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및 회계감리
-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나. 공공기관인 산하기관

#### ① 『공기업』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없음

#### ②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5개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 미약 기업이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업무 수행
-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등의 업무 수행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통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의 업무 수행

③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3개

-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공급 등의 업무 수행
-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업무 수행
-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 등을 집중예탁하고 결제하는 등 증권 시장 지원업무 수행

\* ‘공공기관’은 설립근거, 재정지원(출자·출연·보조), 권한·기능위탁 등의 여부에 따라 지정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분류	지정요건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공기업	자체수입 50% 이상 직원 50인 이상	0	-
준정부기관	자체수입 50% 미만 직원 50인 이상	5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3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소 계		8	

## VII. 2015년도 민원처리사항

□ 2015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 유형별 · 권역별 접수 · 처리 현황]

□ '15.1.1.~'15.8월말까지 총 2,133건의 민원 접수 · 처리

< 민원유형별 접수 · 처리 현황 >

(‘15.8월말 기준)

구 분	법령질의	제도개선 건의	일반질의 및 진정	총 계
건 수 (비중)	443건 (20.7%)	309건 (14.5%)	1,381건 (64.8%)	2,133건 (100%)

< 금융권역별 접수 · 처리 현황 >

(‘15.8월말 기준)

구분	금융 정책	은행	보험	자본	중소	서민	기타	총계
건 수 (비중)	181 (8.5%)	131 (6.1%)	75 (3.5%)	127 (5.9%)	200 (9.4%)	439 (20.6%)	980 (46%)	2,133건 (100%)

[민원 유형별 특성]

□ 서민금융지원 및 개인 신용회복 방법 등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 접수민원 중 가장 높은 비중(20.6%)

- 대부업법 · 여신전문업법과 관련된 법령질의 등이 다수 비중을 차지
- 기타 안심전환대출 제도개선 및 개인 · 기업의 자금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민원 등이 접수

## VIII.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 1

## 시행령의 제정·개정·폐지

시행령명	분류	공포일자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15.1.6	벤처기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및 투자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 및 금융위원회 인력 2명(5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15.1.6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 등이 지배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장내 파생상품 외에 장외파생상품을 취급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추가하여 지배 구조의 자율성과 수익성제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15.2.2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적립금 등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구분하여 각각 5천만원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등에 가입한 사람의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15.4.14	착오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이체 시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를 지연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 부문 보안업무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

시 행 령 명	분류	공포 일자	주 요 내 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5.4.7	집합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갖춘 때에는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기초자산의 지수 등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에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를 허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15.7.20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법률 제13068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과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15.7.20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3067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과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범위·대출한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시 행 령 명	분류	공포 일자	주 요 내 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	'15.7.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개정(법률 제13065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신용 보증의 대상이 되는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범위와 신용보증 업무를 취급하는 관리기관의 같은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한 보증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15.8.11	신용보증대상인 주택사업자의 범위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신탁업자와 그 대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추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개인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10억원까지, 법인인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500억원까지로 각각 확대



## 2

##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분류	공포 일자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15.1.1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006호, 2015.01.06. 시행)됨에 따라, 증원 및 감축되는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5.1.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제외되는 범위를 기업의 인수·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와 관련한 6개월 이내의 신용공여에서 1년 이내의 신용공여로 확대하여 시장에서 자율적인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15.4.3	금융회사 등이 신보·기보에 매월 출연하는 출연금 산정 시 금융회사 등이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출을 통하여 지원한 정도,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의 조성에 기여한 정도 등 금융회사 등에 대한 평가요소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이 창업 기업, 혁신형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마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15.4.3	

## IX.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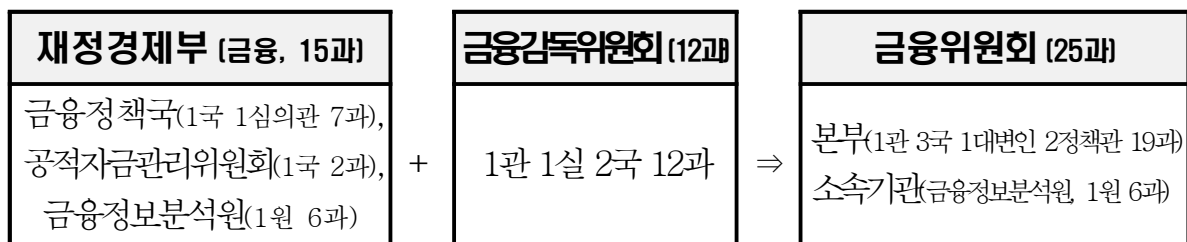
## 목 차

I. 일반 현황 .....	210
II.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 현황 .....	214
1. 금융시장 동향 .....	214
2. 금융산업 현황 .....	216
III. 정기국회내 제·개정 필요 주요법률 현황 .....	221
IV. 주요 통계 .....	231

## I. 일반 현황

###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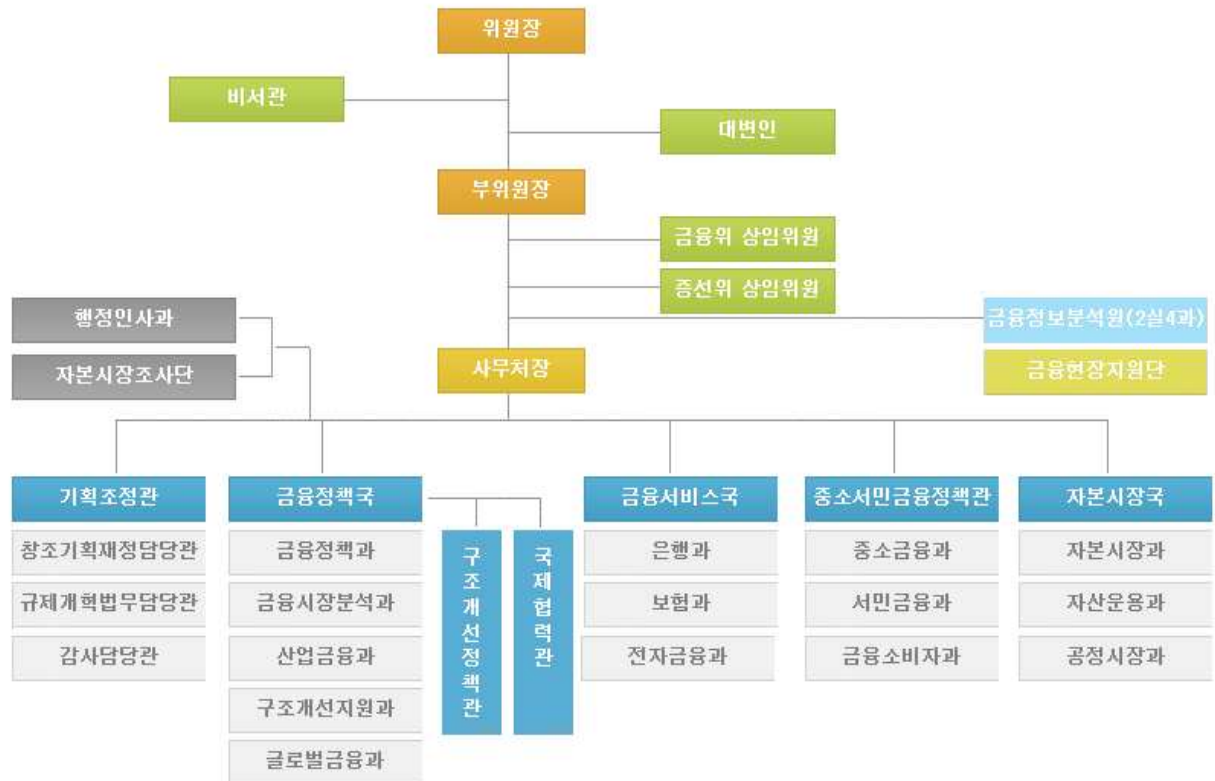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2정책관 19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 4 인원 및 예산

□ 정원 : 255명('15.9월 현재)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계
합 계	2	242	3	8	255
본부	2	191	3	-	196
금융정보분석원	-	51	-	8	59

□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217억원, 세출예산 1조 2,203억원 ('15년도)

**참고****2016년도 예산(안) 개요****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1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255억 3천만원으로 2015년 예산대비 2,038억 3천8백만원 증가(939.7%)

(단위 : 백만원)

구 분(항)	'15예산(A)	'16예산안(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21,692	225,530	203,838	939.7
과 태 료	3,025	4,743	1,718	56.8
과 징 금	18,121	20,225	2,104	11.6
가 산 금	94	110	16	17.0
기타경상이전수입	452	200,452	200,000	44,247.8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9,946억 5천8백만원으로 2015년 예산대비 7,743억 4천1백만원 증가(63.5%)

- 2016년 금융위원회 운영 예산(안)은 1,946억 5천8백만원으로 2015년 예산대비 256억 5천9백만원 감소(△11.6%)

\* 주요 사업 : 산은·기은 출자(설비투자펀드) 800억원, 산은·수은 출자(해운보증기구 설립) 200억원, FATF의장국 수임 22.8억원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15예산(A)	'16예산안(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1,220,317	1,994,658	774,341	63.5
□ 금융위원회 운영	220,317	194,658	△25,659	△11.6
○ 인 건 비	20,631	22,556	1,925	9.3
○ 기 본 경 비	7,067	7,204	137	1.9
○ 사 업 비	192,619	164,898	△27,721	△14.4
□ 내부 거래	1,000,000	1,800,000	800,000	80.0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1,000,000	1,800,000	800,000	80.0

## Ⅱ.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 현황

### 1 금융시장 동향

#### 가. 국제 금융시장

◇ 국제금융시장은 연내 美 금리인상 전망, 中 성장둔화 우려, 원자재價 하락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으로 변동성 확대

□ (주가) 글로벌 증시는 中 증시불안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8월 이후 하락세

	14말	15.5말	6말	7말	8말	9.8일	8월말비	전년말비
미국	17,823.1	18,010.7	17,619.5	17,689.9	16,528.0	16,102.4	△2.58%	△9.65%
일본	17,450.8	20,563.2	20,235.7	20,585.2	18,890.5	17,427.1	△7.75%	△0.14%
독일	9,805.6	11,413.8	10,945.0	11,309.0	10,259.5	10,271.4	+0.12%	+4.75%
중국	3,234.7	4,611.7	4,277.2	3,663.7	3,206.0	3,170.5	△1.11%	△1.99%

□ (환율) 달러화는 美 금리인상 전망,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전반적 강세기조

	14말	15.5말	6말	7말	8말	9.8일	8월말비	전년말비
달러/유로	1.2098	1.0987	1.1147	1.0984	1.1211	1.1202	△0.08%	△7.41%
엔/달러	119.68	124.14	122.50	123.90	121.23	119.81	△1.17%	+0.11%
위안/달러	6.2052	6.2004	6.2081	6.2077	6.3759	6.3649	△0.17%	+2.57%
달러인덱스	90.27	96.91	95.49	97.34	95.82	95.99	+0.17%	+6.33%

□ (금리) 주요국 국채금리는 中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 등으로 하락

(10y, %)	14말	15.5말	6말	7말	8말	9.8일	8월말비	전년말비
미국	2.17	2.30	2.12	2.35	2.22	2.18	△4bp	+1bp
일본	0.33	0.34	0.39	0.46	0.38	0.36	△3bp	+3bp
독일	0.54	0.49	0.76	0.64	0.80	0.68	△12bp	+14bp
중국	3.63	3.58	3.60	3.50	3.34	3.34	+0bp	△29bp

□ (유가) 국제유가는 中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위축,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급락

(\$/배럴)	14말	15.5말	6말	7말	8말	9.8일	8월말비	전년말비
WTI	53.3	60.3	59.5	47.1	49.2	45.9	△6.7%	△13.9%
Dubai	53.9	61.4	60.9	53.1	48.2	47.0	△2.5%	△12.8%



## 나. 국내 금융시장

◇ 국내 금융시장은 中 증시하락, 美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악재의 영향으로 주식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 (주가) 주가지수는 中 성장둔화 우려에 따른 中 증시하락 등으로 하락

	14말	15.5말	6말	7말	8말	9.8일	8월말비	전년말비
KOSPI	1915.6	2,114.8	2,074.2	2,030.2	1,941.5	1,878.7	△3.2%	△1.9%
KOSDAQ	543.0	711.4	742.3	725.1	687.1	638.2	△7.1%	+17.5%

□ (환율) 원화는 美 금리인상 가능성, 中 불안에 따른 신흥국 통화가치 약세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 대비 약세

	14말	15.5말	6말	7말	8말	9.8일	8월말비	전년말비
원/달러	1,099.3	1,108.2	1,115.5	1,170.0	1,182.5	1,200.9	+1.6%	+9.2%
원/100엔	920.1	892.7	910.6	944.3	975.4	1,002.3	+2.8%	+8.9%

□ (금리) 국내 채권금리는 2차례 기준금리 인하(3.12일 25bp ↓, 6.11일 25bp ↓), 안전자산 선호심리 등으로 하락세

(%)	14말	15.5말	6말	7말	8말	9.8일	8월말비	전년말비
국고채(3년)	2.10	1.88	1.77	1.78	1.74	1.67	△7bp	△43bp
국고채(10년)	2.60	2.31	2.45	2.43	2.30	2.23	△7bp	△37bp
회사채(AA-,3년)	2.43	2.12	2.01	2.00	1.99	1.95	△4bp	△48bp
장단기스프레드	50bp	43bp	68bp	65bp	56bp	56bp	0bp	+6bp
신용스프레드	33bp	24bp	24bp	22bp	25bp	28bp	+3bp	△5bp

□ (외국인) 외국인 증권투자는 中 증시하락, 美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글로벌 자산재조정 등으로 6월 이후 순유출

(조원)	'14년	'15년 (1~9월)	1~5월	6월	7월	8월	9월
주식 순매수	6.3	1.6	8.7	△0.4	△2.3	△3.9	△0.9
채권 순투자	5.2	2.0	5.4	△0.6	△2.6	△0.2	△0.2

## 2

## 금융산업 현황

## 개 황

□ 2015년 6월 현재 1,291개\* 금융기관이 영업중이며,  
총자산은 3,972조원 수준

\* 금융위원회 감독대상 기준이며, 상호금융·새마을금고·대부업체 등은 미포함

(‘15.6월말 기준, 단위 : 개, 명, 조원)

	업체수	점포수 <sup>1)</sup>	종사자수 <sup>2)</sup>	자기자본	총자산
은행	18	7,480	117,539	174.5	2,398.90
일반	13	5,412	31,905	105.3	1,558.10
특수	5	2,068	85,634	69.2	840.8
증권	56	1,262	36,129	43.6	366.3
선물	7	7	479	0.4	3.4
자산운용	87	125	5,019	3.9	4.9
보험	57	7,023	60,316	89.4	904.4
생명	25	3,914	27,538	61.2	691
손해	32	3,109	32,778	28.2	213.4
종합금융	1	4	88	0.1	1.2
저축은행	79	329	8,294	4.6	40.2
신용협동조합	913	0	17,505	5.5	63
여신전문	73	871	18,959	39.4	189.7
신용카드	8	415	11,087	24.2	92.3
합계	1,291	17,101	264,328	361.4	3,972.0

1)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해외사무소 포함

2) 해외직원 포함, 직원외 인력 제외

3) 조합수 기준

## 은 행

□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 건전성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5.6말 현재 BIS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최저기준 8%)은 14.08%로 해외 우수은행과 비교하여서도 양호한 수준

\* 국내은행은 '13.12월부터 바젤 III를 적용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대의 우량한 자본비율 수준을 유지

### < 국내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

	'08.12말	'09.12말	'10.12말	'11.12말	'12.12말	'13.12말	'14.12말	'15.6말
BIS 비율	12.31	14.36	14.55	13.96	14.30	14.53	14.00	14.08

○ '15.6말 현재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은 1.50%로 전년말(1.55%) 대비 소폭 하락

\* 저금리 지속에 따른 가계 상환부담 완화, 은행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노력 등으로 낮은 수준 유지

- 대손충당금적립률(대손충당금/부실채권)도 127.5%로 손실 흡수능력도 양호

### < 국내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

	'08.12말	'09.12말	'10.12말	'11.12말	'12.12말	'13.12말	'14.12말	'15.6말
부실채권비율	1.14	1.24	1.90	1.36	1.33	1.79	1.55	1.50
대손충당금 적립률	143.0	137.0	108.5	152.1	159.0	120.5	124.0	127.5

□ '15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3조원으로 전년 동기(3.7조원) 대비 16.2%(0.6조원) 증가하여 수익성 다소 개선

\* 순이자마진(NIM) 축소 등으로 이자이익은 감소하였으나,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 비이자이익이 증가

### <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조원, %) >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상반기	상반기
당기순이익	6.9	9.3	11.8	8.7	3.9	6.0	4.3
ROA	0.39	0.54	0.66	0.47	0.21	0.31	0.42

## 보 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장 등을 통한 자본확충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

○ '15.6월말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  
[가용자본/요구자본]은 278.2%로 최저기준(100%)을 상회

### <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

구 분	'10.3말	'11.3말	'12.3말	'13.3말	'14.3말	'14.12말	'15.6말
생명보험	271.1	276.7	311.2	317.5	286.2	310.4	291.9
손해보험	303.2	306.1	289.1	284.9	261.1	256.3	250.9
계	279.8	284.7	304.3	307.8	278.4	292.3	278.2

○ '15.6월말 부실채권비율은 0.37%로 지속 하락하는 추세

### <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 >

구 분	'10.3말	'11.3말	'12.3말	'13.3말	'14.3말	'14.12말	'15.6말
생명보험	1.95	1.12	1.00	0.70	0.49	0.37	0.28
손해보험	0.80	1.25	1.28	1.21	0.92	0.77	0.58
계	1.74	1.15	1.06	0.83	0.61	0.48	0.37

○ 다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따른 잠재리스크 상존

□ 금년 상반기 중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4.5조원(생보사 2.8조원,  
손보사 1.7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원 증가

\* '14년 상반기 당기순이익: 3.4조원(생보사 2.0조원, 손보사 1.4조원)

○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평가이익 실현과 운용자산 확대에  
따른 투자영업이익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조원) >

구 분	FY'09	FY'10	FY'11	FY'12	FY'13	FY'14	FY'15.6
생명보험	2.5	4.0	3.4	3.2	2.1	3.3	2.8
손해보험	1.5	2.0	2.4	2.4	1.5	2.3	1.7
계	4.0	6.0	5.8	5.6	3.6	5.6	4.5

## 금융투자업

- **(증권사)** '15.6월말 현재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2.2조원으로 전년도 당기순이익(1.7조원)을 상회, 장기침체에서 벗어난 모습
  -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407%로 지도 비율(150%)을 큰 폭으로 상회

### < 증권산업 주요 경영지표 >

구 분	FY'11 ( '12.3말)	FY'12 ( '13.3말)	FY'13 ( '13.12말)	FY'14 ( '14.12말)	FY'15.2Q ( '15.6말)
당기순이익(조원)	2.2	1.2	△0.2	1.7	2.2
ROE(%)	5.6	3.0	△0.5	4.1	(연 환산) 5.5
영업용순자본비율(%)	605	506	477	437	407

$$* \text{NCR} = \frac{\text{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 - 비유동성 자산 등 차감 + 후순위차입금 등 가산)}}{\text{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 \times 100$$

\*\* 증권사는 '14년부터 결산시점이 기존 3월에서 12월로 변경

- **(자산운용사)** '15.6월말 현재 총 펀드 수탁고(NAV)는 418조원으로 기관의 사모펀드 투자 증가 등으로 운용규모가 확대
  - 주식형펀드의 부진, 보수율 하락 등의 악화된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탁고 증가에 따라 수익성 개선 추세
  - 시중 저금리 및 증시하락 등의 영향으로 단기성 투자대기 자금인 MMF 수탁고가 증가하며 100조원을 돌파

### < 자산운용산업 주요 경영지표 >

구 분	FY'11 ( '12.12말)	FY'12 ( '13.12말)	FY'13 ( '13.12말)	FY'14 ( '14.12말)	FY'15.2Q ( '15.6말)
펀드 수탁고(조원)	306.1	325.0	346.6	382.0	417.8
당기순이익(억원)	3,227	3,278	3,303	4,248	2,428

## 중소금융

- **(신용카드사)**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정자기 자본비율 및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소폭 개선

### < 신용카드사 주요 경영지표 >

	'11말	'12말	'13말	'14말	'15.6말
신용카드사 수	7	7	8	8	8
총자산(조원)	81.8	82.4	86.5	92.2	92.3
당기순익(억원)	15,232	13,056	17,002	21,696	10,971
조정자기자본비율(%)	25.6	25.8	27.8	27.3	27.8
연체율(%)	2.2	1.9	1.8	1.7	1.6

- **(저축은행)** '08년 이후 지속된 적자가 7년만에 연간기준 흑자 전환(14회계년도 : +5,008억원)하는 등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

### < 저축은행 주요 경영지표 >

	'11.6말*	'12.6말*	'13.6말*	'14.6말*	'15.6말*
저축은행 수	98	93	91	87	79
총자산(조원)	69.8	50.6	42.8	36.8	40.2
당기순익(억원)	△27,777	△16,590	△11,252	△5,089	5,008
BIS 비율(%)	5.6	7.4	9.9	14.3	14.6
연체율(%)	15.5	21.3	21.3	17.6	11.5

\* 저축은행 법규상 6월말 결산이므로 6월말 기준치

- **(신 협)**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들어 연체율,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지표는 전년말 대비 소폭 개선

### < 신용협동조합 주요 경영지표 >

	'11말	'12말	'13말	'14말	'15.6말
신협 수	955	949	942	920	913
총자산(조원)	49.6	55.3	56.7	60.5	63.0
수신(조원)	43.3	48.8	50.2	53.6	56.0
여신(조원)	30.8	32.1	33.8	37.9	39.9
당기순익(억원)	2,920	1,731	1,317	1,896	902
연체율(%)	6.0	6.4	5.4	3.8	3.3
순자본비율(%)	3.8	3.6	3.5	3.9	3.9

### III. 정기국회내 제·개정 필요 주요법률 현황

법률안명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법 (‘12.7.6, 정부안)	<p>&lt;입법 필요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동양사태 등과 같은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입법 필요</li> </ul> <p>&lt;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상품 소비의 쉼단계(사전 정보제공-상품판매-사후 피해구제)를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본법 체계 구축</li> <li>○ 금융상품 판매시 적용되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제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등</li> </ul> </li> <li>○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li> </ul>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13.8.27, 박대동 의원안)	<p>&lt;입법 필요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로 연간 3.4조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1인당 연간 7만원, 가구당 20만원 수준</li> </ul> </li> <li>○ 살인·상해 등 강력범죄와 결부되어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고려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적으로 대응을 강화할 필요</li> </ul> <p>&lt;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죄 신설 및 형사처벌 강화</li> <li>○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인지보고 의무, 보험사기죄 법원 확정시 보험금 청구권 소멸 등</li> </ul>

법률안명	주요내용
<p>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3.10.28, 강석훈 의원안)</p>	<p>&lt;입법 필요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방지 및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li> </ul> <p>&lt;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감독기구로서 “금융 소비자보호원”을 신설</li> <li>- 금융회사의 부당영업행위 감독, 금융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li> </ul>
<p>신용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4.6.20, 박대동 의원안)</p>	<p>&lt;입법 필요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신용 조회업의 도입 근거를 마련할 필요</li> </ul> <p>&lt;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업의 종류에 현재의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등 외에 기술신용조회업을 추가</li> <li>- 특허·회계법인, 기술평가기관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 기술신용조회업에 한하여 영업허가</li> </ul>



법률안명	주요내용
<p>휴면예금 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4.12.29, 정부안)</p> <p>※ 「서민의 금 융 생 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명 개정</p>	<p>&lt;입법 필요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취약계층별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One-stop 지원 체계’ 구축 관련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 필요</li> </ul> <p>&lt;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 지원할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보증, 채무조정 지원, 종합상담·교육·알선 등</li> </ul> </li> <li>○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의 신용회복협약 체결 확대, 신복위 지배구조 개편 등</li> </ul> </li> </ul>
<p>한국주택 금융공사법 (“15.3.4, 이운룡 의원안)</p>	<p>&lt;입법 필요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연금 가입희망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및 불필요한 가입비용 절감</li> <li>○ 가계부채 구조개선 지속 추진, 주택금융 업무의 안정적 수행 등을 위하여 법정자본금 상향 필요</li> </ul> <p>&lt;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만 60세 이상)을 “주택 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완화</li> <li>○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li> </ul>

법률안명	주요내용
<p>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15.5.11, 정우택 의원안)</p>	<p>&lt;입법 필요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촉진법이 연말 실효 예정</li> </ul> <p>→ 심화되는 경제위기에 적시에 대응하고 워크아웃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필요</p> <p>&lt;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자·채무자 형평성 제고, 기업 권리 보호 강화, 관치금융 오해 해소 등을 통해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 제기되던 각종 법률적·실무적 문제 해소</li> </ul>
<p>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5.6.9, 신동우 의원안)</p>	<p>&lt;입법 필요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30%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서민층에 대해 대출부담 경감 도모</li> <li>○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기구인 대부업협회에 대한 감독공백 해소</li> </ul> <p>&lt;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법정 최고 금리를 5%p 인하(연 34.9% → 연 29.9%)</li> <li>○ 대부업협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감독·검사(금융위, 금감원 수행)근거를 마련</li> </ul>

법률안명	주요내용
<p>은행법 (‘15.7.3, 신동우 의원안)</p>	<p>&lt;입법 필요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li> </ul> <p>&lt;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전문은행 정의 조항 신설</li> <li>○ 인터넷전문은행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으로 규정</li> <li>○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예외적으로 완화(4%이내 → 50%이내)</li> </ul>
<p>전자금융 거래법 (‘15.7.7, 신동우 의원안)</p>	<p>&lt;입법 필요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적 핀테크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고 핀테크 서비스 출현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진입 규제 개선 필요</li> </ul> <p>&lt;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을 소규모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 요건 완화</li> <li>○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상호약정 시 비금융회사도 이용자 손해에 대한 연대 책임 부담</li> </ul>

법률안명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p>[이진복의원안, '15.9.3]</p> <p>&lt;입법 필요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해 거래소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구축</li> <li>○ 시장간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시장감시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거래소의 기능을 선진화</li> <li>○ 법 개정 후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IPO를 추진하는 등 거래소 구조개혁을 단행할 계획</li> </ul> <p>&lt;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소를 지배하는 거래소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li> <li>○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시장감시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상장거래소의 경우 시감기능 위탁을 의무화</li> </ul>
	<p>[김종훈 의원안, '14.2.4]</p> <p>&lt;입법 필요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li> <li>○ M&amp;A 증권사에 대한 IB진입 인센티브를 통해 증권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li> </ul> <p>&lt;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및 보고제도 개선</li> <li>○ M&amp;A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 완화</li> </ul> <p>*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에서 2.5조원으로 완화</p>

## 참고1

##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구 분	법 률 명
금융정책 관련 (5)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기업금융 관련 (5)	·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구조개선 관련 (5)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글로벌금융 관련 (1)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 관련 (5)	· 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미련저축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보험 관련 (2)	·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 관련 (2)	·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중소서민금융 관련 (6)	·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 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관련 (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사채등록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회계 관련 (2)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금융정보분석원 (2)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계 (41)	

## 참고2

## '15년도 법률 제·개정 실적

법 률 명	분류	공포 일자	주 요 내 용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5.1.20	현행법의 체계 내에 VAN사를 포섭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의 신용정보보호 실태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15.1.20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15.1.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본점이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법 개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	'15.1.20	예비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귀농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상채권 매각근거 마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5.3.11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제고하고,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15.3.2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정책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목적과 자료제공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수집의 실효성을 제고

법 률 명	분 류	공포 일자	주 요 내 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15.7.2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클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 투자자 제도를 도입 등
보험업법	개정	'15.7.24	보험회사와 그 자회사 간의 신용 공여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보험회사와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여 이중 규제의 문제를 해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5.7.24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 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등록 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법 률 명	분류	공포 일자	주 요 내 용
			<p>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p> <p>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면서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p> <p>대부업자의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p>
공인회계사법	개정	'15.7.24	<p>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 회계사 1차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하므로 개선</p>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15.7.31	<p>이사회와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p>



## IV. 주요 통계

###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조원, 억달러)

		'11	'12	'13	'14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국 내 총 생 산	GDP 성장률 <sup>1)2)</sup>	3.7	2.3	2.9	3.3	2.5			2.2			-
	(금액, 조원)	(1,332.7)	(1,377.5)	(1,429.4)	(1,485.1)	(385.1)			(387.9)			-
	GNI 증가율 <sup>1)2)</sup>	1.6	2.7	3.7	3.8	7.1			5.8			-
		(금액, 조원)	(1,340.5)	(1,391.6)	(1,439.6)	(391.0)			(389.0)			-
실 물 동 향	생산지수 증가율 <sup>2)</sup>	6.0	1.4	0.7	0.1	1.6	△5.1	0.1	△2.7	△3.0	1.5	△3.5
	재고지수 증가율 <sup>2)</sup>	15.0	4.3	4.4	△1.8	0.2	2.9	2.8	3.0	3.5	6.0	4.8
	평균가동률	80.5	78.5	76.2	76.1	74.1	75.1	73.9	74.1	73.2	75.2	74.7
	소매판매 증가율 <sup>2)</sup>	4.5	2.5	0.7	1.7	△2.8	5.3	2.8	4.9	3.1	0.6	1.9
	설비투자 증가율 <sup>2)</sup>	4.7	0.1	△0.8	5.8	0.2			0.4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	-		102.5	103.1	103.8	103.7	104	103.5	103.5
물 가 · 고 용	소비자 물가	4.0	2.2	1.3	1.3	0.5	0.0	0.0	0.1	0.3	0.0	0.2
	근원인플레이션율	3.2	1.6	1.6	2.0	0.9	0.1	0.2	0.1	0.3	0.0	0.2
	실업자수(천명)	855	820	807	937	988	1,203	1,076	1,053	1,022	1,050	998
	(실업률)	(3.4)	(3.2)	(3.1)	(3.5)	(3.8)	(4.6)	(4.0)	(3.9)	(3.8)	(3.9)	(3.7)
대 외 거 래	경상수지(억달러)	186.6	508.4	811.5	892.2	65.8	64.4	104.3	81.4	86.2	121.1	101.1
	(상품수지)	290.9	494.1	805.7	926.9	66.9	73.2	112.5	125.6	91.6	131.4	108.6
	(서비스수지)	△122.8	△52.1	△79.3	△81.6	△23.8	△20.6	△9.7	△11.3	△4.0	△25.0	△19.2
	자본·금융계정	△244.3	△516.2	△769.1	△904.1	△82.5	△55.4	△110.3	△100.7	△88.1	△105.1	△106.7
	(자본수지)	△1.1	△0.4	△0.3	△0.3	△0.1	0.0	△0.1	△0.1	0.0	△0.2	△0.3
	(금융계정)	△243.2	△515.8	△801.0	△903.8	△82.4	△55.4	△110.2	△100.6	△88.1	△104.9	△106.4
	- 직접투자	△199.3	△211.4	△169.5	△206.6	△10.0	△19.9	△23.9	△19.7	△12.0	△49.9	△1.2
	- 증권투자	131.4	67.5	△82.9	△336.1	△36.2	△30.0	△12.1	△1.4	△3.6	△65.0	△71.5
	- 파생상품	△10.3	26.3	38.4	37.0	△0.8	0.3	0.9	3.0	4.0	△2.4	△9.6
	- 기타투자	△25.4	△266.4	△410.0	△219.4	4.9	△3.7	△46.2	△48.5	△47.6	△22.4	△33.8

주: 1) 실질 GDP(금액: 명목), 실질 GNI 2) 전년동기비

## 2. 주식시장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15년		
						6말	7말	8말
KOSPI	2,051.0 (21.9)	1,825.7 (△11.0)	1,997.1 (9.4)	2,011.34 (0.7)	1,915.59 (△4.8)	2,074.20 (8.3)	2,030.16 (6.0)	1,941.49 (1.4)
KOSDAQ	510.7 (△0.6)	500.2 (△2.1)	496.3 (△0.8)	500.0 (0.7)	542.97 (8.6)	742.27 (36.7)	725.06 (33.5)	687.11 (26.5)
미 국 (DOW)	11,578 (11.0)	12,218 (5.5)	13,104 (7.3)	16,577 (26.5)	17,823 (26.5)	17,620 (△0.1)	17,690 (△0.8)	16,528 (△7.3)
일 본 (NIKKEI)	10,229 (△3.0)	8,455 (△17.3)	10,395 (22.9)	16,291 (56.7)	17,451 (56.7)	20,236 (16.0)	20,585 (18.0)	18,891 (8.3)
중 국 (상해종합)	2,808 (△14.3)	2,199 (△21.7)	2,269 (3.2)	2,116 (△6.7)	3,235 (△6.7)	4,277 (32.2)	3,664 (13.3)	3,206 (△0.9)
영 국 (FTSE)	5,900 (9.0)	5,572 (△5.6)	5,898 (5.8)	6,749 (14.4)	6,566 (14.4)	6,521 (△0.7)	6,696 (2.0)	6,248 (△4.9)
인 도 (SENSEX)	20,509 (17.4)	15,455 (△24.6)	19,427 (25.7)	21,171 (9.0)	27,499 (9.0)	27,781 (1.0)	28,115 (2.2)	26,283 (△4.4)
홍 콩 (HS)	23,035 (5.3)	18,434 (△20.0)	22,657 (22.9)	23,306 (2.9)	23,605 (1.3)	26,250 (11.2)	24,636 (4.4)	21,671 (△8.2)
시가총액 (조원)	1,239.9 (27.3)	1,148.0 (△7.4)	1,263.4 (10.1)	1,305.3 (3.3)	1,335.3 (2.3)	1,496.1 (12.0)	1,468.0 (9.9)	1,403.8 (5.1)
고객예탁금 (조원)	13.7 (16.1)	17.4 (27.0)	17.1 (△1.7)	13.9 (△18.7)	16.1 (15.8)	21.7 (34.8)	20.8 (29.2)	20.9 (29.8)
주식형펀드 (조원)	101.0 (△20.0)	104.2 (3.2)	94.6 (△9.2)	85.5 (△9.6)	79.3 (△7.3)	76.5 (△3.5)	77.7 (△2.0)	79.8 (0.6)
(국내 펀드)	61.1 (△19.0)	72.7 (19.0)	68.5 (△5.8)	65.8 (△3.9)	63.4 (△3.6)	59.2 (△6.6)	60.3 (△4.9)	62.2 (△1.9)
(해 외 펀드)	39.9 (△21.5)	31.5 (△21.1)	26.1 (△17.1)	19.7 (△24.5)	15.9 (△19.3)	17.3 (8.8)	17.4 (9.4)	17.6 (10.7)
외국인순매수 <sup>1)</sup> (십억원)	22,599	△9,422	17,522	5,213	5,867	8,221	6,288	1,993
기관순매수 <sup>1)</sup> (십억원)	△13,436	13,241	3,630	4,801	△898	△8,191	△8,844	△5,692
개인순매수 <sup>1)</sup> (십억원)	△3,680	△1,106	△14,358	△6,260	△2,560	960	4,104	4,524
신용거래잔액 (십억원)	6,124	4,599	4,002	4,258	5,181	7,729	7,973	6,559
(신용융자잔액)	5,936	4,413	3,881	4,165	5,061	7,596	7,793	6,418
(미수거래잔액)	188	186	121	93	120	133	180	141

주: 1) 연중 순매수액 2) ( )내는 전년말대비 변동률(%)

### 3. 주요 금리

(단위 : %)

	'11말	'12말	'13말	'14말	'15년			'14말대비
					6말	7말	8말	
미국 LIBOR(3Mo)	0.58	0.31	0.25	0.26	0.28	0.31	0.33	+7 bp
미국 T/Bill(3Mo)	0.01	0.05	0.07	0.05	0.01	0.07	0.00	△5 bp
미국 T/N(5년)	0.83	0.72	1.74	1.65	1.65	1.53	1.55	△10 bp
미국 T/N(10년)	1.88	1.76	3.03	2.17	2.35	2.18	2.22	+5 bp
국고채(10년)	3.78	3.21	3.58	2.60	2.45	2.43	2.30	△30 bp
국고채(5년)	3.46	2.97	3.23	2.28	2.07	2.03	1.93	△36 bp
국고채(3년)	3.34	2.82	2.86	2.10	1.79	1.77	1.74	△36 bp
은행채(3년,AAA)	3.74	3.04	3.14	2.28	1.93	1.89	1.85	△43 bp
회사채(3년,AA-)	4.21	3.29	3.29	2.43	2.01	2.01	1.99	△44 bp
회사채(3년,BBB-)	9.74	8.82	8.98	8.27	7.92	7.93	7.93	△35 bp
통안증권(2년)	3.50	2.82	2.81	2.10	1.72	1.68	1.67	△43 bp
통안증권(1년)	3.50	2.78	2.69	2.09	1.61	1.60	1.60	△48 bp
KORIBOR(1년)	3.71	2.96	2.78	2.18	1.67	1.62	1.65	△53 bp
통안증권(91일)	3.48	2.78	2.56	2.07	1.58	1.55	1.55	△52 bp
CD(91일)	3.55	2.89	2.66	2.13	1.65	1.64	1.63	△50 bp
CP(91일)	3.71	3.00	2.88	2.32	1.69	1.69	1.69	△63 bp
KORIBOR(3개월)	3.56	2.87	2.66	2.14	1.60	1.56	1.57	△57 bp
콜금리(익일물,전체)	3.29	2.77	2.47	2.04	1.49	1.49	1.51	△53 bp

### 4. 주요국 환율 변동

(단위 : 원)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15년		
						6말	7말	8말
₩ / US\$	1,134.8 (△2.6)	1,151.8 (1.5)	1,070.6 (△7.1)	1,055.40 (△1.4)	1,099.30 (+4.2)	1,115.50 (+1.5)	1,170.00 (+6.4)	1,182.50 (+7.6)
US\$ / EUR	1.3387 (△6.6)	1.2959 (△3.2)	1.3192 (1.8)	1.3743 (4.2)	1.2098 (△12.0)	1.1147 (△7.9)	1.0984 (△9.2)	1.1211 (△7.3)
JPY / US\$	81.16 (12.7)	76.90 (△5.2)	86.75 (12.8)	105.31 (21.4)	119.68 (13.6)	122.50 (+2.4)	123.90 (+3.5)	121.23 (+1.3)

주: ( )는 전년말대비 변동율(%)